

2018년도 역사와교육학회 · 역사교과서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제3차 교육과정과 국사교과서 서술

일시: 2018년 6월 23일(토) 13:00~18:00

장소: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주최: 역사와교육학회 · 역사교과서연구소

- 식 순 -

역사와교육학회 · 역사교과서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제3차 교육과정과 국사교과서 서술

- 일시 : 2018년 6월 23일(토) 13:00~18:00
- 장소 :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 주최 : 역사와교육학회, 역사교과서연구소

○ **개회 및 인사**

사회: 허은철(충신대학교)

제1발표 제3차 교육과정기 교육이념과 인간상

발표: 김한중(한국교원대학교)

토론: 박진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2발표 제3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과 국사교과서 개편

발표: 조성운(경기대학교)

토론: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중간휴식

사회: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제3발표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특징

발표: 이정빈(충북대학교)

토론: 정순일(고려대학교)

제4발표 제3차 교육과정 국정 고등국사의 편찬과 중세사 서술

발표: 황인규(동국대학교)

토론: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5발표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그 특징

발표: 한철호(동국대학교)

토론: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 **폐회 및 정리**

- 목 차 -

1. 제3차 교육과정기 교육이념과 인간상 1
 발표: 김한중(한국교원대학교)
 토론: 박진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제3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과 국사교과서 개편 13
 발표: 조성운(경기대학교)
 토론: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3.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특징 33
 발표: 이정빈(충북대학교)
 토론: 정순일(고려대학교)

4. 제3차 교육과정 국정 고등국사의 편찬과 중세사 서술 53
 발표: 황인규(동국대학교)
 토론: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그 특징 ... 87
 발표: 한철호(동국대학교)
 토론: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제3차 교육과정기 교육이념과 인간상

김한중(한국교원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이념의 개념과 인간상
 - III. 국가를 앞세우는 발전론적 교육이념과 인간상
 - IV. 교육이념의 내면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교육이념은 어떤 나라나 사회에서 교육이 지향하는 일반적인 방향을 뜻한다. 교육목표를 넘어서 교육정책이나 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교육이념이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의 틀을 세우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오천석은 교육이념의 특징을 포괄적, 보편적, 기본적, 일관적, 지속적, 긍정성으로 정리한다.¹⁾ 오천석이 말하는 교육이념은 교육행위 전체를 총괄하는 원리로, 이 원리는 교육활동 전체에 적용된다. 교육이념은 교육행위에 깔려있는 기초적인 사상으로 비교적 장기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달라진다. 그렇지만 실제 학교교육에서 교육이념의 영향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교육 관련 규정에 교육이념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만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사회교육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이 제시되어 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이 학교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반해 1960, 70년대 교육이념은 교과교육이건 교과 외 교육활동이건 간에 학교교육 전반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발표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 교육이념의 성격과, 그것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과정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진술되어 있다. 교육이념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교육과정의 진술을 통해, 한국의 교육이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교육적 인간상은 포괄적이고 추상적 목표에서 점차 구체적 진술로 바뀌는 경향을 띤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목표에 중점을 두다가 근래에는 개인적 차원의 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국가사회적, 교육외적 요구는 약화되고 교육 본질적 필요에 기초하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

1) 오천석, 『발전한국의 교육이념 탐구』, 광명출판사, 1975, 6~7쪽.

석한다.²⁾ 이런 분석이 타당한 지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과정에 깔려 있는 교육이념의 정치적 속성이 처음에는 강하였다고 점차 약화되었다는 의미겠지만, 교육 본질적 필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학교교육이나 그 방향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은 정치사회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적어도 학교교육의 이념이나 인간상을 교육과정 문서 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교육이념은 국가나 정부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판적 교육학의 눈으로 보면,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교육은 기존의 사회구조나 문화를 재생산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국가교육과정을 국가교육과정 문서만으로 분석하는 것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박정희 집권 후기로,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강하게 반영되던 제3차 교육과정기는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당시의 교육이념과 인간상의 논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쩌면 교육과정의 진술 자체보다도, 국가가 의도하는 목적이 교육과정에 어떤 식으로 진술되어 있는가 하는 관계가 교육이념과 목적을 잘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3차 교육과정기는 박정희 정부의 교육이념이 국가교육과정에 직접적이면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정치사회적 의도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교육활동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1960,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교육이념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다. 예컨대,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학교교육 전반에 내세우고 있으며, 역사교육을 통해 국난극복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 더구나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의 기본적 방향으로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이해하고 몸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제3차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교육헌장 이념이 무엇인지는 당시 문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발행한 책자나 이 논리를 뒷받침한 학자들에 의해 자세히 설명되었다. 『국민교육헌장독본』이나 『국민교육헌장해설』과 같은 보조교재들이 보급되었으며, <국민윤리> 등의 교과서에서도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 제3차 교육과정기에 어떤 교육이념을 내세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보다는 교육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며,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했던 인간상이 학교교육에 어떻게 구체화되었으며 보고자 한다.

II.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이념의 개념과 인간상

교육과정 문서가 정치권력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학교교육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구현하려는 사회의 모습과 인간상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3차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이념과 인간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자.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간상’에다가 ‘교육적’이라는 말을 붙여 ‘교육적 인간

2) 양은주·조경원·임현식, 「한국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정연구』19, 2000, 52쪽.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나 사회가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적 인간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 원리로 기능한다. 그러기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적 인간상은 개정의 당위성이나 방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제시된다.³⁾ 즉, 교육과정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 인간상이다. 그러기에 국가교육과정의 첫머리에는 으레 당시 세계와 한국사회의 성격 및, 이에 비추어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서술한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국민적 자질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제시한다.

(1)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민족사의 정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인 자각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정신을 기른다.

(2)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즐거우게 이어 온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유용한 외래문화를 섭취 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한다.

(3)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민주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되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은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국가교육과정은 보통 교육적 인간상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총론에서 진술한 교육적 인간상은 각 교과목의 목표 진술까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⁴⁾ 그렇지만 이런 분석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는, 학교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이 위상이나 학교교육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교육이념이나 교육적 인간상이 각 교과목의 목표나 내용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각론, 즉 교과가 지향하는 서술 때문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교육과정 진술이 교과의 특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교과의 어떤 성격이 들어가 있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와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된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국사> 목표)

(가)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시키고,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문화 민족의 후예로서의 자량을 깊이 하게 한다.

(나) 우리 민족사의 각 시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시키고, 현재적 관점에서 이를 살필 수 있게 하여 민족사의 특색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게 한다.

(다) 우리 민족사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우리 민족사의 특징을 찾도록 한다.

(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창조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이해시키고,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에 힘쓰려는 태도를 기른다.

(마)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민족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체계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박창언·박상욱,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국가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 『민족사상』 8(3), 2014, 172쪽.

4) 양은주·조경원·임현식, 앞의 글 「한국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52쪽.

(고등학교 <국사> 목표)

- (가)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 (나)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 체제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식시켜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라) 전통 문화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여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자세와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마)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국사교육의 목표에는 ‘민족’, ‘문화’, ‘발전’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사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아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국사교육의 목표이다. 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과목의 목표는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라)의 목표는 민족사의 성격 파악, 민족사와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 함양, 외래문화의 선택적 수용 등으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고등학교 목표 (마)는 중학교 목표에 비해 ‘당면한 국가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차이는 고등학생 단계가 되면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이를 사회에서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은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의 목표는 교육이념과 인지발달을 고려한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반공교육 이념을 잘 보여주는 교련 과목을 고등학교부터 편성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는 당시 유행하던 교육학적 교수방법론을 반영하고 있다. 중학교 목표 (마)에서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 체계화하는”이나 고등학교 목표 (마)의 ‘문제해결’이라는 말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탐구와 구조를 연상시킨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교육적 원리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내세웠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의 구조와 지식의 체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교수학적 원리로 탐구를 내세운다. 미국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탐구학습이 1950년대 말 시작하여 1960년대 유행했지만, 한국에서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전파하고 교육적 인간상을 기르는 방법으로 학문의 구조와 지식체계를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1972년 설립되어 교육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초기에 탐구학습을 소개하고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인 것도 이런 취지이다. 그렇지만 교과 교육과정이나 교실수업 현장에서 학문의 구조와 탐구라는 교수법적 방법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Ⅲ. 국가를 앞세우는 발전론적 교육이념과 인간상

1. 국가, 사회, 개인의 일체화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반공’과 더불어 ‘근대화’이다. 근대화는 곧 나라의 발전이다. 박정희는 모든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나라의 발전에서 찾는 발전국가론을 내세웠다. 박정희가 즐겨 내세우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도 발전주의에 규정되는 것이었다. ‘민족중흥’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은 발전된 민족일 때 의미가 있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도 발전을 위해 생산성이 낮은 불필요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였다.⁵⁾

국가 정책은 물론 사회현상을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0~70년대 교육이념을 검토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당시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이념의 본질을 ‘발전론적 교육이념’으로 규정한다. 박정희 정부뿐 아니라 많은 교육학자들도 교육을 인간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인용한 오천석의 글에서는 교육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의 조그만 공장이나 농원을 차려 놓은 사업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일은 거기서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다. 교육을 이러한 제조업에 비교한다는 것은 반드시 적당한 것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바람직하게 달성되느냐 하는 것이다. 공장주가 바라는 것은 제조과정을 통하여 그가 기대하는 제품이 제작되느냐 하는 것이요, 농장주의 관심이 그의 노력의 결과로 그의 예상에 어그러지지 않는 물산이 생산되느냐 하는데 있음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국가도 자연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피교육자의 질적 문제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그가 끼치는 영향의 크고 작음에 있을 뿐이다. 교육의 결과가 부실할 경우, 그 영향이 개인 일생에 관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인류의 운명에 결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⁶⁾

교육을 통한 발전에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모두 포함된다.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교육이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발전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느냐 국가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인용문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병렬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발전한국’이라는 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국가 발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교육론에서는 국가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개인의 발전을 국가 발전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박정희 정부에서 학교교육의 필요성은 나라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에 있었다. 경제성장으로 대변되는 국가 발전을 위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한 교육의 방향은 경제 성장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의 육성과, 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함양이라는 두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전자가 과학교육과 실업교육, 경제교육, 특히 실업교육의 강화로 나타났다면, 후자는 담당하는 것은 국어와 국사, 도덕 등 인문사회 과목의 몫이었다. 1960년대 전반 경제 지식의 습득이나 효율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기르던 교육은,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국민정신을 상대적으로 더

5) 황병주,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 담론」, 『역사문제연구』15, 2005, 166~167쪽.

6) 오천석, 앞의 책 『발전한국의 교육이념 탐구』, 3~4쪽.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제2경제론’을 내세우고,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었다.⁷⁾ 집권 초기 근대화를 위한 경제성장의 물적 기반을 강조하던 박정희는 1967년 선거로 두 번째 집권을 한 다음에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정희의 근대화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경제성장 정책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물질을 송상하는 풍조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경제성장뿐 아니라 올바른 국민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기에 국민교육헌장은 온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는 명분으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국회 동의를 절차를 거쳤으며, 그것도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민교육헌장에서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윤리를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로 구분한다.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정체성,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진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나 개인적 정체성은 다를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적 정체성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교육헌장이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정체성의 여러 단계를 진술한 것으로, 다중 정체성의 관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과 사회구성원, 개인으로서 가져야 할 속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에서 개인은 사회적 존재,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한다. 국민교육헌장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정녕 사회적인 존재다. 우리의 사람됨은 사회의 공동생활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룩되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회질서와 국가의식에 의해서만 우리의 건전한 인간성이 형성될 수 있다. 국가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모든 이해관계와 떼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발전은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의 목적은 본래 국가의 목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⁸⁾

국민교육헌장을 해설하는 각종 책이나 글에는, 교육의 지표를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은 온갖 ‘좋은’ 말을 모두 모아놓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교육의 지표가 지향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국민정신을 내세우지만, 그 내용에 들어 있는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근대의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전통적 민족정신을 내세우기도 한다.⁹⁾ 국민교육헌장이 교육지표를 이처럼 나열식으로 포괄적으로 진술한 것은, 어떤 교육이념이나 교육정신을 이론적 기반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 교육이 역사전통을 선택적으로 정당화한 것¹⁰⁾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국민교육헌장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열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이는 국민교육헌장의 국민지표 진술에서도 일정한 통일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세 영역 중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국민정신에 가장 잘 나타난다. 국민교육헌

7)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역사문제연구』11, 2003, 54쪽.

8) 문교부, 『국민교육헌장독본』, 동아출판사, 1989, 55~56쪽.

9) 황병주, 앞의 글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 담론」, 168쪽.

10) 김한중, 『민주사회와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67~69쪽.

장의 이념을 학교교육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다른 교육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정신과 관련된 실천활동에 정부의 정책이나 통치이념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¹¹⁾ 국민교육헌장 중 국민정신을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국민정신의 진술에는 박정희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이 협력을 해야 하나가 발전하며,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다. 나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은 하나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의 발전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근대 국민국가가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교육을 확대한 목적도 여기에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는 전근대 국가와는 달리 대중의 힘을 인정했지만, 대중은 '국민'이라는 존재로 필요했다. 그렇지만 개인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근대 국민국가의 논리와는 다르게, 박정희 정부의 교육이념은 국가 발전 자체에 교육의 목적을 둔다. 개인의 성장을 판단하는 것도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가 발전하면 자연히 국민 개개인의 발전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¹²⁾ 이런 관점에서는 학생들도 국가의 자원으로 보게 된다. 국가 시책을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가치교육은, 국민이 통치자가 유도하는 대로 가치관을 가지는 수동적 존재면 된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었다.

국민교육헌장에서 말하는 국민정신은 국가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정신이다.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해석한 책에서는, 국민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정신이라고 하면, 국민 고유의 사상·도덕·역사·전설·풍속 등에 담긴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국민의 공동 목표를 지향한 국민 협동체 의식과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신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며, 따라서 마치 국가는 나와는 무관한 존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¹³⁾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에서는 역사의 주체도 사회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이다. 이런 관점은 학교 역사교육에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은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국사의 주체가 항상 그 시대의 국민 전체임을 인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점을 강조한다.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을 해석하면서 국가를 강조하다 보니, 한국인의 속성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국민교육헌장의 국민정신을 설명한 『국민윤리』 교과서 서술을 보자.

11) 김한중,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보급」, 『역사문제연구』15, 2005, 197쪽.

12) 문교부, 앞의 책 『국민교육헌장독본』, 57~58쪽.

13) 위의 책, 143쪽.

간혹 우리 국민에게는 개인만이 존재할 뿐이며, 사회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데, 이는 우리들이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져서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국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근대국가의 국민윤리가 토착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소치라고 하겠다.¹⁴⁾

1970년대 학교 역사교육에서는 외적의 침공을 물리친 전쟁을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것과 함께, 화백회의, 화랑도, 향약 등을 민족정신으로 강조했다. 협력과 양보, 상부상조의 정신이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하여, 이런 전통과 민족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속성으로 비판한다. 민족을 강조하지만, 민족의 전통이나 민족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국가를 우선에 두는지 여부에 따라 민족 전통이나 정신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와 사회,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교육이념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박정희 정부도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음을 의식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반박 논리로,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는 애국심을 강요하느냐 스스로 깨달아 자진하여 국가 건설에 참여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한다.¹⁵⁾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라 교육이념을 학생들에게 스스로 내면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교육이념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 속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건 국민대중이건 간에 기회가 닿는 대로 국민정체성을 가지는데 필요한 민족사나 민족문화를 경험하게 했다.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국민의례 절차에 포함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헌장의 정신을 체화시키고, 헌장 이념을 국정지표로 삼아 매스컴을 통해 해설하거나 좌담회를 개최했다.¹⁶⁾ 국기하강식 때 애국가를 들려주고, 애국가 연주에 맞춰 모든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의 자세로 멈춰 서서 경의를 표해야 했다. 학교에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북한 무장간첩의 만행으로 희생된 이승복 동상을 세워, 학생들로 하여금 수시로 접촉하고 이들의 정신을 되새기게 했다. 이런 매개체를 통해 학생이나 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의 교육이념을 받아들여야 하려는 것이었다. 이 시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을 정식과목에 집어넣고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훈련을 한 것도, 실제로 국방력과 군사력을 높인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못지않게 군사훈련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공을 체험하게 한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군사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를 내면화하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었다.

(2) 민족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인간

제3차 교육과정기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창의성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라는 국민교육헌장의 교육지표에서 보듯이, 국민의 창의성은 나라 발전의 요건이며, 국민교육헌장의 해설이나 실천 프로그램에서도 창의성을 핵심 요소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창의는 사물이나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창의적 사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기존과는 달리 새롭게 바라보거나, 확산적이고 대안적인 사고를 하거나, 다

14) 문교부, 『(고등학교용) 국민윤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1, 187쪽.

15) 문교부, 위의 책, 193쪽.

16) 김한중,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보급」, 『역사문제연구』15, 2005, 178쪽.

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원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창의적 사고의 이런 성격을 감안한다면, 학교교육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했던 제3차 교육과정기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이 강조된 것은 언뜻 어색해 보인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는 창의성이 기존의 의례적 사고나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전통을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필요에 따라 의례적 사고나 관습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의성을 가지는 행동이라는 논리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창의성의 강조는 전통의 선택적 계승과 탈피하는 국가주의 교육의 선택적 정당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기 학교교육에서 강조된 창의성이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의 사고를 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실천적 창의성의 근원도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에서 찾는다. 전통문화와 정신에는 실천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창의성의 강조는 이유가 전통이나 관습을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를 한다고 해서 서구적 사고를 그대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기에 창의성의 원천은 주체성에 있으며, 주체성은 곧 민족정신이고 실천성이었다. 제3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국민정신을 직접적이고 가장 잘 드러내는 『국민윤리』 교과서는 창의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나, 모방 아닌 창의는 이미 주체성을 전제로 한다. 주체성이 결여된 창의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트고 닦기 위하여 최고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체성은 회고적인 자기 자랑이나 국수주의적 고집 불통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 확립된다.¹⁷⁾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국수주의적 고집불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문구이며, 초점은 한국의 현실에 있다. 한국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창의성이 필요하며, 창의성을 가지게 위해서는 한국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전통 정신에 깃들여 있는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사교육을 통해 민족이 역경을 이기고 발전했으며, 민족문화가 서구문화 못지않게 우수하고 독창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전통과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을 내세운 것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하다. 근래 일어난 근현대사 인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진영의 주된 논리이지만, 1970년대에는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비판하는 논리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활용되었다. 박정희로 볼 때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했고, 서구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의 하나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내세웠던 것이다.

IV. 교육이념의 내면화

교육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통로는 학교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교육헌장’은 애초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헌장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

17) 문교부, 『(고등학교용) 국민윤리』, 동아출판사, 1971, 169쪽.

민을 통합해야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였다.¹⁸⁾ 그래서 당시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과 성인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을 세웠다. 다만 국가의 교육이념을 사회에 관철시키는 통로로 유용한 것이 학교였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실천하는 행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된 것은 학교교육이었다. 그렇지만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보급하는데 사회교육을 강조한 것은, 학교에서 헌장의 이념이 구현되는 과정을 전제로 하였다.¹⁹⁾ 즉, 학교교육과 사회생활의 일체화를 통해 교육이념을 자신의 생각과 삶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간상은 사회까지 이어지며, 끊임없는 사회교육을 통해 그 속성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이처럼 학교교육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사회교육에 광범위한 관심을 가졌다. 이순신, 울곡과 신사임당은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인물이었으며, 대외항쟁과 국난극복의 전적지를 정비하여 사회교육의 체험장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하나였다. 국민정신의 생활화는 교육이념이나 교육의 결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생활 속으로 가져와서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사회교육의 강화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문화적 상징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순신의 이미지를 활용한 국민동원과 계몽전략은 동상을 세우고 ‘충무공 노래’를 만들었으며 100원 주화와 500원 지폐에 이순신 초상을 넣는 등 각종 상징물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세종을 연구하고 높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글 전용을 시행하였다.²⁰⁾

박정희 정부의 이런 시책은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황토현 전적지를 정비하고 우금치에 동학농민혁명군 위령탑을 세우는 등 동학농민전쟁을 지나간 일에서 현재 사회 속으로 불러냈지만, 이는 쿠데타에 의한 집권과 힘을 앞에서는 국가 주도의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는 수단이었다. 농민전쟁의 실패 원인을 지도력의 부족에서 찾으려 하면서,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화단결을 해야 한다고 내세웠으며, 5·16쿠데타나 10월유신을 동학농민전쟁의 연장선상에 놓음으로써 민중의 자발적 혁명성보다는 체제 수호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²¹⁾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교육이념은 일반 국민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내면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당시의 교육환경이나 사회구성원이 학교교육을 통해 기대하였던 것이 교육이념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는 1970년대 교육이념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이유가 강압에 의한 목종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열악한 학교교육의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분석하였다²²⁾. 한 반에 7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이 이해와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때문에 교육이념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비추어 보면, 사고를 촉진시키려고 하지 않고 정답을 그대로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의 교육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을 가로막은 썸이다.

18) 이해영 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 연구보고 RR 98-8, 한국교육개발원, 1998, 41쪽.

19) 김한중, 앞의 글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보급」, 179쪽.

20) 최연식, 「박정희의 ‘민중’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28(2), 63~64쪽.

21) 오제연,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역사문제연구』33, 2015, 206~207쪽.

22) 허은, 「유신시대 학교와 학생의 일상사」, 김성보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70년대』, 창비, 2016, 54쪽.

V. 맺음말

제3차 교육과정기 교육이념은 국가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개인과 사회, 국가를 일체화 하는 발전교육의 관점을 기반으로 했다. 그렇지만 이런 발전의 원동력을 지식이나 지적 능력이 아닌 국민정신에 두었으며, 그 기반을 전통문화와 정신에서 찾았다. ‘주체성’이나 ‘(한)국적’이라는 구호와 정치 논리가 교육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교수학적으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내세운 제3차 교육과정에서 가치탐구는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도덕교육뿐 아니라 지난날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자료로 해서 어떻게 가치교육을 할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그러면서도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교육이념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사회구성원에게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국난극복의 현상이나 문화적 상징물들과의 접촉을 최대화하는 것은 그런 방편이었다. 이런 시책은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고 체제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당시 학생이나 대중에게 이런 교육이념이 내면화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열악한 학교교육의 환경은 이를 가로막았으며,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이념의 일방적 전달과 주입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에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내려는 정권의 의도를 가로막는 역설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교육이념과 인간상이라고 하였지만, 이 발표에서 논의된 교육이념과 인간상이 1960년대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글에서 시기를 가리킬 때 ‘제3차 교육과정기’, ‘박정희 정부’, ‘1980, 70년대’ 등과 같은 말이 혼재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특히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교육이념과 인간상이 별로 차이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제3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1973년과 1974년이 학교교육을 구분하는 시점이지만, 제3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방향이나 교육내용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계속된 것이었다. 발전교육의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개인을 일체화하고 정신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의 방향은 1960년대 후반에도 이미 본격화하였다. 민족전통을 선택적으로 내세우고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역사교육과 교과서 문제를 언급할 때 흔히 국정 국사교과서가 1974년에 발행되었다고 하지만, 이 때 발행된 국정 국사교과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중학교용 교과서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용 국정 국사교과서는 1968년부터 발행되고 있었으며, 국민학교 5학년과 6학년용 국정 『국사』 교과서도 1971년에 나왔다. 박정희 정부가 추구했던 교육이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련과 극복』, 『승공통일의 길』, 『자유수호의 길』 등과 같은 국사와 도덕부교재가 간행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국가교육과정 체제라고 해서 역사교육을 비롯한 학교교육의 시기구분을 단순히 교육과정이 공포되거나 고시된 때를 시점으로 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제3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과 국사교과서 개편

조성운(경기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제3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
 - III. 국사교과서의 개편
 - IV. 맺음말
-

I. 머리말

1895년 대한제국 학부관제와 소학교령(1895년 7월 19일)이 공포된 이래 관찬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출판을 출판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근대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에 의해 강점된 이후에도 조선총독부는 국정과 검인정을 병용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5년 미군정이 수립된 이래 검정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74년 국정으로 전환되어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즉 국민공통 과정에 편성되었던 국사교과서는 여전히 국정으로 발행되었으나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에 편제되었던 한국근·현대사교과서는 검정에 의해 발행되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와 한국근·현대사교과서가 통합된 『한국사』가 2011년 탄생하면서 국사교과서는 완전히 검정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 국정 한국사교과서 발행을 정부가 고시하면서 한국사교과서는 제도적으로는 다시 국정화되었으나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정 한국사교과서는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다. 김한중은 국사교과서의 변천과정을 다루면서 언급¹⁾하였고, 이신철은 국사 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국정 국사교과서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언급²⁾하였다. 차미희는 제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가 독립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었다.³⁾ 더 나아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 시기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국사교육의 전반에 대해 고찰하였고,⁴⁾ 이를 보완,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⁵⁾ 장영민은 박정희 정권의 핵심 지배 이데올로기인 국가주의가 학교 국사교육에 반영되는 과정을 서술

1)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17, 1991.

2) 이신철, 「국사 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 『역사교육』97, 2006.

3) 차미희,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25, 2006.

4) 차미희, 『중등 국사교육의 내용 변천에 대한 연구 : 국사과 독립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2011.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었다.⁶⁾ 한편 윤종영은 국사교육강화정책과 국사교육발행제도에 대해 다루면서 자료적 성격의 연구를 제출하였다.⁷⁾ 구경남은 제3차 교육과정기 국정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교육의 실체를 국가주의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⁸⁾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살피고, 이에 따른 국사교과서의 편찬에 대해 살펴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유신 선포를 전후한 시기의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활동을 민족자주성 혹은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한 제2차 교육과정기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살핀 후 1974년 국정 국사교과서가 편찬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II. 제3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

미군정 하에서 ‘사회생활과’라는 이름으로 지리, 공민과 함께 통합된 교과과정 내에 있던 역사는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까지 계속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었다.⁹⁾ 이 시기에는 국사와 세계사를 서로 밀접하게 연관지어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편찬의 의도는 세계사적 시야에서 한국사를 바라보자는 것으로 폭넓은 역사성찰과 역사적 판단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적이었으나 세계사를 한국사의 전개순서에 맞추어 배열한 것에 불과하여 역사의 구조적 특징이나 각 사회의 성격을 비교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¹⁰⁾ 또한 미군정기에 마련된 사회생활과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권은 제1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향토학교 교과과정 임시운영 요강(중학교)』과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향토학교 교과과정 임시운영 요강(고등학교)』에 따라 중등교육을 임시로 운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3년 2월 15일 제2차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4년 베트남 파병,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 호납치사건에 따른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공논리와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박정희정권은 사회적으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의 강제 교부 등을 통해 주민 통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기존의 반공방일교육에 일대변화를 가져왔다. 그

6) 장영민, 「박정희 정권의 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제34권 제2호, 2007.

7) 윤종영,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고찰」, 『문명연지』1-2, 2000. : 윤종영, 「국사교육강화정책」, 『문명연지』2-1, 2001. : 윤종영은 1980년 문교부 역사 담당 편수관이 되어 3차례의 교육과정 개편과 3차례의 국사교과서 개편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사교과서 파동』(혜안, 1999)을 저술하였다.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는 과정에는 편수관이 아닌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지만 1980년부터 편수관에 재직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헌들을 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8)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19, 2014.

9) 차미희,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25, 2006, 397쪽.

10)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17, 1991, 72쪽.

11) 역사과가 사회과에서 독립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사회과 교사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 그것은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던 교과 시수에서 역사과를 독립시키면 사회과의 교과 시수가 감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과의 교사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러나 지금까지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전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는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침』(1966)을 발간하여 이 지침에 의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의 작성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65년 12월 18일, 마침내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끌어오던 국교정상화의 공식 절차에 매듭을 짓게 되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두 나라의 수교가 극동의 안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경제적 번영의 역사적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굴욕적 사실에 비추어, 국민적 자각과 주체 의식을 굳게 하여 이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수동적인 과거를 하루 속히 탈피, 청산하고, 자주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능동적인 자세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시는 일본국이 우리에게 침략정책을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쓰라린 역사적 경험에 비취 양국 간의 진실한 우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각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민족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¹²⁾

이 지침은 결국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핵심정책, 즉 경제개발과 반공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는 민족주의의 고양을 통해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는 민족주의에 모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이 필요에 따라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제2차 교육과정을 큰 폭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은 “모든 학교 교육에서 지표”¹³⁾가 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1972년까지 연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1969년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고,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⁴⁾ 그리하여 국사교과는 “당면한 국가 과업의 하나인 공산주의 섬멸운동이 유래하는 바를 여기에서 찾아야 하고 또 정신무장을 강화함도 국사교육의 중요한 현실적 목적”¹⁵⁾이라 하여 반공을 국사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용 교과서는 1969년 9월, 중등학교용 교과서는 1970년부터 전면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⁶⁾ 특히 세계사와 국사가 통합되어 있던 중학교 사회Ⅱ 교과서는 국사 위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¹⁷⁾

한편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이른바 ‘10월유신’을 선포하였다. 이듬해인 1973년 1월 22일 문교부는 다음을 발표하였다.

12) 문교부,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침』,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6, 3쪽. 이 문건은 머리말, 총론(1. 민족 주체성의 확립, 2. 주체성과 교육, 3. 과거의 반성, 4. 역사적 발전과 인간 형성, 5.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6.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 각론(국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실업, 가정, 반공·도덕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13) 「민족중흥 사명 생활화」, 『경향신문』 1968년 12월 5일.

14) 조성운,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한국사학보』66, 고려사학회, 2017, 339쪽.

15)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8, 147~148쪽.

16) 「초중교 교과서 개편」, 『매일경제신문』 1969년 4월 25일.

17) 『경향신문』 1969년 6월 4일, 「초중교 교과서 개편 문교부 연내로 교육내용 개선을 위해」.

① 국민학교 4, 5, 6학년의 사회와 중고등학교의 반공 교과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고 ② 국사는 초등학교용(5, 6학년)은 신편이 끝나 새학기부터, 중고등학교용은 올해 안에 신편, 74학년도부터 실시하고 ③ 중고등학교의 사회, 국어, 도덕 등 교과서는 새학기에 우선 일부 수정해 가르치고 내년부터는 전면 개편된 새 교과서로 교육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중략) 국사교과서는 ‘국적있는 교육을 되찾는다’는 문교부의 장학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상들의 빛난 얼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결국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와 유신이념의 반영을 위해 국사를 비롯한 사회와 반공 교과서의 개편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독재체제의 강화를 박정희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족주의, 민족주체성의 확립으로 포장하였다. 특히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5월 초 고등학교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과 각종 채용고시(국가, 국영기업, 일반기업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사과목의 부과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⁹⁾

이러한 국사교육 강화의 흐름은 1972년 3월 7일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국적 없는 교육’의 국적회복을 지시하고,²⁰⁾ 3월 24일 문교부 주최로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올바른 민족사관과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정립, 체득하고 그 위에 투철한 국가관과 자주성을 확립”²¹⁾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른바 ‘국적 있는 교육’을 언급함으로써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1972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 신관 301호 회의실에서 주제적 민족사관을 주제로 史學者懇談會가 개최되었다.²²⁾ 참석자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²³⁾ 이후 조직된 국사교육강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간담회에서 나온 역사학자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식민지정책 또는 우리의 의타적인 추세에 의하여 왜곡되어 온 사관을 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2. 이 점에서 주제적 민족사관의 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3. 표어에 그쳐서는 안되고 장기간의 착실한 노력으로 추상적 이론보다도 하나하나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하여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 내용이 갖추어져야 한다.
4. 모든 지식인을 비롯하여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명을 느끼도록 양식을 기르되 특히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5. 국민교육에 있어서는 국사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어떠한 사정보다도 민족의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서술된 사실의 득달보다도 민족의 긍지를 마음 속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활력소는 민족의식이다. □力으로 □活하겠다는 共□의식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6. 연구가 부족하여 우리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에 단점만 들추는 경향이 있다. 유능한 사학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18) 「초중고 사회, 반공, 국사 교과서 개편」, 『동아일보』1973년 1월 22일.

19) 윤종영, 「국사교육강화정책」, 『문명연지』2-1, 한국문화학회, 2001, 274~275쪽.

20)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194~195쪽.

21) 문교부 중앙교육행정연수원, 『문교월보』40, 1973, 9쪽.

22) 「보고번호 제2호 사학자간담회보고」(국가기록원 소장).

23) 이 회의 참석한 학자들의 명단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삭제하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의 명단에 상당 부분의 공간이 있고 마지막에 ‘특별보좌관 전원(단 함병춘 보좌관 미국 출장)’이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7.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애국심을 일깨워 주도록 개편하여 점차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개편, 보완해 나가야 한다.
8. 국민 각자의 개별적인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임을 사실로써 밝혀 이러한 민족의 저력 위에 우리의 역사가 형성되어 왔음을 알려야 한다.
9.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국사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다. 국민학교 국사과목을 사회생활과로부터 독립시켜 교과서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10. 적어도 한국학만은 한국에서 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 학자가 외국에 가서 한국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원래 우리의 것을 남의 힘에 의하여 연구할 때 왜곡되기 쉽다. 우선 奎章閣藏書의 정리보관이나마 좀 더 □□□하고 월림(필름-인용자)에 수록하여 두어야 한다.²⁴⁾(밑줄은 인용자)

즉 사학자간담회에 참석한 역사학자들은 식민사관의 극복과 민족사관의 확립, 애국심 교육을 강조한 교과서로의 개편, 국사교과의 독립교과화, 역사자료의 정리와 보관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 말미에는 간담회의 진행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朴鍾鴻 특별보좌관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의가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現在 影響力이 많은 中堅 史學者들의 大體로 一致된 意見이요 妥當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時間이 갈수록 熱띤 論議가 展開되어 豫定時間보다 1時間이나 超過할 정도로 眞摯한 雰圍氣이 있습니다.²⁵⁾

한편 사학자간담회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대통령 박정희에게 건의하였다.

1. 초등학교 국사과목을 사회생활과목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동시에 중고등학교를 통하여 국사교육강화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전의 국역보급과 국사편수사업도 중요하나 규장각 도서 같은 귀중한 사료들의 수집, 정리, 보관책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²⁶⁾

첫 번째 건의는 즉각 수용되어 제3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국사교육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한기욱 비서관을 문교부 국사교육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뒤의 <표 1>에서 보듯이 韓基旭이 1972년 5월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국사교육개선위원회가 국사교육강화위원회로 개칭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국민교육헌장의 공포와 1972년 상반기의 ‘국적 있는 교육’의 주창이 사학자간담회를 거쳐 국사교육강화위원회로 귀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1972년 5월 10일 문교부 회의실에서 국사교육강화위원회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표 1>과 같이 이선근을 위원장, 강우철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²⁷⁾

24) 「보고번호 제2호 사학자간담회보고」(국가기록원 소장).

25) 「보고번호 제2호 사학자간담회보고」(국가기록원 소장).

26) 「보고번호 제2호 사학자간담회보고」(국가기록원 소장).

27)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윤종영(『문명연지』2-1, 한국문화학회, 2001)과 장영민(「박정희정권

<표 1>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구성²⁸⁾

이름	직책/소위원회	소속 및 직책	전공분야	비고
박종홍		대통령 특별보좌관	철학	
장동환		대통령 비서관		
한기욱		대통령 비서관		
박승복		국무총리 비서관		
이선근	위원장/소위원회	영남대 총장	한국사(근대사)	
김성근		서울대 교육대학원장	서양사	
고병익		서울대 문리대학장	동양사	
강우철	부위원장/소위원회	이대 교육대학원장	역사교육	
이기백	소위원회	서강대 교수	고대사회	
이우성		성균관대 교수	고려시대	
김철준	소위원회	서울대 교수	고대사회, 고려시대	
한우근		서울대 교수	조선시대	
김용섭		서울대 교수	조선시대	
이원순	소위원회	서울대 교수	조선시대, 역사교육	
이광린	소위원회	서강대 교수	개화기	
최창규	소위원회	서울대 교수	개화기, 현대사	
이현중		국사편찬위원회 실장	조선시대, 개화기	
김상기		서울대 교수	고대사회, 고려시대	추가
이홍직		서울대 교수	고대사회	추가
변태섭		서울대 교수	고려시대	추가

그리고 이튿날인 1972년 5월 11일 대통령 비서관 韓基旭은 다음의 ‘국사교육강화방안건의’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결론 및 건의

1. 각급 학교의 국사교육 실태와 각종 채용고시에서의 국사시험 부과 상황을 조사한 결과
 - 국사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 실시하고 있으며,
 - 각 기업체 채용시험은 물론 국가 시행 고시에 있어서도 극소수(2%)의 시험만이 국사를 시험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국사교육의 강화 및 국사교육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 대학에서의 국사교육 및
 - 각종 고시에서의 국사과목 부과문제를 연구, 실시하도록 별첨 지시 공문과 같이 관계부처에 지시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에서의 국사교육

대학에서 국사를 전공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국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 (예 : 별첨 I과 같이 서울대 교양과정부의 필수과목 중 세계문화사²⁹⁾는 포함되어 있으나 국사

의 국사교육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34-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을 참조 바람. 1972년 5월 10일의 국사교육강화위원회에서의 주요 발언은 윤종영(앞의 논문, 277~278쪽)이 소개하였다.

28) 차미희,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25, 2006, 405쪽. 이 표에서 추가된 3인의 경우 처음 위원회가 발족할 때는 구성원이 아니었으나 한기욱의 보고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방안 보고」에서 인문고 국사교과서 저자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국사강화위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9) 밑줄 친 세계문화사에 화살표 표시를 하여 “世界文化史를 알기 전에 제 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는

과목은 없음)

2. 채용시험에서의 국사시험

가. 국가시험고시

- (1) 3급 공무원 채용시험 95개 직종 중 3개 직종(학예연구, 편사연구, 외무)
- (2) 4급 공무원 채용시험 95개 직종 중 2개 직종(학예연구, 편사연구)
- (3) 5급 공무원 채용시험 77개 직종 중 5개 직종(학예연구, 편사연구, 검찰사무, 사서, 행정)
- (4) 경찰직 3개급별 시험 중 1개(순경 채용 시험)
- (5) 사법시험 예비고사
- (6) 해외유학시험 등

13종의 시험만이 국사를 시험과목 중에 포함시키고 있음(별첨 II 참조)

나. 기업체 채용시험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각 기업체, 언론기관 등의 신규사원 채용시험에서 국사를 시험과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제관광공사의 안내원” 시험뿐임(별첨 III 참조).³⁰⁾

이 건의에 따라 문교부는 1973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부터 국사를 독립과목으로 출제하도록 하였고, 14개 국사관계학회를 통합하고 국사연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센터를 설치하고 국사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대폭 늘릴 방침을 밝혔다.³¹⁾ 그런데 윤종영은 1972년 5월 초 현재 고등학교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과 각종 채용고시(국가, 국영기업체, 일반 기업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사과목의 부과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문교부에 하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972년 5월 11일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하여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위원장 강우철, 위원 한우근, 김철준, 이원순, 이광린, 최창규로 한 소위원회에서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단일화시켰다. 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민족적 철학 및 규범을 역사에서 찾고 통일 후에 생길 사관문제 등에 대비한 것이었다.³³⁾ 이와 같은 보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대략의 방침이 서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 1972년 7월 6일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제1차 건의가 제출되었다. 이 건의에서는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민족이라는 주제는 우리 국사에서 유구한 개념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확보하여야 할 소중한 역사 추진력의 바탕이다. 이러한 역사의 추진력은 민족의 자기 본질에 대한 인식과 역사의식이라는 규범 체계 없이는 발현될 수 없으며 영속되기도 곤란하다. 여기서 우리의 국사교육 강화라는 당연한 국민적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늘의 우리가 서 있는 해방 후 1세대라는 민족사적 상황과 직결된다.

우리는 해방을 계기로 역사의 실천 주체의 회복과 함께 민족의 자주역량을 길러왔고 아울러 국사 서술의 주체의 회복으로 민족사관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慨嘆. 慨嘆.”이라 써 있다. 아마도 대통령 박정희의 필적이라 생각된다.

30) 「보고번호 제72-335호 국사교육강화방안보고」(국가기록원 소장).

31) 「국사, 독립과목으로 출제 대학입시 문교부, 14개학회 통합, 한국학센터 설치」, 『동아일보』 1973년 5월 11일.

32) 윤종영, 앞의 논문, 274~275쪽.

33) 「민족을 주체로 강화된 국사교육의 큰 목표 방향」, 『경향신문』 1973년 5월 26일.

오늘날 국사교육의 강화라는 주장을 새삼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직도 우리 민족사에 남겨진 왜곡된 해석과 타율적인 역사관이 청산되지 못하였고 아울러 국사학 자체가 민족국가의 근대화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사에서의 주체성은 우리 민족을 독립된 역사주체로 확인시킬 수 있는 개별성과 함께 우리 민족을 역사의 실천자로 길이 부각시키는 영속성을 아울러 가질 때 확립 된다. 따라서 국사교육의 강화는 그 학문적 성과가 민족문화의 개성 발달을 폭넓게 확대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세계사의 참된 한 단위로 참여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의 재창조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을 역사계승의 당당한 주체로 확인시켜야 한다.

국사학은 과학적 인식만이 민족문화의 개성과 미래상을 바로 결정해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국사의 과학적 체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우리 사학계가 쌓아온 국사연구의 업적과 성과는 과학적으로 보다 체계화되어 오늘과 내일의 국사교육에 좀더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사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육적 요구는 민족 주체적의식의 확립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자주적 민족사관의 제시로 요약된다. 그것은 항상 역사의식을 통하여 계승되고 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좀더 발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사교육은 체계화된 국사학의 참된 지식을 근간으로 하여 자기와 민족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의 국민생활을 승화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 준다. 나아가 투철한 민족사관의 토대 위에 민족적 주체역량을 더욱 함양하여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³⁴⁾(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국사교육 강화의 목적은 해방 이후 민족사적 상황, 즉 역사 왜곡과 타율사관의 청산, 그리고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체적의식의 확립과 자주적 민족사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사교육의 일반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굳건한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역사적으로 의식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주체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한다.
2. 민족의 발전 과정과 각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치, 사회, 경제, 사상 등의 상호 기능관계를 파악한다.
3. 민족중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조들의 노력과 그 업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국가에 헌신하는 태도를 기른다.
4. 한국의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시켜 온 민족적 역량을 이해하고 외래문화 수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5. 개인의 가치관과 민족의 가치체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국민의 자세를 이룩하며 민족적 생활규범을 심화시킨다.
6. 국사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해석력과 판단력을 민족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발전시킨다.³⁵⁾

결국 국사교육을 통하여 민족주체성을 강화시키고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국민의 자세’, 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건의한 ‘민족주체성의 확립’ 또는 ‘자주적 민족사관’이 국사교육의 일반목표에서는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국민의 자세’로 치환되었던 것이다. 즉 국가주의적 사관의 주입을 국사교육의 일반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공

34) 윤종영, 앞의 논문, 279~280쪽.

35) 윤종영, 앞의 논문, 280~281쪽.

포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방침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기본방침은 국민적 자질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교육의 쇄신의 3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 항목 (3)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에 “민주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되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은 국민의 총화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대학 및 교육대학 : 국사를 교양 필수과목으로 설정한다(이수단위는 3~4단위).
- 고등학교 : 국사과를 설정한다(이수단위는 6단위)
- 중학교 : 국사교과를 설정하고 2~3학년에 걸쳐 주당 2시간씩 부과한다.
- 국민학교(초등) : 6학년에는 체계있는 국사를, 5학년에는 산업사, 생활사 내용을 부과하고, 4학년은 사회과의 1/3을 국사 내용으로 한다. 1, 2, 3학년은 사회과의 1/4을 국사내용으로 한다.³⁶⁾

이러한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건의는 거의 수용되어 대학에서는 국사는 교양필수과목이 되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사과는 교과로서 독립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도 전 학년을 통해 국사를 배우게 되었다. 이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국민학교에서는 ① 국민의 기본교양으로서의 국사인식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② 국가의식과 역사인식의 점차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③ 생활사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게 하고 ④ 우리 역사의 전체 흐름의 파악과 민족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다.

- 중학교의 경우는 ① 국사인식의 심화와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고 ② 역사의식의 성장을 촉구하며 ③ 근대 이후의 민족사를 다각적으로 성찰하여 민족적 과제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④ 세계사적 시야에서 민족사를 인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고등학교에서는 ①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 ② 역사적 해석력의 함양을 통해 미래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③ 비판적 정신으로 주체적인 민족사적 의의를 찾도록 했다.

- 대학교에서는 ① 주체적인 민족사관에 입각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② 국사의 인식을 확대, 심화하고 ③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④ 민족문화의 잠재 능력 개발과 민족장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했다.³⁷⁾

36) 윤종영, 앞의 논문, 281쪽.

37) 「민족사관 주체의식 확립 중고교 사회과서 분리 대학 3~4학점 이수」, 『매일경제신문』 1973년 7월 5일.

Ⅲ. 국사교과서의 개편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제1차 건의서 제출 이후 제2차 건의서를 또 제출하여 ‘국사교과서 내용 준거 제시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본 준거는 국사의 전 내용을 망라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중심 개념에 따라 중·고등학교 별로 내용전개의 기본 관점만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2.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내용 전개에 있어 그 차이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학교에서 취급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중복 표기하지 않았다.
3.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중심으로 국민의 국사 교양을 보다 심화하고, 주체의식을 확립하고 자기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준거적으로 제시하는 데 힘썼다.
4.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을 통하여 가능한 한 오늘날의 국사학계의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자기문화 의식을 투철히 하고 창조적 문화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에서 내용을 준거적으로 제시하였다.³⁸⁾

이에 따르면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건의가 1974년 발간된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 편찬에 실제 반영되었는가는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1973년과 1974년에 각각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건의와 10월유신의 이념을 반영하여 중고등학교 국사교육의 목표를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제3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

중학교 국사과 교육목표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
(가)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시키고,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문화 민족의 후예로서의 자랑을 깊이 하게 한다.	(가)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나) 우리 민족사의 각 시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시키고, 현재적 관점에서 이를 살필 수 있게 하여 민족사의 특색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게 한다.	(나)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 체제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
(다) 우리 민족사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우리 민족사의 특징을 찾도록 한다.	(다) 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식시켜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창조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이해시키고,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에 힘쓰려는 태도를 기른다.	(라) 전통 문화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여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자세와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마)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민족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체계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마)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

<표 2>에 따르면 제3차 교육과정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사과 교육목표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민족사관의 강조,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외래문화의 수용 등 민족주체성의 강조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에서는 ‘민족중흥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박정희정권의 근대화

38) 장신, 「해제 『국사교육강화를 위한 건의내용(제2차)』, 『역사문제연구』37, 역사문제연구소, 2017, 586쪽.

정책에 국사교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며, 민족중흥은 민족사관의 확립에 근거하도록 하여 독재를 민족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1974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V. 현대사회’를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1974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V. 현대사회’ 구성³⁹⁾

1. 대한민국의 정통성	(1) 대한민국의 성립 8.15민족해방과 국토분단 대한민국의 수립 (2) 6·25의 민족시련 북한의 공산화 6·25의 민족시련
2. 민족 중흥의 새 전기	(1) 민주주의의 성장 4월학생의거 5월혁명 (2)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10월유신

<표 3>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6·25전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식민지시기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 UN에 의한 합법정부 수립 등으로 남한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서술하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공산독재와 6·25 남침에 따른 민족 분단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민족중흥의 새 전기로 ‘민주주의의 성장’을 꼽으면서 5·16군사정변을 ‘5월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박정희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⁴⁰⁾

5·16군사정변은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구국의 영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마지막은 ‘오늘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1쪽 분량의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72년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조직되어 국사교육강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문교부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그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9)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사의 중심개념」(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에서 근대민족국가의 발전을 8·15 민족의 해방, 대한민국의 수립, 6·25사변과 민족의 시련, 4월의거와 민주주의의 성장, 5월혁명과 제3공화국으로 구성하였다. 이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안이 1974년 국정 국사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안에서는 ‘4월의거’라 표현하였으나 국사교과서에서는 ‘4월학생의거’라 표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5·16군사정변’은 ‘5월혁명’이라 그대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개념으로 의미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국사』, 문교부, 1974, 229쪽.

1. 문교부는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국사교육강화방침에 따라 작년 5월 이후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국사과목의 독립, 강화 및 시간 배당의 조정, 각종 시험에서의 국사과목 부과, 기타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른 교과서 개편 작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었던 바,
2. 이번에 그 일환책으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방안을 수립, 보고하여 왔습니다.⁴¹⁾

이에 따르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민족주체성 확립이라는 정책의 연장선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국사과목을 독립시키고 시간 배당을 조정하는 한편 각종 시험에 국사과목을 부과하고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정화 방안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국정화를 건의한 적은 없었으므로 국정화 방안은 정부의 의도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1972년 6월 문교부는 교과서 개편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새마을정신과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검인정 교과서의 집필자 160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새마을사업 지역, 산업단지, 문화유적지 등 25개 지역을 시찰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⁴²⁾ 이는 정부가 교과서의 집필 방향과 내용의 대강을 1972년에 이미 정하였던 것이라 보인다.

이 문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

1. 일본의 식민지정책이나 우리의 의타성에 의하여 다분히 왜곡되고 타율적인 이제까지의 역사관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며,
 2. 주체적인 민족의식에 투철하고 민족중흥의 의욕에 충만한 후세국민을 길러낸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의 개편이 필요한 바
 3. 현재의 검정교과서(중고교 각 11종) 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개편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4. 사학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여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역사연구의 업적과 성과를 보다 체계화하고, 신빙도 높은 풍부한 사례에 입각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
 5.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현재 국정으로 되어 있는 도덕, 국어과목과 함께 가치관 교육의 중핵이 되는 국사과목도 국정화가 요청됨.
 6. 교과서의 국정화로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고 권위를 높임.
- * 현행 11종의 국사교과서 발행자, 저자들도 지난 3월 유사한 이유로 문교부에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단일본 발행을 건의하여 문교부가 동 건의를 수리함으로써 현재 공동집필의 단일교과서 발행을 위한 편찬 작업이 진행 중임.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 가. 현행 검정교과서 저자 및 발행업자의 반발 예상(이유는 연간총계 750만원에 달하는 저자들의 저작인세 및 출판사의 수입 때문임).
- 나. 집필진의 선정 및 확보 문제

41) 문교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국가기록원 소장).

42) 「학생정신교육 강화 새마을·구국운동, 교과서에 넣기로」, 『경향신문』 1972년 6월 26일.

2. 대책

- 가. (가)의 문제점은 저자들에 대한 설득과 인세 상당액의 학술연구 조성비 지급으로 대처하며
- 나. (나)의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사교육강화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⁴³⁾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보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은 식민사관의 탈피와 민족사관의 형성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검정교과서를 통해 달성하기에 어려우므로 사학계의 성과를 체계화하고, 풍부한 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국사과목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연간 750만원에 달하는 인세와 출판사의 손실 때문에 검정교과서의 저자와 발행업자들의 반발에 따른 집필진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성비를 지급하여 저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고, 집필진의 선정은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사교육강화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보고 이후 1973년 6월 23일 문교부는 다음의 이유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였다.

문교부는 이같이 국사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편찬기로 한 것은 ① 일제 침략기에 이루어진 왜곡된 역사관을 청산하고 ② 광복 이후 우리 국사학계에서 쌓아온 업적을 체계화하며 ③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사교육을 실시, 국적 있는 교육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국정으로 편찬될 새로운 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문교부 편수국장 하에 있는 권위 있는 학자들을 위원으로 위촉, 각 학년별로 1권의 책으로 집필케 할 계획인데 새 교과서 내용에는 주제적 민족사관 정립, 새한국인 형성, 한국민주주의 토착화 등 문교부의 국사교육 방침을 반영시킬 방침이다.⁴⁴⁾

이러한 문교부의 방침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민족사관의 확립을 표방하면서 국민교육헌장과 10월유신의 선포로 강화된 반공주의, 국가주의를 교과서에 반영시키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은 1973년 1월 22일 대통령 박정희의 문교부에 대한 연두순시에서 김현옥 문교부장관은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과 한국적 가치관의 교육 강화”⁴⁵⁾를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는 이미 결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74년 1월 29일 연두순시에서도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국적있는 교육신장, 교육체제의 교육력 강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으로 유신교육을 심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과서를 개편”⁴⁶⁾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다. 1975년에도 류기춘 문교부장관은 대통령 박정희의 初度巡視에서 1975년도 문교정책의 중점을 교육유신체제의 확립, 국민정신교육 강화, 교육의 내실화와 사회화, 장기적 체육진흥정책 수립, 해외교포교육 강화⁴⁷⁾에 두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유신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보고하였다.

43) 문교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국가기록원 소장).

4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검정제 폐지 국적있는 교육 강화」, 『경향신문』 1973년 6월 23일.

45) 「박대통령 “유신저해 요인 제거”」, 『매일경제신문』 1973년 1월 22일.

46) 「박대통령에 문교부 보고 기술인력 백만 양성 81년까지」, 『경향신문』 1974년 1월 29일.

47) 「대학생성적학습과제포함 교사들 교직원관 평정요소로 반영」, 『동아일보』 1975년 2월 7일.

- ① 민주주의 교육 내용을 쇄신,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신념을 배양토록 37책의 교과서를 보완하고 ② 현재 59개 대학에 있는 기존 반공서클의 회원 2242명을 3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③ 올바른 시국관 확립을 위해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며 ④ 덕성교육 강화를 위해 도덕교과서를 개편⁴⁸⁾

이로 보아 ‘10월유신’ 이후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유신교육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4년 2월 22일 문교부는 민족사상 확립 위주로 개편된 초·중·고등학교를 국사교과서 1974년 신학기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국사교과서 편찬은 준법제적 성격을 갖고 교과서 편찬의 근거가 되었던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⁴⁹⁾과 1972년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편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수반하여 1973년에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국사의 중심개념』을 발간하였다. 이 문건은 한국사를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의 5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근대분야는 개화·척사운동,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활동, 근대사회의 성장, 일제의 침략과 독립투쟁의 5절로 구성하였고,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은 8·15 민족의 해방, 대한민국의 수립, 6·25사변과 민족의 시련, 4월의거와 민주주의의 성장, 5월혁명과 제3공화국으로 구성하였다.⁵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2차 교육과정기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척사운동이 중단원의 명칭으로 들어가 국사교과서의 주요 요소로 처음으로 들어갔으며,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 갑오경장을 갑오개혁으로 사용하는 등 역사 용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4년 국정 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혁명 혹은 동학운동, 갑오개혁은 갑오경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이 문건에 따라 역사용어가 사용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문건에서 “독립협회의 활동에 의해 각성된 국민들은 애국정신을 개발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실력을 배양하여 근대적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⁵¹⁾하였다는 진술은 1974년 발행된 국정 국사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그 취지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안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하여 계몽된 자주·민권·자강사상은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하게 하여, 그 후 일제 침략기에 있어서 민족운동을 펼쳐 가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⁵²⁾

즉 독립협회의 활동이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당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독립협회운동과 다른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서술에서는 이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만이 있을 뿐 이에 대한 평가나 의의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고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의 배경 정도로만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높게 평가한 것은 이 시기 박정희정권이 내걸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 즉 근대화계획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개편된 “인문계 고교의 국사교과서는 고고학적 새 사실의 반영, 백제의 국제적 역할

48) 「교육유신」을 강화, 『매일경제신문』 1975년 2월 7일.

49) 윤종영, 『국사교과서과동』, 해안, 1999, 105쪽.

50)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사의 중심개념」,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295~311쪽.

51)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사의 중심개념」,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308쪽.

52) 문교부, 『국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1974, 184쪽.

강조, 신라의 대다항쟁사 부각, 불교사상의 설명,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에 대한 새 평가, 항일사와 일제사의 상세한 설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중학교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고교용에 동조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시사성을 반영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용은 전쟁사에서 생활사 중시로 바꾸고, 실학을 부각시켰으며 6학년용은 역사의 발전적 선형을 강조하며 생활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강조”⁵³⁾하였다. 이에 대해 역사교육연구회장 이원순은 “보편성과의 연관에서의 개별성의 창조 전개라는 역사 파악을 유도할 내용의 교재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족주체성의 지나친 강조로 세계사의 보편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었다. 또한 국정교과서이므로 교과서에서 배제된 이설이 교과서 내에 수용되지 않아 국사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최근 10여 년을 지나치게 중시, 강조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는 경제개발이나 새마을운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그런데 이러한 국정 국사교과서에서 사용한 동학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의외로 발생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朴時仁은 국사교과서 개편에 대해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 왕정말기에 외세가 집중 내습한 위기에 청나라 홍수전의 난리를 모방한 반란을 남도에서 일으켜서 일본군이 침입할 기회를 만들어 나라를 망하게 한 동학란을 동학혁명이라 찬양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태도는 일제 때 어용학자들보다 심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조사실장 尹炳奭은 “박씨의 논리는 왕조말기의 부패한 지배계층과 일제 관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전근대 사회를 탈피하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동학농민봉기는 국민 속에서 대내적 모순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과 아울러 농민이 참여한 최초의 항일운동으로 한국근대의식의 기점으로 높이 평가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외에도 김상기, 한우근, 이선근, 최창규교수 등도 같은 논리로 박시인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단군조선을 신화로만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호상, 이병도, 김상기, 이선근, 金玉吉, 韓景職 등 74명은 1974년 7월 25일 “올해 새로 나온 초중고 교과서에서 국조 단군을 완전히 신화로만 돌린 것은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비판하였고,⁵⁵⁾ 26일에는 재건국민운동 중앙본부에서 ‘국사교과서평가회’를 개최하여 단군조선을 완전히 신화로 규정한 것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⁵⁶⁾ 이러한 서술은 국사교육에서 민족사관을 강조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1963년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초중고 교과서에서 단군을 신화로만 취급하였다며 편찬의 근거를 밝혔다.⁵⁷⁾

또한 문교부는 112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국정 국사교과서를 포함한 전 교과서에 대해 오탈자와 삽화의 잘못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⁸⁾ 이는 국정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 그리고 편수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경향신문』은 1974년 4월 15일

53) 「초중고교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생활사 중심의 주체의식 강조」, 『동아일보』 1974년 2월 27일.

54) 「초중고교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생활사 중심의 주체의식 강조」, 『동아일보』 1974년 2월 27일.

55) 「역사교과서 신화로 취급 단군조선을 부정」, 『경향신문』 1974년 7월 26일.

56) 「치열해진 단군개국 논쟁, 신화냐 사실이나」, 『동아일보』 1974년 7월 27일. 이 재건국민운동 중앙본부에서 개최한 ‘국사교과서평가회’에서 발표한 인물은 이병도, 김상기, 이선근이었다(『문화단신』, 『동아일보』 1974년 7월 26일).

57) 제2차 교육과정이 통과된 직후인 1963년 5월 조직된 국사교육통일심의위원회(위원장 신석호)에서 마련한 「국사교육내용의 통일」이라는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성운의 연구(「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한국사학보』 66, 고려사학회, 2017, 354~357쪽.)를 참조 바람.

58) 「문교부 국정 교과서 전면 재검토」, 『경향신문』 1974년 4월 13일.

사설에서 “도대체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편찬되고 어떠한 감수를 거쳐서 발행되었기에 이토록 어수룩한 것이 되었는가”⁵⁹⁾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같은 해 6월 18일 사설에서 첫째, 국정 국사교과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서술되어야 하며 정설이 아닌 어느 학자 개인이나 소수 학설을 자의로 발표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중학교용 교과서와 고등학교용 교과서는 그 내용이 균형있게 연관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셋째, 국정 국사교과서는 새 세대에 대한 국사 이해를 통일시킨다는 이점이 있으나 역사란 사관과 학자의 자세에 따라 해석과 서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료적 규제에 획일화시키기보다 검인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⁰⁾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국정 국사교과서는 1974년 신학기부터 사용되었으나 이 논란은 1975년 문교부 문교부가 수행한 「현행 인문계 고교 및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분석연구」에서 50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면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319개,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229개소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표 4>와 같이 지적하였다.

<표 4> 「현행 인문계 고교 및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분석연구」의 주요 내용⁶¹⁾

내용 불일치	해석의 차이	초중고교간 불일관성
① 장군총의 높이, ② 민족의 기원, ③ 청동기 시대의 상한, ④ 삼한성립 과정에 대한 용어의 불일치(부족국가, 연맹체), ⑤ 초기 신라에 대한 설명 불일치, ⑥ 화랑도의 기원을 중학교에서는 귀족사회로 고등학교에서는 씨족공동사회로 설명, ⑦ 상수리제도의 인질을 중학교는 지방관리, 고등학교는 지방호족으로 표기, ⑧ 신라의 도참설은 중학교는 과학기술로, 고등학교는 인문지리학으로 설명, ⑨ 이조통치체제를 중고등학교는 재상중심, 국민학교는 국왕중심체제로 설명	① 고려 崔沖의 사학에 대해 초중학교는 긍정적이거나 고등학교는 부정적으로 해석 ② 동학의 성격 규정 ③ 갑오경장과 대한제국 형성의 성격을 초중학교는 주체적으로 고등학교는 타율적으로 해석 ④ 3·1운동의 배경에 대해 중학교는 국제 정세 등 해외 요소를 강조한 반면 고등학교는 국내적 요소를 강조 ⑤ 해방에 대해서는 초중학교는 내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고등학교는 외적 요소를 강조 ⑥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국민학교와 고등학교는 농촌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중학교는 범국민적운동으로 해석	① 중학교에서 크게 다른 가야사회가 국민학교에는 전혀 없음 ②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초중학교에서는 4신분체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양반과 상놈의 2신분체제로 서술

특히 이 연구에서는 최충헌을 왕을 폐립한 반역자이며 백성의 요구를 짓밟은 국민의 반역자인데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라며 영웅적으로 평가했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대원군을 지나치게 미화하여 쇄국정책, 천주교 탄압까지도 시대적 요청과 전통문화의 자부심에 의한 것이라 한 서술을 역사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로 비판하였으며,⁶²⁾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한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국사, 사회, 도덕 등 4개 교과서를 분석한 「국적있는 교육의 충실화」라는 보고서에서 주제성의 강조가 지나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너무 주관적인 경우

59) 「교과서와 교육현장의 겹», 『경향신문』 1974년 4월 15일.

60) (사설)「국사교과서의 문제점», 『동아일보』 1974년 6월 18일.

61) 「문교부 조사 국사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마다 史實 달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62) (사설)「국정 국사교과서의 난맥», 『경향신문』 1975년 9월 9일.

가 있으며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상황 묘사와 이론적 뒷받침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 등 4개 항목을 지적하였다.⁶³⁾ 특히 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왕조 흥망 등 개별 사건의 나열에 치중한 나머지 역사의 흐름을 서술하는데 등한히 했으며,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내용이 세부적이어서 학생 부담이 과중하고 일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주관적 해석이 들어 있고 ‘토요토미’, ‘투쿠카와’와 같은 표기법에도 문제가 있다. 또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고려청자는 삽화가 선명하지 못해 식별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하였다.⁶⁴⁾ 이와 같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1976년 문교부는 국사교과서를 ‘주체성에 입각한 민족사관을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부분 개편할 것을 검토하였다.⁶⁵⁾

또한 문교부는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공포하였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977년 2월 28일 문교부령 제404호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목적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과 나아가서는 민족 중흥을 이룩하기 위한 유신 과업의 수행을 목표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국적 있는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바 민족적 자각을 높여 국력을 배양함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터전을 닦아보자는 데 있”⁶⁶⁾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사과는 다음과 같이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교과로 설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국의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고 나날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며, 멸공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룩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국민의 총화단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민의 총화단결을 위한 구심점을 우리 민족의 역사성 속에서 찾고 그 속에서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받아 주체적 자주 국민의 자질을 확립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따라서 국사교과는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교과라 할 수 있다.⁶⁷⁾

즉 국사과는 조국의 근대화와 멸공통일을 위한 전국민의 총화단결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체적 자주 국민의 자질을 함양, 즉 한국 국민상을 형성하는 핵심적 교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⁶⁸⁾ 그런데 “문교부는 내년(1978년-인용자)에 개편하려고 했던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1년 연기, 79년도에 개편할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77년 ‘검인정 교과

63) 「국적있는 교육에 충실」, 『경향신문』 1975년 9월 11일.

64) 「초중고 주요 교과서에 문제점 많다-평가교수단의 시정 건의」, 『동아일보』 1975년 9월 12일.

65) 「바른생활(국교) 민주생활(중학) 등 금년내에 교과서 개편」, 『동아일보』 1976년 3월 29일.

66) 교학도서주식회사편집부 편, 『초중고(인문, 실업) 새종합교육과정 및 해설』, 교학도서주식회사, 1977, 머리말.

67) 교학도서주식회사편집부 편, 『초중고(인문, 실업) 새종합교육과정 및 해설』, 교학도서주식회사, 1977, 332쪽.

68) 이를 위해 국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다음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1. 국사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2.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체계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
3. 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식시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4. 전통문화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여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자세와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5.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교학도서주식회사편집부 편, 『초중고(인문, 실업) 새종합교육과정 및 해설』, 교학도서주식회사, 1977, 335쪽.)

서 파동'에 따라 19명의 편수관 가운데 18명이 면직되어 9명이 충원되었으나 교과서를 개편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⁶⁹⁾

이 교과서 분석의 기준은 <표 5>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교과서 분석 기준⁷⁰⁾

1. 편찬의 기본 방침	1. 편찬의 기본 방침		
2. 조국의 근대화	1. 근대화 2. 국력배양 3. 국토개발 4. 경제발전 5. 생산기술의 연마 6. 중화학 공업 육성 7. 저축 8. 수출증대 9. 국민의 과학화 10. 생활합리화	5. 유신이념의 구현	1. 유신체제 2. 국민총화 3. 민족주체성 4. 민족적 긍지와 사명감 5. 애국심 6. 국가관 7. 민족사관 8. 민족사적 정통성 9. 한국민주주의 11. 비능률, 비생산성 제거
3.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 2. 근면 3. 자조 4. 협동 5. 소득증대 6. 생산증강 7. 향토애 8. 환경개선 9. 생활개선	6. 국민적 자질 함양	1. 전통계승 2. 경애·신의 3. 근검 절약 4. 책임완수(국민의 의무) 5. 창의성 6. 국토자원의 보전 7. 공익질서 8. 문화애호
4. 총력안보체제의 확립	1. 안보태세 강화 2. 국방 3. 반공 4. 국토통일 5. 군경원호	7. 기타	1. 각 교과목의 특성

(자료) 문교부 편수국, 「국가 중요 시책의 반영면에서 본 신규 교과서 내용 분석-국민학교·중학교분-」, 유인물, 1974.5 및 문교부 편수국, 『편수업무현황』, ‘교육내용의 개선을 중심으로’ 17쪽, 유인물, 1974.5.

<표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국사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서의 분석 기준은 박정희정권과 유신체제를 수호하고 홍보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사교과서도 1979년에 전면 개편되어 새로이 편찬되었다. 1979년판 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국민교육의 목적에 따라 국사교육의 목적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국민의 육성에 필요불가결한 교육내용을 전제로 한다.

국사교육과 한국적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 방법을 증진시키고 문화발전의 방향을 바로 제시하여 우리나라 국력이 확대되고 또 크게 변천하는 국제 관계와 치열한 국제적인 생존경쟁을 겪는 과정에서 민족의 자주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자각케 하려고 한다.

또한 개성이 없는 피상적인 모방문화로서는 식민지 문화체질의 미극복 상태를 그대로 연장시킬

69) 「79년에 개편 계획 중학교 교과서」, 『매일경제신문』 1977년 6월 22일.

70) 허강 외, 『한국편수사연구(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459쪽 <표 IV-36>.

뿐만 아니라 새로 일어나는 인식의 성장도 방해하고 나아가서 문화의 해체에서 오는 사회 혼란만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재인식시키고 나아가 식민지사관을 충분히 극복하게 하여 우리들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식민지 문화체질을 씻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새 국사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한국 사학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여 민족사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주체적인 한국인상의 수립을 제1의 목표로 삼는다.⁷¹⁾

결국 국사교과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자각’하고, ‘식민지 문화체질’에서 벗어난 ‘주체적 한국인’, 즉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국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집필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였다.

- 1) 교육법, 교육과정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2) 세계사적 차원에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시간 배당, 학생의 발달 단계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 4) 내용 진술은 쉽고 구조화가 되어야 한다.
- 5) 시대별 분량 비중은 근대, 현대에 치중한다.
- 6) 내용의 느낌은 밝게 하도록 한다.
- 7) 학계의 이론을 집약시켜 보편화시킨다.⁷²⁾

교육법(법률 제3054호, 1977년 12월 31일 시행)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방침(제2조)으로서 다음을 규정하였다.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 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 양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 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서거한 직후인 12월 12일 문교부는 초중고 교과서 684책 중 유신이념이 반영된 초등학교 교과서 5책, 중학교 교과서 6책, 고등학교 교과서 7책 등 18책 23개 단원을 학생들에게 교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교사용 지침서를 고쳐 학생들에게 교수하도록 하였다.⁷³⁾ 국사교과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 해당하여 유

71) 『79학년도부터 사용할 1종도서 집필 세부 계획서(인문계고등학교)』, 45~46쪽.

72) 『79학년도부터 사용할 1종도서 집필 세부 계획서(인문계고등학교)』, 48쪽.

73) 「초중고교 교과서 유신 내용 빼기로」, 『동아일보』 1979년 12월 12일.

신이념을 선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교수 김정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실적으로 유신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도덕, 사회, 국사, 국어, 한문, 국민윤리, 미술 등의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순진한 이들 청소년들에게 진실이라고 외쳐댄 사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을 가르친 그 사실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엄연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교사의 입장과 알든 모르든 간에 이를 지켜보게 되는 초중고교생들의 처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교과서의 내용이 두 번 다시 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들이 반성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⁷⁴⁾

한편 1974년 12월 31일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대응, 그리고 10월유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1973~74년에 걸쳐 개정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검정을 공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본 정책으로 인하여 명확한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할 때에 1977년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파동’을 겪은 후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을 폐지하고 1977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8660호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새로운 교과서 정책이 비로소 수립되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는 1종교과서,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는 2종교과서로 구분(제2조 3항)하여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1종도서가 있는 경우는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1종도서가 없을 경우 2종도서를 사용(제3조)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선택의 자율성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제4조에 따르면 1종도서는 국민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중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와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등을 규정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교과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국학 관련 교과서는 1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따라서 국사교과서는 1종 즉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또는 인쇄, 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하였다(제28조). 이 점이 1967년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과 1977년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에는 문교부, 즉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였으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에는 문교부는 교과서 제작의 기획·감독 기능만을 맡고 집필, 교정 등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1종교과서개발위원회에 위임되었다.

IV. 맺음말

74) 「교과서와 교육과...」, 『동아일보』 1979년 12월 18일.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특징

이정빈(충북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국사』(1974)의 단원 구성과 시대구분
- III. 『국사』(1974)의 서술 특징과 민족사관
- IV. 『국사』(1979)의 서술 변화와 정신문화
- V. 맺음말

I. 머리말

제3차 교육과정(1974~1981)이 시행되며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교과 중 하나가 한국사였다. 교과로서 독립했고, 교과서의 발행 방식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되었으며, 관점과 서술에 정권의 통제와 간섭이 증가하였다.¹⁾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한국사 교육에 주목했던 것이다. 국정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1974년부터 발행되었고[이하 『국사』(1974)], 1979년 개정되었다[이하 『국사』(1979)].²⁾

본고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³⁾ 이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74년부터 꾸준하였다.⁴⁾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 1) 김한중, 1991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7 ;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 2015 「국사교육 강화와 국가주의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소 지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역사교육이 걸어온 길-』, 휴머니스트 ; 윤종영, 2001 「국사교육강화정책」 『문명연지』 2-1 ; 신주백, 2005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국사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편(1968~1994)」 『역사문제연구』 15 ; 李信澈, 2006 「국사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7 ; 차미희, 2006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 25 ; 장영민, 2007 「박정희 정권의 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34-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구경남, 2014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19 ; 하일식, 2014 「고교 『국사』의 발행체 변천과 전근대 서술-권력의 의도와 교과서 서술-」 『역사와 현실』 92 ; 김한중, ; 조성운, 2015 「반공주의적 한국사 교육의 성립과 강화-미군정기~제4차 교육과정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82 ; 이봉규, 2017 「박정희정권기 역사교육학계의 민족주체성 인식과 국사교육 강화」 『역사문제연구』 37.
- 2) 1977년 문교는 국정과 검인정 대신 1종과 2종으로 분류했는데, 『국사』(1979)는 1종이었다. 1종은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갖고 연구기관(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개발한 것으로, 다단계의 검토를 통해 문교부가 교과서 편찬을 지도했고, 문교부의 독점 발행이었다는 점에서 국정과 다를 바 없었다(尹種榮, 1990 『『國史』教科書의 編纂方向』 『歷史教育』 48, 182~183쪽 ; 김한중, 1991 앞의 논문, 77~78쪽 ; 2006 앞의 책, 45~47쪽).
- 3) 한국고대사의 범위는 일반적인 이해처럼 국가형성기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原始 시대를 포함할 예정이다.
- 4) 李元淳, 陳英一, 鄭善影, 1974 「中·高等學校用 國定國史教科書의 分析的 考察」 『歷史教育』 16 ; 金光洙, 1989 「古朝鮮·辰國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 45 ; 徐毅植, 1989 「古代·中世初 支配勢力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 45 ; 李景植, 1989 「古代中世初 經濟制度研究의 動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시도되면서 제3차 교육과정기의 한국사 교과서와 그 편찬 배경이 재조명되었다. 특히 고조선 관련 서술이 주목되었다.⁵⁾ 이를 통해 이른바 ‘고대사과동’을 중심으로 사회 일각의 국수주의와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가 결합된 면모가 한층 자세히 밝혀졌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似而非歷史學’ 내지 ‘類似歷史’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제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의 전반적인 구성과 세부적인 서술이 폭넓고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사』(1974)·『국사』(1979)의 한국고대사 구성과 서술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국사』 교과서⁶⁾와 비교한 구성·서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검정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1968)[이하 『국사』(1968)]와 단원 구성 및 서술을 비교·검토해 볼 것이다.⁷⁾ 다음으로 『국사』(1974)와 『국사』(1979)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개정의 내용 역시 선행 연구에서 미진한 사항이었다. 서술의 변화와 그 배경을 생각해 볼 것이다.

II. 『국사』(1974)의 단원 구성과 시대구분

『국사』(1974) 한국고대사 분야의 단원 구성은 제2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달라졌을까. 1968년 검정 교과서 중 1973년 인세수입을 기준으로 한 상위 2개 교과서,⁸⁾ 그리고 1972년 발행된 국정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이하 『국사』(1972)]와 단원 구성과 분량을 비교해 보았다.⁹⁾

向과 「國史」教科書の敘述』『歴史教育』45 ; 박찬홍, 2009 「제3차~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국가 발달단계론에 대한 서술 검토」 『역사와 담론』54 ; 李富五, 2010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韓國古代史探究』4 ; 임기환, 2016 「백제 遼西진출설과 역대 교과서 서술 검토」 『한국사학보』63.

- 5) 조인성, 2016 「‘고대사과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172 ; 기경량, 2017 「사이비 역사학과 역사과 시즘, 젊은역사학자모임, 『한국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 역사비평사 ; 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사군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 교육』56-1.
- 6) 신선혜, 2017 「제2차 교육과정기 한국 고대사 연구와 국사교과서의 서술 검토」 『역사와 교육』24 참조.
- 7)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교육과정기 국정으로 전환된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1968~1972)가 주의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로부터 제3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허은철, 2017 「제2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행과 서술 변화」 『역사와 교육』24, 44~45쪽). 그러므로 이 역시 염두에 두고자 한다.
- 8) 1968년 1월 11일 검정을 통과한 제2차 교육과정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이원순(교학사), 신석호(광명출판사), 변태섭(법문사), 민영규·정형우(양문사), 윤세철·신형식(정음사), 김장기(장왕사), 한우근(을유문화사), 이홍직(동아출판사), 이현희(실학사), 이병도(일조각), 이상옥·차문섭(문호사) 11종이었다. 1973년 인세 연액 추정액은 총 2,710,000원으로 이병도(750,000원), 신석호(480,000원), 한우근(310,000원), 이홍직(280,000원), 이원순(260,000원) 등의 순이었다. 한기욱, 1973 「國史教科書の 國定化方案報告(文教部)」(06.09), 대통령비서실(대통령기록관 문서번호: LA00614174959296) 및 허은철, 2017 「제2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행과 서술 변화」 『역사와 교육』24, 24쪽 참조.
- 9) 각 교과서마다 終章으로 나오는 “우리의 사명”은 총분량에는 포함했지만, 따로 분량을 헤아리진 않았다. 분량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자리까지 표시했다.

「표 1」: 『국사』(1968)·『국사』(1972)·『국사』(1974)의 단원 구성 및 분량

구분	이병도(1968)	신석호(1968)
단원 구성	1. 역사의 시작 I. 원시사회와 문화 II. 원시시대의 사회생활 2.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 I. 고조선의 변천과 그 문화 II. 철기 문화의 보급과 그 영향 III. 남북방 부족 사회와 문화 3. 고대 국가의 성립과 그 문화 I. 삼국의 성장과 변천 II. 삼국의 사회와 경제 III. 삼국의 문화 4.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I. 신라의 삼국 통일 II. 통일 신라의 정치와 사회 III. 신라 사회의 붕괴 IV. 통일 신라의 문화	I. 역사의 시작 1. 우리 민족의 내력과 국토 2. 원시 시대의 생활 II.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 1. 고조선과 그 문화 2. 한 균현과 그 문화의 영향 3. 남북 여러 부족의 형성과 그 문화 III. 삼국 시대의 생활 1. 삼국의 성립과 변천 2. 삼국의 대외관계 3. 삼국의 사회와 경제 4. 삼국의 문화 IV.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 통합 정책 2. 통일 신라의 정치·사회·경제 3. 통일 신라의 문화 4. 발해의 흥망과 그 문화
고대	74쪽/253쪽(29.2%)	78쪽/250쪽(31.2%)
고려	46쪽/253쪽(18.2%)	50쪽/250쪽(20%)
조선	76쪽/253쪽(30%)	60쪽/250쪽(24%)
근대	48쪽/253쪽(19.0%)	40쪽/250쪽(16%)
현대	7/253쪽(2.8%)	20쪽/250쪽(8%)
	국정(1968)	국정(1974)
단원 구성	I.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 국가 시대 1. 우리 나라의 원시 사회 2. 우리 민족의 건국과 발전 3.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 II.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1. 삼국의 형성과 통일 국가의 출현 2.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3. 통일 신라 시대의 사회와 문화 4. 삼국과 통일 신라의 경제 5. 발해	I. 고대사회 1. 선사시대의 문화 2. 부족국가의 성장 3. 삼국 시대의 발전 4.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5.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6. 통일 신라의 문화
고대	59쪽/197쪽(30%)	56쪽/232쪽(24.1%)
고려	22쪽/197쪽(11.2%)	46쪽/232쪽(19.8%)
조선	51쪽/197쪽(25.9%)	65쪽/232쪽(28.0%)
근대	32쪽/197쪽(16.2%)	54쪽/232쪽(23.3%)
현대	33쪽/197쪽(16.8%)	10쪽/232쪽(4.3%)

위 표와 같이 국정(1974)에서는 단원이 간소화되었고, 한국고대사 분야의 분량이 소폭 감소되었다. 대단원이 “I. 고대사회” 하나로 묶였고, 그 안에 중단원 “1. 선사시대의 문화”부터 “6. 통일 신라의 문화”까지를 포괄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대단원을 「고대사회-고려사회-조선사회-근대사회-현대사회」로 구분한 데서 비롯되었다. 근대와 현대를 각각 하나의 대단원으로 구성해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근대사와 현대사에 치중”한다는 방침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¹⁰⁾ 이미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근·현대사 교육이 중시되었는데,¹¹⁾ 이

10) 金興洙, 1992 『韓國歷史教育史』, 大韓敎科書株式會社, 273쪽. 이하 제3차 교육과정의 「목표」, 「지도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은 金興洙, 1992 앞의 책, 270~274쪽 및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에서 참조했다.

와 같은 기초가 이어진 것이다. 실제 이병도(1968)와 신석호(1968)와 비교해 보면 국정(1974)의 근·현대사 분량은 소폭 증가했다. 한국고대사 분야의 분량이 소폭 감소한 사실도 그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므로 분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¹²⁾ 그보다 「고대-(중세)-근대-현대」의 시대구분이 적용된 점이 주목된다.

『국사』(1974)에서 「고대-(중세)-근대-현대」로 시대를 구분해 이를 대단원으로 설정한 점은 한층 구조적인 이해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¹³⁾ 제4차 교육과정(「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과 제5~7차 교육과정(선사-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의 시대구분과 이에 기초한 단원 설정은 『국사』(1974)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69년 작성된 『중·고등학교 국사교육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김용섭·이기백·이우성·한우근)이 참고된다(이하 『기본방향』).¹⁴⁾ 그 중 「시안작성의 기본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2. 민족사의 각시대의 성격을 세계사적 시야에서 제시한다. 3. 민족사의 전 과정을 내재적 발전방향으로 파악한다.”였다.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한 시대구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우성은 『기본방향』을 두고, “시대구분, 시대의 성격 부여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했는데,¹⁵⁾ 실제 역할 분담과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원시-고대-중세-근대」로 각 시대를 구분한 가운데 각 시대의 형성·변동·해체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자 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補說에 나온다. 원시사회를 공동체사회로 정의하고 점차적 해체의 과정 속에서 고대사회가 성립된다고 했으며, 고대국가와 중세국가를 각각 귀족국가와 귀족관료국가로 구분해 각 사회의 차이점에 유의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1972년 5월 발족한 國史教育強化委員會(이하 위원회)의 연구보고서(제2차 건의, 「국사교육을 위한 건의내용」, 1973.05)에서 재차 강조되었다.¹⁶⁾ 위원회는 “내용선정의 기본 관점”에서 “시대사적 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와 별도로 「고대-고려시대-조선시대-근대-현대」의 시대구분과 주제별 중심개념을 담은 연구보고서(「학교교육을 중심으로-국사의 중심개념-」)를 제출하였다. 위원회의 위원 20명¹⁷⁾ 중 『기본방향』의 필자 4명(김용섭·이기백·이우성·한우근)이 모두 포함된 만큼 연구보고서는 『기본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방향』과 위원회의 연구보고서는 당시까지 축적된, 그리고 새롭게 구명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다.¹⁸⁾ 그런데 이때까지 역사학계의 대부분은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학자가 교과서 집필을 거부했다.¹⁹⁾ 위원회의 한국고대사 전공자 중에서는 김철준만 집필에 참여했다.²⁰⁾ 그러므로 『

11) 조건, 2017 「제2차 교육과정기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과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내용 분석」 『역사와 교육』 24, 151~153쪽.

12) 金興洙, 1992 앞의 책, 273쪽.

13) 윤종영, 2001 앞의 논문, 291쪽.

14) 장신, 2016 「해제-『中·高等學校 國史教育改善을 위한 基本方向』」 『역사문제연구』 36 참조.

15) 李佑成, 1971 「1969~1970年度 韓國史學界의 回顧와 展望: 國史-總說」 『歷史學報』 49, 2~3쪽.

16) 윤종영, 2001 앞의 논문, 282~289쪽 참조.

17) 위원 명단은 李信澈, 2006 앞의 논문, 199쪽에서 보았되었다. 종래 17명으로 알려졌지만(윤종영, 2001 앞의 논문, 275쪽), 정부 보고서를 참고해 20명이었다고 했다.

18)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姜晋哲, 1966 「韓國史의 時代區分問題에 대하여」 『歷史學報』 31 ; 韓國經濟史學會 編, 1970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李基白, 1981 「韓國史의 時代區分 문제」, 韓國史硏究會 編, 1981 『韓國史硏究入門』, 知識産業社 ; 1971 『民族과 歷史』, 一潮閣 ; 金哲垞, 1975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 李信澈, 2006 앞의 논문, 199~200쪽.

국사』(1974)가 『기본방향』 및 위원회 연구보고서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사』(1974)에서는 「원시-고대」를 “고대사회”에 묶었다. 이는 위원회의 연구보고서와 같다. 그러나 단원 구성의 의미는 달랐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원시 시대에서 구분했고,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고조선(부족연맹)을 고대사회 속에서 설명했다. 『기본방향』도 이와 유사하다. 고대국가의 발전과정을 「부족국가-부족연맹-귀족국가」로 세분하고 부족국가부터 고대사회로 파악했다. 하지만 『국사』(1974)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1. 선사시대의 문화”에 포함했다.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을 「부족국가-고대국가」로 양분했고,²¹⁾ 삼국 초기까지 부족국가로 설명했으며, 이때까지를 원시사회로 파악했다(지도내용 참조).²²⁾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집필자의 차이가 고려된다. 『기본방향』 한국고대사 분야는 이기백이 담당했다. 위원회 연구보고서 작성에도 이기백이 참여했다. 이와 비교해 『국정』(1974)의 한국고대사 분야 집필자는 김철준이었다. 『韓國史新論(初版)』(李基白, 1967, 一潮閣)과 『韓國古代國家發達史』(金哲俊, 1964, 『韓國文化史大系 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수록 ; 1975, 한국일보社 재간행)이 참고된다. 이를 보면 둘 다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기백은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부족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했고, 김철준은 부족연맹 단계까지 원시사회의 씨족공동체적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했다.²³⁾ 『국사』(1974) 한국고대사의 분야 단원 구성은 김철준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국사』(1974) 한국고대사 분야의 대단원 구성은 시대구분에 입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 성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여러 역사학자가 논의·제안한 결과였다. 다만 국정화가 추진되면서 역사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검토·종합되지 못하였고, 주로 집필자의 견해가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중학교 『국사』의 시대구분·단원 구성·용어에 차이가 있었고, 발행 직후부터 유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받기도 했다.²⁴⁾

Ⅲ. 『국사』(1974)의 서술 특징과 민족사관

『국사』(1974) 서술 변화와 그 장·단점은 교과서 발행 직후부터 지적되었다.²⁵⁾ 구석기·청동기 유적·유물 등 새로운 고고자료의 발견과 그에 따른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서술이 장점으로 꼽혔고, 학계의 이설이 있음에도 교과서에 채용된 몇 가지의 서술이 단점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고대국가의 성격을 정의한 점이 주목되었다. 『국사』(1974)의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다.

20) 한기욱, 1973 「國史教科書의 國定化方案報告(文教部)」(06.09), 대통령비서실 ; 윤종영, 2001 앞의 논문, 293쪽 ; 李信澈, 2006 앞의 논문, 204쪽.

21) 다만 서술에서는 부족연맹체를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았다(徐毅植, 1989 앞의 논문, 90~91쪽).

22) 이와 같은 서술의 경향과 문제점은 박찬홍, 2009 앞의 논문에서 상세히 검토하였다.

23) 다만 김철준은 혈연 중심의 사회관계가 지역 중심의 사회관계보다 후진적(원시적)이라고 이해하지 않았다(1975 앞의 책, 57~5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국가를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로 정의하고, 그로의 변화를 발전으로 간주하였으며, 후진사회에서 선진사회로의 발전을 전망하였다.

24) 金貞培, 1974 「特輯『國史』教科書의 諸問題: 上古史에 대한 檢討」 『創作과 批評』 9-2, 425쪽.

25) 金貞培, 1974 앞의 논문.

부족국가의 성격. 철기 문화가 급속히 보급되자,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씨족 공동체 관계는 완전히 해체되고 친족 공동체가 성립되는 변동이 일어났다. 친족 공동체장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부족장이 되어 재래의 부족 단위의 집단을 보다 강력히 지배하는 부족 국가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부족 국가는 청동기 문화기에는 고조선·부여·진 등 몇 나라만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고조선이 망한 이후 유이민의 파동이 생기면서부터 철기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부족 국가들이 건설되었으니, 북쪽에는 부여·고구려·동예 및 옥저가 성립되었으며, 남쪽에도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 [『국사』(1974), 11~12쪽]

고대국가의 성격. 고대 국가는 삼국 시대 초기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발전한 철기 문화의 기반 위에서 각 지방의 부족장 세력들을 통합하면서 성립되었다. 고대 국가는 첫째, 부족 국가 시대부터 주동 세력이었던 친족 공동체의 장이 우세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노비와 일반 민중을 확실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그러한 각 지방의 지배 세력들이 왕권에 복속하는 대신, 지배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전 지배 계급이 결속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셋째, 중앙의 관리나 군대가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 지배를 확실히 하게 되었다. [『국사』(1974), 17쪽]

『국사』(1974)에서는 씨족공동체의 해체와 친족공동체의 성립으로 부족국가가 탄생했다고 했고, 친족공동체·부족국가의 통합으로 고대국가가 성립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2세기 초반 고구려의 태조왕, 백제의 고이왕(234~286), 신라의 내물마립간(356~402) 재위기간에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17~20쪽).

이와 같은 고대국가의 성립 시점은 일찍이 이병도가 제시한 것으로,²⁶⁾ 이미 이병도의 『국사』(1968, 20쪽, 27쪽~32쪽)·신석호의 『국사』(1968, 26~27쪽)·『국사』(1970, 16~18쪽)에서도 그와 같이 서술하였다. 다만 이병도의 『국사』(1968)에서는 고대국가를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로 정의하였고(27쪽), 부족·부족국가·고대국가의 사회 성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씨족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서 출발해 보다 큰 사회를 이루었다고 서술했을 뿐이었다(10쪽).

이처럼 종래의 교과서와 비교해 『국사』(1974)는 부족국가·고대국가 성립의 배경이 된 사회의 성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김철준의 연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철준은 일찍이 인류학 성과를 원용해 신라의 二部를 친족집단으로 해석했는데,²⁷⁾ 친족집단은 생산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씨족공동체사회 내에서 출현한 가부장가족에 기원하며, 씨족공동체사회를 바탕으로 가부장가족이 마련한 정치기구가 부족국가였다고 하였다.²⁸⁾

김철준은 가부장가족·친족집단(7世代 同一親族, lineage group)이 지배층의 중요한 구성 단위였다고 파악했다.²⁹⁾ 따라서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신라 골품제 사회를 탐구했으며,³⁰⁾ 친족집단·친족공동체와 그 사회관계를 고대사회의 특징으로 중시하였다.³¹⁾ 이와 관련하여 『국사』(1974)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 주목된다.

26) 李丙燾, 1954 「古代南堂考」 『서울大學校論文集』 1(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629~630쪽); 李丙燾·金載元, 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236~238쪽, 349쪽, 375쪽.

27) 金哲垞, 1968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下)」 『歷史學報』 1·2.

28) 金哲垞, 1975 앞의 책, 49쪽.

29) 金哲垞, 1968 「新羅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75 앞의 책, 162~165쪽.

30) 金哲垞, 1968 앞의 논문; 1975 앞의 책.

31) 金哲垞, 1970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器」; 1975 앞의 책.

삼국 시대 사회의 성격. 신분 제도가 엄할 뿐만 아니라 각 친족의 유대 관계가 강하였으므로, 개인의 신분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삼국 시대의 인명에는 반드시 그 개인이 속하여 있는 친족명과 지방명이 붙어 다녔다. [『국사』(1974), 27쪽]

신라 사회. 신라는 각 지방의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는 방법으로 골품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먼저 각 지방의 작은 족장에게 4두품, 5두품의 신분을 주고, 한 등급 위에 있는 대족장에게는 6두품의 신분을 주었으며, 중앙의 귀족은 진골, 왕족은 성골이라 하였다. (중략) 이와 같은 두품은 개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등급도 표시하는 것이 되었다. [『국사』(1974), 29~30쪽]

『국사』(1974)에서는 삼국의 사회에 친족의 유대가 강고하였고, 신라 골품과 같은 신분은 친족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병도의 『국사』(1968, 38쪽), 신석호의 『국사』(1968, 39쪽)에서 골품제를 막연히 족장 내지 그 家系의 지위를 표시[家格: 門閥]한 것으로 설명한 사실과 비교해 친족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³²⁾ 김철준의 고대사회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론과 실증 양면에서 비판 또한 강력했다.³³⁾ 따라서 그의 연구를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친족집단·친족공동체의 형성, 다시 말해 고대국가 성립의 계기는 어찌 설명했을까.

『국사』(1974)에서 부족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출현해 철기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했는데(고조선·부여·진·고구려·동예·옥저 등), 그 계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국가의 성립이 매우 늦었다. 그 원인은 지금의 대동강 유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던 고조선이 한족의 침입으로 붕괴되었고, 그 뒤에도 한군현이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의 침입으로 붕괴되었고, 그 뒤에도 한군현이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을 조종하여 통일 세력의 성립을 방해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의 분열 정책과 그 침입 세력에 대한 투쟁 과정은 저절로 한국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이 되었다. [『국사』(1974), 17쪽]

한사군을 고대 국가 성립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그에 맞서 투쟁하며 고대국가 성립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종래 검정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한군현 중에서도 낙랑은 서해안의 요충지인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므로, 그 풍부한 산물과 본국과의 편의를 독점하여 가장 번영하였고, 또 동방 한군현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토착 사회와 한과의 중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한 문화가 이 곳에 이식(利殖)되어, 크게 발달된 낙랑 문화를 이룩하였다. (중략) 이러한 고도의 낙랑 문화의 발달은 우리 토착 사회에 금속 문화를 보급해 주어, 커다란 변동기를 초래하였다. (중략) 한편, 철기 문화는 정치적으로 낙랑군 외의 토착 사회의 족장(族長)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군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방에는 많은 부족국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병도, 『국사』(1968), 16~17쪽]

낙랑군은 중국 문화사상 크게 발전한 전한(前漢)·후한·삼국 시대에 걸쳐, 약 400년 동안 평양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중국 본토로부터 관리와 상인이 자주 내왕하여, 한의 진보된 문화가 그대로 낙랑군에 들어와 낙랑 문화는 대단히 찬란하였다. (중략) 한 군현이 설치되어 진보한 중국 문화가 반도 안에 이식(利殖)되자, 아직 금속 병용의 원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던 남북 각지의 우리 민족은 자연히 그 문화를 섭취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로부터 철제 농기구를 수입하여 농업을 발전시켰고, 필연적으로 민족 의식과 정치적 자각도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직접 한 군현의 지배를 받지 않

32) 『국사』(1970) 역시 특별한 설명은 없다.

33) 李泳鎬, 2009 「一溪 金哲堧-해방 후 한국고대사학의 개척자-」 『한국고대사연구』 53, 62~63쪽, 67~68쪽 참조.

고 있었던 지방에서 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 새로운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한의 군현과 투쟁하였다. 이상과 같은 낙랑 문화는 우리 부족 사회에 흘러 들어와, 우리의 고유 문화와 융합하여, 뒷날 삼국의 찬란한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거니와, 특히 그들로부터 배운 한자(漢字)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신석호, 『국사』(1968), 17~18쪽]

이병도와 신석호의 『국사』(1968) 모두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고대국가 성립의 동력으로 파악했다. 『국사』(1974)와 정반대이다. 『국사』(1968)가 고대국가 발전의 동력이 한사군이란 외부에 있었다고 했다면, 『국사』(1974)는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역사발전의 외적 인자를 반대”하고 내적 성장을 중시한 김철준의 시각이기도 했지만,³⁴⁾ 그와 같은 변화는 『국사』(1970)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국사』(1970)에서는 “한의 침략과 착취는 도리어 우리 민족의 즐기찬 반항 운동”을 촉발했고, 그와 투쟁함으로써 집권력이 강화되어 “새로운 역사가 전개”(9쪽)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방향』이 주목된다.

- ㉑ 고조선의 부족연맹으로 발전과 주변의 제부족국가에 대한 지배력의 확대는 중국민족의 침략과 분열정책을 배제하는 데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 ㉒ 한사군의 변천은 간략히 다룰 것이며, 이 세력을 축출하는 데서 우리 사회가 성장하였음을 강조한다. (『試案內容 補說』 : 장신, 2016 앞의 논문, 451쪽)

『국사』(1974)의 한사군 및 고대국가 성립 서술은 『기본방향』과 같았던 것이다. 그 「시안 작성의 기본원칙」 5개 중에서 첫째와 셋째가 “1. 국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살린다. 3. 민족의 전과정을 내재적 발전방향으로 파악한다.”였다. 『국사』(1974)의 한사군 및 고대국가 성립 서술의 변화는 ‘민족주체성’과 ‘내재적 발전’이 모두 적용된 결과였다고 이해된다.

민족주체성과 내재적 발전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타율성론·정체성론에 대한 반명제 내지 안티테제였다. 196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타율성론을 비판하기 위해 민족주체성이, 정체성론을 비판하기 위해 내재적 발전이 연구와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반식민주의·민족주의 역사학이 역사학계의 대세를 형성하였다.³⁵⁾ 1972년 청와대 특별보좌관 박종홍이 작성한 「史學者懇談會報告」(04.21)를 보면 간담회의 주제부터 「主體的 民族史觀의 定立」이었고, 요지 역시 마찬가지였다.³⁶⁾

내재적 발전은 주로 192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성과에 기초하였는데, 해방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에서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성격 및 시대구분 문제를 통해 논의되었다.³⁷⁾ 하지만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민족주의 역사학과 대립된다고 평가되었고, 따라서 비판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³⁸⁾ 내재적 발전이 한국사 교육의 전

34) 申澄植, 1984 「韓國古代史研究의 成果와 推移」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6쪽.

35) 다음과 같은尹炳奭의 언급이 참고된다. 그는 “앞으로의 韓國史나 歷史意識은 최소한 民族의 存立이나 繁榮의 틀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만이 라도 史觀은 民族史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 다고 하였다(1978 「韓國史와 歷史意識」 『歷史教育』 24, 162쪽).

36) 朴鍾鴻, 1972 「史學者懇談會報告」(04.21), 대통령비서실(대통령기록관, 문서번호: LA00614174959281). 역사학자 중에서는 홍이섭, 한우근, 김철준, 이기백이 참석했고, 경제사 전공의 金泳鎬와 정치사 전공의 崔昌圭가 참석했다.

37) 이에 관한 연구사는 金瑛河, 1995 「고대국가의 形成과 社會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연구입문 ①-원시·고대편-』 1, 풀빛, 115~116쪽 ; 여호규, 1996 「고대의 國家형성」 『역사와 현실』 19, 221~233쪽 참조.

38) 金哲垓, 1963 「韓國古代史 研究의 回顧와 展望」 『東方學志』 6, 79쪽 ; 1975 「韓國古代史學의 方向」 앞의

면에 등장하기 어려웠다고 짐작된다.³⁹⁾ 상대적으로 민족주체성이 중시되었다. 민족주체성은 이미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전면에서 강조되고 있었는데, 1960년대 박종홍이 부각시킨 개념이었다.⁴⁰⁾ 박종홍은 국사교육강화위원회 위원 중 하나였다.⁴¹⁾

1973년 문교부에서 작성한 「國史教科書의 國定化方案報告」(06.09)에서도 민족주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타율성론 청산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이었다.⁴²⁾ 이와 관련하여 『국사』(1974)에서 백제의 ‘요서진출설’이 채택된 사실이 주의된다.

4세기 중엽 진이 약화되었을 때에, 백제는 부여족이 살고 있던 랴오시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당시 백제는 기마 민족 세력이 일찍부터 진출하여 식민지 세력을 세워 놓은 일본 지역, 그리고 랴오시 지방, 산둥 반도 등지를 본국과 연결할 수 있는 고대 상업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사』(1974), 19쪽]

백제는 이와 같이 한반도 안에서 고구려와 신라에게 협격을 받게 되자 일본 지역에 구축하였던 세력도 상실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산둥 성 지역의 진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사』(1974), 22쪽]

백제의 요서진출설이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백제의 요서 진출은 『宋書』·『梁書』를 비롯한 中國正史와 『자치통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찍부터 이를 긍정적인 이해가 꾸준하였다(신채호, 정인보, 손진태 外).⁴³⁾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학계에서 한층 실증적인 연구가 제시되면서 긍정적인 이해가 확산되고 있었다.⁴⁴⁾ 유력한 학설로 부상한 것이다.⁴⁵⁾ 김철준 역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⁴⁶⁾

책, 11쪽 ; 李基白, 1971 「社會經濟史學과 實證史學의 問題」 『文學과 智性』 봄호 ; 1971 앞의 책, 34~36쪽 ; 尹炳奭, 1978 앞의 논문, 160~161쪽.

39) 김정인, 2010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 195~197쪽 참조. 제4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세 가지 교과목표 중 첫 번째(“한국사 발전의 내재적 본질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민족사의 특성을 인식하고 각 시대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로 나타났다(金興洙, 1992 앞의 책, 310쪽). 그러나 한국고대의 사회경제사 서술은 국정(제3·4차 교육과정기)이 이전의 김인정보다 소략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李景植, 1989 앞의 논문, 141~143쪽).

40) 황병주, 2011 「박정희 체제 근대화 담론의 식민성,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 함께, 268~269쪽. 박종홍의 민족주체성에 관해서는 이상록, 「전통의 현대화 담론과 민족주체성의 강조-박종홍의 탈식민 주체화 전략과 식민주의적(무)의식-」 『사학연구』 116 참조. 역사학과 박종홍의 민족주체성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차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41) 윤중영, 1991 앞의 논문, 275쪽.

42) 한기욱, 1973 「國史教科書의 國定化方案報告(文教部)」(06.09).

43) 연구사와 그 내용 소개는 이도학, 2015 「백제의 요서경략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기술」 『한국전통문화연구』 15, 194~202쪽에 자세하다.

44) 김세익, 1967 「중국 료서지방에 있었던 백제의 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7-1 ; 金庠基, 1967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 3 ; 方善柱, 1973 「百濟軍의 華北 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 ; 1971 ; 井上秀雄, 1972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이상 인용은 이도학, 2015 앞의 논문 참조).

45) 교양서로 저술된 李萬烈, 1976 「百濟의 遼西經略說」 『講座 三國時代史』, 知識産業社, 82~87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소개·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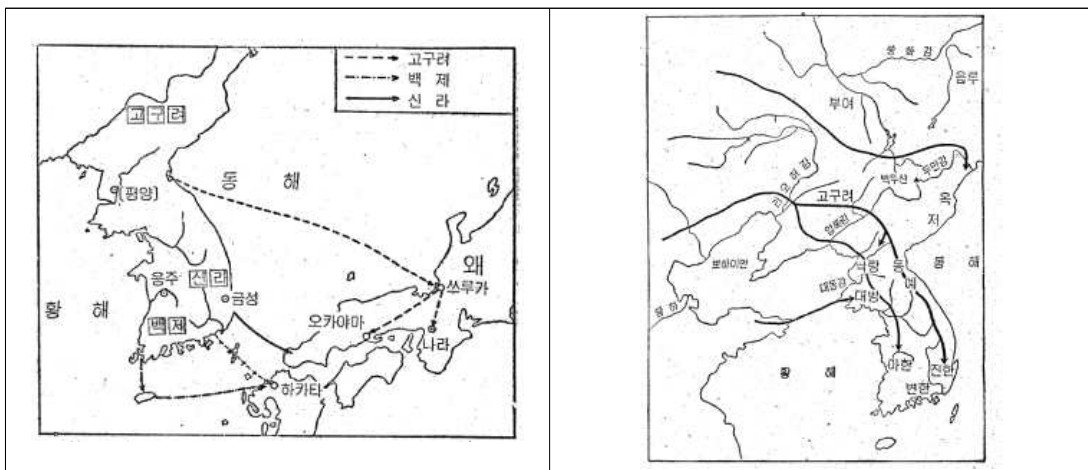
46) 金哲堧, 1973 「百濟 社會와 그 文化」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 1975 앞의 책, 51~54쪽.

百濟는 그 地理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極東의 古代貿易基地이었던 樂浪의 機能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졌다. 北中國에 남아 있던 貊族과 연결을 가짐에서 中國과 무역하고 東晉 이후에 北中國地域에 進出하였으며, 또 그 古代貿易 세력을 背景으로 하여 騎馬民族이 日本地域에 進出하여 樹立한 植民國家들을 統率할 수 있었으나, 이 때에 와서 麗羅의 挾擊을 받아 本國이 危機에 빠짐에 따라 저절로 海外에 있어서의 勢力基盤도 상실하게 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金哲浚, 1975 앞의 책, 53~54쪽)

김철준은 백제의 요서진출설을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마민족이 “일본지역에 진출해 수립한 식민국가를 통솔”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고대무역을 주도하였고, 이와 같은 해외 세력기반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면 『국사』(1974)의 서술은 김철준의 견해와 동일하다. 자설을 정리해 『국사』(1974)에 서술했다고 생각된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 역시 주목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에 건너가 각처에서 식민지를 개척하였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사람들이 가지고 간 새로운 문화가 그 곳 토착 사회를 자극하여 일본의 고대 국가를 설립시키게 되었다. [『국사』(1974), 36쪽]

위 서술과 지도 모두 『국사』(1974)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⁴⁸⁾ 여기서 ‘일찍이 일본에 식민지를 건설한 우리나라 사람’이란 金哲浚, 1975 앞의 책, 53~54쪽에서 언급한 ‘기마민족’으로 생각된다. 『국사』(1974)에서는 한민족이 퉁구스족의 한 갈래(8쪽)라고 했고, 철기의 수용과 함께 기마 민족문화의 영향으로 목축이 성행하였다고 했다(12쪽). 부여가 반농반목의 경제였다(12쪽)고 했으며, 고구려가 일찍이 기마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였다(13쪽)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도를 배치해 민족의 이동로 가운데 하나로 「내륙아시아에서-부여-옥저」의 이동로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삼국인의 일본 진출도(36쪽), 「그림2」: 민족 이동로와 부족 국가의 지도(11쪽)

이와 같이 볼 때 김철준의 ‘일본 식민지 건설’ 이해는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기마민

47) 임기환, 2016 앞의 논문, 133~134쪽.

48) 임기환, 2017 앞의 논문, 24쪽 ; 조인성, 2017 앞의 논문, 34~35쪽.

족 일본열도정복설'(1973 『騎馬民族國家』, 講談社)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그리고 김석형(1966 『초기조일관계사』, 사회과학출판사)의 三韓分國說을 수용해 삼국의 일본 진출을 설명했다고 파악된다.⁵⁰⁾ 김철준은 백제를 비롯한 한국사 속 고대국가의 해외진출에 관한 諸說을 긍정했고, 이를 『국사』(1974)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요서진출설을 비롯한 각종 해외진출설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임나일본부설을 변형·反轉한 것으로,⁵¹⁾ 반식민주의·민족주의 역사학에 부합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후 민족주의 역사학이 역사학계의 대세를 형성하며 백제의 요서진출설 등 여러 해외진출설이 유력한 학설로 부상했고, 마침내 교과서에까지 반영되었다고 이해된다. 백제의 요서진출설·삼국의 일본진출설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서술에 반복되며 통설처럼 서술되었다.⁵²⁾

그런데 지금은 물론이고 1974년의 시점에서조차 백제의 요서진출설이 역사학계의 통설은 아니었다. 부정적인 견해 역시 일찍부터 상당하였고(한진서, 안정복, 이홍직),⁵³⁾ 통설로 내세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고 이해된다.⁵⁴⁾ 기마민족 일본열도정복설은 물론이고 삼국의 일본진출설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였다.⁵⁵⁾ 따라서 백제 요서진출설·각종 해외진출설이 『국사』(1974)에 등장한 것은 역사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민족주의 역사학에 부합했으므로, 제3차 교육과정이 민족사관 정립을 표방한 데 부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이상과 같이 『국사』(1974) 한국고대사 분야의 서술은 고대국가의 사회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된 점이 주목된다. 친족공동체를 중시한 집필자 김철준의 연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국사』(1968)와 비교해 고대국가 성립의 계기를 한사군과 같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는 민족주체성과 내재적 발전을 통해 민족주의 역사학을 지향한 당시 역사학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국사』(1974)에서는 특히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백제 요서진출설을 비롯한 각종 해외진출설을 수용했다. 그러나 각종 해외진출설이 역사학계의 통설은 아니었다. 민족사관 정립이라는 제3차 교육과정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선택적 서술이었다고 평가된다.

49) 金哲堧, 1963 「韓國古代史 研究의 回顧와 展望」 『東方學志』 6, 81쪽에서 江上波夫의 說을 소개하고 주목한 바 있다. 金哲堧, 1975 「韓國古代史學의 方向」 앞의 책, 14~15쪽에서는 약간의 비판이 더해졌지만, 비판은 任那日本府說에 한정되었다. ‘기마민족 일본열도정복설’의 주요 내용은 李基東, 1992 「騎馬民族說에서의 韓·倭 연합왕국론 비판」 『韓國史 市民講座』 11 참조.

50) 金哲堧은 江上波夫의 說보다 金석형의 說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하였다(1975 「韓國古代史學의 方向」 앞의 책, 15쪽).

51)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201쪽, 204쪽 ; 李基東, 1992 앞의 논문, 90쪽 ; 조인성, 2017 앞의 논문, 27~32쪽.

52) 임기환, 2016 앞의 논문, 133~134쪽 ; 조인성, 2017 앞의 논문, 34~35쪽.

53) 韓鎭書, 『海東經史』 권8, 地理考8, 百濟篇 ; 安鼎福, 『東史綱目』 第2下, 東城王 11年 ; 李弘植, 1965 「梁職貢圖論考-특히 百濟國 使臣 圖經을 중심으로-」 『高麗大60周年紀念論文集-人文科學篇-』 ;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이상 인용은 이도학, 2015 앞의 논문 참조).

54) 閔賢九, 1973 「1971~1972年度 韓國史學界의 回顧와 展望: 國史 古代」 『歷史學報』 60, 23~24쪽 ; 金貞培, 1974 앞의 논문, 428쪽. 1974년 이후의 글이지만, 다음도 참고된다.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 399쪽 譯註5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1-古代篇-』, 一潮閣, 195~197쪽.

55) 역사학계의 비판적인 반응은 李基東, 1992 앞의 논문, 80~82쪽 참조.

56) 李富吾, 2010 앞의 논문, 245쪽 ; 임기환, 2016 앞의 논문, 131쪽.

IV. 『국사』(1979)의 서술 변화와 정신문화

『국사』(1979)의 대단원·중단원 구성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소단원에 「개요」와 「연구 과제」가 추가되었고, 소단원 구성과 서술이 다소 변화하였다. 주요 서술 변화를 「표 2」로 정리했다.

「표 2」: 『국사』(1974)와 『국사』(1979)의 소단원 및 서술 비교

구분	『국사』(1974)		국사(1979)	
	소단원	서술	소단원	서술
1	구석기 발견	구석기 유물: 3만년 전	구석기 문화	구석기 유적: 50만년 전
2	신석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 기원전 3천년 전	신석기 문화의 발달	빗살무늬 토기: 기원전 4천년 전
3	민족의 형성	주체: 맥족, 한족	민족 형성	주류: 한족
4	한군현의 변천	내용: 위치, 축출 과정	한군현의 세력	위치 삭제
5	삼한		삼한	추가: 적석총·석관묘·옹관묘
6	삼한		삼한	추가: 반구대암각화 등 예술
7	가야 연맹		가야 연맹	추가: 일본 진출과 식민지 건설
8			백제의 중흥	추가: 웅진·사비 도읍기의 백제
9	도시의 발달		도시의 발달과 고대 무역	추가: 삼국의 국제 무역
10	[삼국] 미술		[삼국] 미술	추가: 고구려 불상, 백제 석촌동 고분
11	발해의 문화		발해의 문화	추가: 당 문화의 수용
12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	한국사 체계: 한계 강조	발해사의 의의	한국사 체계: 의의 강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기초해 변화된 서술이 있었고, 제3차 교육과정의 관점과 관련하여 변화한 서술이 있었다. 「표 2」-1·2·5·6·10은 고고학 성과에 기초했다. 특히 「표 2」-1 즉 구석기문화가 소단원으로 설정된 점이 주목된다. 1963년~1964년에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유적과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 유적이 발굴된 이후 고고학계의 구석기 연구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⁵⁷⁾ 이에 『기본방향』에서부터 구석기 시대의 독립이 요청되었고,⁵⁸⁾ 1974년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에서 독립된 시대로 설정되었다.⁵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에서 한국의 구석기(굴포리·석장리)는 전기·중기·후기로 구분되었고, 전기의 상한 연대는 50~60만 년 전으로 서술되었다.⁶⁰⁾ 『국사』(1979)는 이와 같은 고고학계의 성과를 받

57) 1970년대 중반까지의 성과는 鄭永和, 1976 「回顧와 展望(考古·美術): 舊石器時代」 『歷史學報』 72 참조.

58) “舊石器時代 및 靑銅器時代가 우리나라 歷史上 獨自의 時代로 設定되어야 할 것이 이제 當然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것에 觀한 研究는 극히 最近의 몇 篇의 論文과 단편적 報告가 있을 뿐이어서 그 理解가 一般化되지 못하고 있으며”(장신, 2016 앞의 논문, 440쪽).

59) 孫寶基, 1974 「舊石器文化」, 金元龍 外, 『韓國史』 1-韓國의 先史文化-, 國史編纂委員會. 이 책은 구석기 시대를 한국사의 시작으로 인식한 최초의 저술로 평가된다(裴基同, 1990 「舊石器時代 研究史」 『國史館論叢』 19, 國史編纂委員會, 20쪽).

60) 孫寶基, 1974 앞의 책, 11쪽. 이와 관련한 연구는 孫寶基, 1972 「石壯里의 前期·中期 舊石器 文化層」 『韓國史研究』 7 참조.

영한 것으로 이해된다.⁶¹⁾

「표 2」-8·9·11·12는 문헌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 2」-8, 즉 백제사의 경우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히 웅진·사비 도읍기의 중흥이 주목되었다.⁶²⁾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전문적인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한층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⁶³⁾ 이에 교과서 서술에서도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표 2」-9(삼국의 국제무역)과 「표 2」-11·12(발해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발해사가 주목된다.

발해사는 이미 1960년대부터 꾸준히 관심을 모았다. 『기본방향』의 「시안내용 보설」-古代-⑬에서는 “[통일]신라와 고구려 故地의 大部分을 차지한 渤海와의 南北 王朝를 對等하게 說明”해야 한다고 하였고, 「표 1」처럼 『국사』(1974)에서 발해는 통일신라의 발전과 같이 다루기 시작했다. 『국사』(1968)·『국사』(1970)까지 통일신라사의 부록과 같은 위치였다면, 이제 통일신라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 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渤海王國을 한국고대사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학계의 과제였다.⁶⁴⁾ 그러다 『국사』(1979)에서 「발해사의 의의」가 소단원으로 독립되었고, 서술의 시각의 변화했다.

「표 3」 : 『국사』(1974)와 『국사』(1979)의 발해사 의의 비교

『국사』(1974)	『국사』(1979)
<p>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과 문화적 수준이 낮은 말갈족과의 연합국가였으므로 그 문화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옛날의 고구려처럼 신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교섭할 수 없었고, 대립 관계만 그대로 계속되었다. 한편, 신라 인들도 골품 제도에 얽매어 귀족들이 보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 통일을 하려는 이상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발해와 신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립하여 항상 당나라에 이용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보다 큰 민족 통일이란 역사적 과제는 고려 시대에 와서야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p>	<p>발해는 220년 간 존속된 나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고구려가 망한 후 만주 지역을 우리의 활동 무대로 유지시켰다는 점과, 이 나라의 지배 세력이 고구려 유민이었고 그 문화적 기반이 고구려의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발해 시대는 비록 정치적으로 신라와 대립 관계에 있었으나, 만주 지역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배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고, 뒷날 거란의 침입으로 망할 때에도 그 상류층들은 고려의 민족 통일 운동에 포섭되었다.</p>

『국사』(1974)에서는 발해를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연합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때문에 문화적으로 낙후되었으며,⁶⁵⁾ 신라와 교섭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사 체계에 포함하였지만,

61)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그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1,000곳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30만 년 전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성춘택, 2016 「역사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구석기·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11쪽).

62) 申澧植, 1984 앞의 책, 21쪽. 주38에서 지적하였듯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196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196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1973)가 설립되어 활동한 점도 중요했다. 지역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연구가 촉진된 면도 있었던 것이다.

63) 崔柄憲, 1979 「回顧와 展望(韓國史): 古代」 『歷史學報』 84, 24~25쪽. 이 글에서는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 李鍾旭, 1976 「百濟의 國家形成」 『大丘史學』 11 ; 1977 「百濟王國의 成長-統治體制的 強化와 專制王權의 成立-」 『大丘史學』 12·13 ; 1978 「百濟의 佐平-三國史記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45 등의 논문이 주목되었다.

64) 李基東, 1972 앞의 논문, 16쪽.

65) 이러한 시각이 갖는 문제점은 이성시 지음, 이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96~97쪽 ; 정다함, 2011 「근대 한국의 역사 서술과 타자화된 여진족」,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앞의 책, 131~132쪽.

한계가 컸다고 본 것이다. 『국사』(1979)에서도 발해는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연합정권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안으로 말갈족을 통합하고”, 문물을 정비해 “여러 부족을 이끌어 나갈 만한 기반을 닦았다”고 하였다.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문화가 발전한 면모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에 지배층이 고려에 포섭됨으로써 민족 통일을 이루었고, 발해사는 한국사 체계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했다.

발해사 서술의 변화는 1970년대의 연구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⁶⁶⁾ 발해의 주민구성 연구를 통해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사실이 재차 강조되었고,⁶⁷⁾ 발해 지배층과 주민의 상당수가 고려에 합류한 사실이 주목되었다.⁶⁸⁾ 그리고 남북국시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⁶⁹⁾ 발해를 한국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이 발해사 연구의 축적으로 이어졌고 시각을 바꾸었으며, 그에 기초해 교과서 서술이 변화한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의 관점과 관련하여서는 「표 2」-3·4·7이 주의된다. 먼저 「표 2」-7은 『국사』(1974)에서 살펴본 해외진출설이 보강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족주체성이 약간 더 강조되었던 것이다. 「표 2」-4에서 종래 꾸준히 서술되어 온 한사군의 위치를 제하하였다는 점 역시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사군의 위치 문제는 1970년대 중·후반 ‘고대사파동’과 관련하여 한층 세심한 관심이 요청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사』(1974)는 민족사관 정립을 표방했고 또한 그에 부응하고자 하였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그조차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안호상을 비롯한 일부 국수주의적 인사들의 공세가 시작되었던 것이다.⁷⁰⁾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이를 ‘고대사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⁷¹⁾

일부 국수주의적 인사들은 ‘國史찾기協議會’를 구성(1975.10.8.)해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⁷²⁾ 1978년 10월에는 「국정 국사 교과서의 오류 시정 및 正史확인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사교과서의 국정교재 사용금지 및 正史편찬특별기구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된 요구 사항은 고조선의 국가형성 시점을 상향하고, 고조선이 보다 광역의 영역을 차지한 것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도 지금의 중국 北京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⁷³⁾ 그 영향으로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한사군의 위치에 관한 서술이나 지도가 축소·회피되었고,⁷⁴⁾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확대해 간 것으로 이해된다.⁷⁵⁾ 1980년대 정치권·언론의 호응에 힘입은 공격적인 활동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⁷⁶⁾

66) 이 시기의 연구 성과는 李基東, 1972 앞의 논문, 16~17쪽 ; 崔柄憲, 1979 앞의 논문, 29~30쪽 ; 李萬烈, 1981 「渤海」 앞의 책, 154~158쪽 참조.

67) 李龍範, 1972·1973 「渤海王國의 形成과 高句麗遺族(上·下)」 『東國大學校 論文集』 10·11 ; 1976 『古代의 滿洲關係』, 韓國日報社.

68) 李龍範, 1974 「高麗와 渤海」 『韓國史』 4-高麗貴族社會의 成立-, 國史編纂委員會.

69) 李佑成, 1974 「三國史記의 構成과 高麗王朝의 正統意識」 『震檀學報』 38 ; 1975 「南北時代와 崔致遠」 『創作과 批評』 10-4.

70) 1960년대 국수주의적 한국사 인식과 서술이 형성된 배경은 이문영, 2018 「1960~1970년대 유사역사학의 식민사학 프레임 창조와 그 확산」 『역사문제연구』 39, 221~232쪽 참조.

71) 李基白, 1979 「1976~1978年度 韓國史學界의 回顧와 展望: 總說」 『歷史學報』 82 ; 1991 『韓國史像의 再構成』, 一潮閣, 118~119쪽.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 혜안 ; 기경량, 2017 앞의 책, 16~20쪽 ; 조인성, 2016 앞의 논문, 5~9쪽 참조.

72) 그 활동과 주장은 김대현, 2018 「사이비역사학자들의 이상한 민족주의-上古史에 숨은 군부독재의 유산-」 『學林』, 259~264쪽 참조.

73) 조인성, 2016 앞의 논문, 5~6쪽.

74) 李富五, 2010 앞의 논문, 247~249쪽 ; 임기환, 2017 앞의 논문, 26쪽.

75) 조인성, 2016 앞의 논문, 12~23쪽 참조.

1974~1979년 일부 국수주의적 인사들의 공세 역시 역사학계에 위기의식을 갖도록 할 만큼 위협적이었다.⁷⁷⁾ 그러나 교과서 서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문교부 등 관계 당국에서 국수주의적 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사법부(1979.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도 패소 판정을 내림으로써 교과서 서술에 대한 개입을 차단했다.⁷⁸⁾ 그러므로 「표 2」-4가 ‘고대사과동’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방향』의 「시안내용 보설」-古代-⑩처럼 한사군 서술을 축소하고, 발전의 동력을 내부에서 찾고자 한 것은 당시 역사학계가 추구한 방향이기도 하였다. 『국사』(1979)에서 한사군의 위치에 관한 서술을 제외한 것은 그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이는 민족주체성의 강조와 민족사관 정립이란 제3차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하였다고 생각된다.

『국사』(1979)의 서술 변화와 관련하여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사용된 중·고등학교 독본용 역사교과서 『시련과 극복』도 주의된다. 1977년 『국사』(1979)에 통합·반영되었다고 하는데,⁷⁹⁾ 한국고대사 분야의 서술에서는 직접 반영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⁸⁰⁾ 다만 「개요」가 주목된다. 「개요」는 민족의 형성·발전을 중심으로 일종의 서사구조를 갖고 있는데, 관련 서술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4」: 『국사』(1979) 중단원 개요의 민족 관련 서술

구분	단원	개요
1	선사 시대의 문화	기원전 10세기부터는 무늬 없는 토기 제작인들이 나타나 청동기 문화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발전시켜 갔다. 우리 민족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의 주인공으로 대두하였다.
2	부족 국가의 성장과 그 문화	청동기 문화가 성립하여 크게 발달한 부족들은, 아직 신석기 문화에 머무르고 있던 씨족 사회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중략) 여러 부족들이 다시 통합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족 연맹 형태를 가지다가, 점차 정비된 고대 국가의 정치 체도를 가지게 되었다.
3	삼국 시대의 발전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통합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고대 무역 국가로 발전하다가, 뒤늦게 발전한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상실하는 열세에 몰렸다. (중략) 신홍 신라는 당과 연결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다시 여·제 유민과 연합하여 당을 우리 나라에서 내쫓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4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고대인의 정신이, 외세를 물리치고 고대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나, 고유 전통을 보다 세련시키고 확대된 문화 세계를 개척함에 있어서 비상한 힘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5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삼국의 민족 통일은 안으로 삼국의 항쟁을 그치게 하였고, 밖으로는 강한 통일 세력으로써 외민족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통일된 민족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76) 전말은 윤종영, 1999 앞의 책에 자세하다.

77) 李基白, 1979 「1976~1978年度 韓國史學界의 回顧와 展望: 總說」; 1991 앞의 책, 118~119쪽.

78) 윤종영, 1999 앞의 책, 28쪽.

79) 김한중, 1991 앞의 논문, 78~79쪽; 2006 앞의 책, 47~48쪽; 2013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36~238쪽.

80) 『시련과 극복』의 구성과 서술은 이난영, 2004 「1970년대 박정희 집권기 국사교육의 특징-중·고등학교 독본용 교과서 『시련과 극복』 분석을 중심으로-」, 『典農史論』 10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민족은 기원전 10세기 청동기문화와 함께 형성되었다고 하였고,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로 국가체제를 갖추며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세와 항쟁하는 한편, 통일을 지향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로서 완수되었다고 하였다. 국가 중심의 민족 이해였다고 평가된다.

이 중 「표 4」-4가 주목된다. 이를 보면 고대국가 건설과 문화세계 개척에 고대인의 정신이 중요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고대인의 정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삼국 시대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힘이 보다 넓은 세계를 추구하면서 정렬적으로 살았던 시대였다. 그리고, 세속 5계, 임신 서기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 윤리를 중시하고 명예를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이러한 고대인의 정신에서 삼국 사회가 조직되었고, 국가가 건설되었으며, 문화가 발전하였다. [『국사』(1979), 29쪽]

삼국의 고대인은 “넓은 세계”를 추구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역확장이나 해외 식민지 건설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그들의 시대정신은 화랑도를 통해 설명되었다.

이병도, 『국사』(1965)에서 화랑도는 “씨족 사회의 공동 정신의 계승 기관이고 그 발전 기관”(39쪽)이었다고 하였다. 씨족사회의 공동규범을 교육하는 데서 유교와 불교를 수용해 발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석호, 『국사』(1968)도 씨족 공동 사회 시대에 공동 사회의 규율을 교육한 데서 발생했다(42쪽)고 하였고, 『국사』(1970)도 씨족 사회의 청년 집단에서 기원한다고 하였다(25쪽). 화랑도가 원시사회의 미성년 남성집회에서 유래했다고 한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의 연구⁸¹⁾를 수용한 것이다.

『국사』(1974)에서도 화랑도의 기원은 씨족 공동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찾을 수 있다(31쪽)고 하였다. 다만 『국사』(1979)의 「개요」와 같은 설명은 화랑도가 삼국의 공통적인 정신이자 삼국의 발전을 추동했다고 본 점에서 기왕의 서술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이병도의 『국사』(1968)에서 살필 수 있다.

이병도의 『국사』(1968)에서 화랑도는 삼국의 국민정신으로 설명되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기 승화의 정신이 바로 공동체적 정신인데, 신라의 화랑 제도가 그 좋은 예이다. (중략) 삼국은 모두 이러한 공동체적 정신이 왕성할 때에 성하고, 이러한 정신이 쇠퇴할 때에 나라를 잃었던 것이다.”(39~40쪽)고 하였다. 고유의 민족정신을 상징하고, 이를 공동체정신·국민정신으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신채호의 郎家思想이 상기된다.⁸²⁾ 신채호는 신라 화랑도의 낭가사상이 민족 고유의 仙敎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선교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시작해 화랑도와 고구려의 선배[仙人] 및 백제의 수도[蘇塗] 등으로 계승되었는데, 낭가사상의 성쇠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하였다.⁸³⁾ 삼국의 공통적인 정신으로 화랑도를 주목하고 발전의 계기로 본 『국사』의 「개요」의 설명은 그와 통한다.

낭가사상과 같은 고유의 민족정신은 신채호 민족주의 역사학의 핵심이었다.⁸⁴⁾ 신채호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여러 지식인처럼 國粹·國魂(nationality) 즉 고유의 민족정신

81) 三品彰英, 1930 「新羅の奇俗花郎制度に就いて-新羅社會史の研究其一-」 『歴史と地理』 25-1 外; 1974 『新羅花郎の研究』, 平凡社; 李元浩 譯, 1995 『新羅花郎의 研究』, 集文堂.

82) 申采浩, 1910 「東國古代仙敎考」 『大韓每日申報』(03.11), 1면(<https://www.bigkinds.or.kr>).

83) 낭가사상에 관해서는 이기백, 1963 「民族主義史學의 問題」 『思想界』 2월호; 1971 앞의 책, 16~17쪽; 趙仁成, 1985 「申采浩의 郎家思想에 對한 一考察-「東國古代仙敎考」를 中心으로-」 『慶大史論』 趙仁成; 박성현, 2015 「박정희 정권의 ‘花郎道’ 교육」 『역사와 현실』 96, 59~60쪽 참조.

84) 李基白, 1963 「民族主義史學의 問題」; 1971 앞의 책, 16쪽.

을 중시했다.⁸⁵⁾ 고유의 민족정신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학은 이를 위한 학문이자 운동이었다.⁸⁶⁾ 그런데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추구한 자강은 서구와 일본의 국민국가·제국을 지향했고, 따라서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현실인식과 궤를 같이 했다. 國粹의 國은 제국일본으로 수렴될 수 있었다. 실제 화랑도의 민족정신은 제국의 이념과 친일의 논리에 활용되었다. 이병도의 경우 제국일본의 학병을 권유하는 데 화랑의 忠國을 제시하였다.⁸⁷⁾

해방 이후 남한에서 화랑도는 국민국가의 이상으로 재현되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이선근이었다.⁸⁸⁾ 그는 화랑도가 민족 고유의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고, “삼국 전체에 걸쳐 훨씬 전부 터 우리 민족 생활 속에 자리잡아” 왔다고 하였으며, 강력한 “애국운동, 국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향상”했다고 하였다.⁸⁹⁾

이처럼 이선근은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제시된 화랑도 이해를 수용해 국민국가의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승만 정부·박정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를 중등 교육에 반영하였다. 이미 연구된 것처럼 그의 저술은 『시련과 극복』(1977)에 반영되었다고 분석된다.⁹⁰⁾ 이선근은 1972년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⁹¹⁾ 이로 보아 『국사』(1974)와 『국사』(1979) 「개요」의 화랑도 서술은 이선근과 무관치 않았다고 생각된다.

화랑도를 통한 민족정신의 강조는 박정희 정부의 정신문화 강조와 통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서구의 근대국가를 발전의 모델로 제시하고 근대국가 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이에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내재하였다. 서구 물질문화에 대한 열등감에 짝하여 정신문화가 강조되었다. 정신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물질문화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서구의 물질문화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비단 정권의 이념일 뿐 아니라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 공유된 인식이기도 했다.⁹²⁾

그러나 역사학계의 보편적 이해는 아니었다. 예컨대 이기백은 “花郎徒를 「花郎道」로 쓰고 이것을 民族의 자랑이니 榮光이니 偉大니 하는 表現을 쓰는 것은 學問에서 삼가야 할 일일 것이다.”고 했다.⁹³⁾ 이기백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유성을 강조한 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⁹⁴⁾ 고유의 민족성론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⁹⁵⁾ 이 지점에서 『국사』(1974)와 『국사』(1979) 「개요」의 화랑도 서술은 당시 역사학계에서 추구한 민족주의 역사

85) 申采浩, 1908 「國粹保全說」 『大韓每日申報』(09.12), 1면(<https://www.bigkinds.or.kr>).

86) 이상 國粹에 관해서는 愼鏞廈, 1980 「申采浩의 愛國啓蒙思想(上)」 『韓國學報』 19, 一志社, 40~43쪽; 李智媛, 2004 『日帝下 民族文化 認識의 展開와 民族文化運動-民族主義 系列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29~30쪽, 35~43쪽;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329~342쪽.

87) 李丙燾, 1943 「出陣學徒에게 보내는 말」 『每日新報』(11.26); 정종현, 2008 「국민국가와 화랑도-애국계몽기에서 대한민국 건국기까지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 황종연 엮음, 『신라의 발견』, 동국대학교출판부, 224~238쪽.

88) 李瑄根, 1949 『花郎道研究』, 海東文化社發行; 1974 『화랑도와 삼국 통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종현, 2008 앞의 책, 246~252쪽 참조.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박찬승, 2008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관」,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편,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Ⅲ: 1945년 전후』, 이연출판부 참조.

89) 리선근, 1974 앞의 책, 60~61쪽, 67쪽.

90) 박성현, 2015 앞의 논문, 53~56쪽.

91) 윤종영, 2001 앞의 논문, 275쪽.

92) 황병주, 2008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265~271쪽.

93) 李基白, 1971 앞의 논문, 13쪽.

94) 李基白, 1963 「民族主義史學의 問題」 1971 앞의 책, 20~22쪽.

95) 李基白, 1963 「韓國民族性的 長短點 論議」 『思想界』 45월호; 「民族性論 插疑」 1978 앞의 책.

학과 분기된다. 화랑도를 통한 고유의 민족정신 강조는 박정희 정부의 정신문화 강조에 부합했고, 따라서 그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국사』(1979)는 『국사』(1974)와 비교해 서술이 다소 변화하였고, 「개요」가 추가되었다. 서술의 변화는 1970년대 고고학·문헌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 다수였다. 일부는 민족주체성 강화와 민족사관 정립이란 제3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을 지향한 역사학계 일반의 인식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요」에서 민족·국가 중심의 서사구조를 설정하고 고유의 민족정신을 강조한 점은 해방 이후 민족주의 역사학과의 분기점으로 주의된다. 고유의 민족정신은 박정희 정부의 정신문화에 호응한 것으로, 『국사』(1979)의 특징 중 하나로 생각된다.

V. 맺음말

1973년 문교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고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성과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⁹⁶⁾ 그러나 국정으로 전환된 『국사』(1974)의 가장 큰 문제는 “學界의 전체적인 연구 업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기보다는 執筆者 개인의 學說을 中高等學生들에게 강요하는 성격의 편파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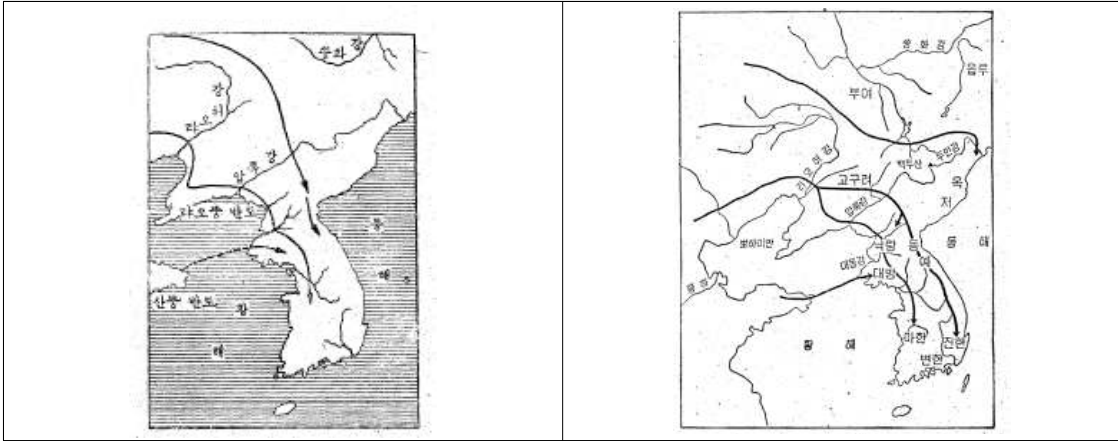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국사』(1974) 한국고대사 분야의 단원 구성과 서술은 1960~1970년대 역사학계의 성과와 지향을 공유했지만, 집필자 김철준의 연구와 학설이 중추를 구성했다. 단원 구성에 반영된 시대구분 문제와 고대국가 성격 서술이 대표적이다. 『국사』(1974) 한국고대사 서술의 또 다른 특징은 민족주체성이 한층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국사』(1974)에 처음 등장한 백제 요서진출설을 비롯한 각종 해외진출설이 주목된다. 이는 역사학계의 통설이 아니라 김철준을 비롯한 일부 역사학자 견해였다. 『국사』(1974)에 서술된 각종 해외진출설은 민족주체성의 확립이란 제3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선택적 서술이었다.

『국사』(1979)의 서술은 『국사』(1974)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된 서술의 대부분은 고고학·문헌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였다. 다만 「개요」에서 민족·국가 중심의 서사구조를 설정했고, 고유의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고유의 민족정신을 강조한 서술은 당시 역사학계 일반의 민족주의 역사학과 분기점으로, 박정희 정부의 정신문화 강조에 호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단편적이지만 이 역시 제3차 교육과정기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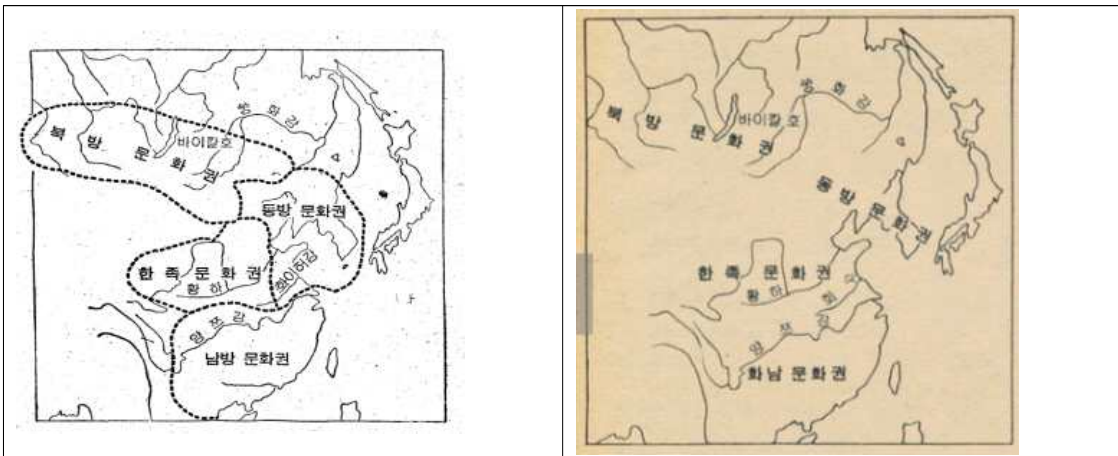
96) 한기욱, 1973 「國史教科書의 國定化方案報告(文敎部)」(06.09).

97) 李基白, 1976 「1973~1975年度 韓國史學界의 回顧와 展望: 韓國史 總說」 『歷史學報』 72, 3쪽. 李元淳, 陳英一, 鄭善影, 1974 앞의 논문, 39쪽에서도 교육내용의 선정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별첨



「그림 3」: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이병도, 『국사』(1968), 3쪽], 민족 이동로와 부족 국가의 지도[『국사』(1974), 11쪽]



「그림 4」: 선사시대의 문화권[『국사』(1974), 7쪽], 선사 시대 문화권[『국사』(1978), 8쪽]

제3차 교육과정 국정 고등국사의 편찬과 중세사 서술

황인규(동국대학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국사교육의 강화와 국사 교과서 국정화
 - 1. 국가 주도의 국사교육 강화와 국사학계
 - 2. 국정 국사와 1종 국사의 편찬과 발행
 - III. 국정 국사의 서술내용 비판과 중세사 서술
 - 1. 국사학계의 국정 국사 비판과 중세사 서술 체재
 - 2. 제3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의 중세사 서술 내용 검토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가 자리 잡은 해방이후 검인정 체제와 국정 체제가 번복되는 상황이다.¹⁾ 특히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시도는 한국 사학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현장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검인정 국사 발행체제로 환원되어 가고 있다.

국사 교과서의 가장 이상적인 발행체제는 자유발행제이겠지만 현단계는 그것이 아직 시기상조인 듯하여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한국역사의 연구나 한국 역사교육계와 교육현장의 현실은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 중세불교사를 중심으로 한국 중세사에 천착하면서 대학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사와 교육 분야를 넘나들면서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기 앞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 가장 이상적인 방도를 찾고 있다.²⁾ 역사교육과 역

1) 교과서에 관련한 대표적인 단행본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이종국, 『대한교과서사 : 1948~199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허강 외, 『한국편수사연구(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허강 외,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허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일진사, 2004.; 허강 외, 『한국 교과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2006.

2) 발제자는 역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역사교육 관련 다음과 같은 줄고만을 발표했을 뿐이다.(황인규, 「중등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려후기 불교사의 서술과 문제점」, 『역사와 교육』 9, 2000.; 황인규, 「중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 서술 체재와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현행 교육과정까지」, 『전법학연구』 4, 2013.; 황인규, 「중앙불교 전문학교의 개교와 학풍」, 『불교 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7.; 황인규, 「하정 안계현과 한국불교사학」, 『동국사학』 41, 2006 ; 황인규, 「한국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서술과 고승」, 『한국불교사연구』 1, 2012) 발제자는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사상사를 공부하고 역

사연구는 절연히 분립되기 보다 상호 소통이 되어야 하며 역사연구는 역사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³⁾ 역사교육이 역사연구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앎는다면 역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파주 용미리 불상은 고려초에 제작한 것으로 교과서에 실려 교육되고 있지만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초의 것으로 밝혀져 비역사적 사실을 교육하고 있다.⁵⁾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3차 교육과정기는 1973.2~1981.12(전기 1973.2~1977.8 후기 1977.8~1981.12)로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에 걸치는 8년의 기간으로 대부분 박정희 정권시기이다. 박정권기는 1960년대의 박정희 정권 전기의 제3공화국시대,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 후기의 제4공화국시대인 유신시대에 해당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1960·70년대는 본격적인 최초의 ‘문교사’에서는 교육과정을 1960년대를 ‘개혁기’와 1970년대를 ‘발전기’로 간주하였으며⁶⁾,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⁷⁾에서 국가교육체제의 확립과 교육기회 확대로 규정하였다. 문교정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교부에서 간행한 『문교40년사』⁸⁾에서는 1960년대의 문교정책으로 민족중흥을 위한 교육의 모색을 들면서 경험중심교육 및 교육의 사회화 추진을, 1970년대의 문교정책으로 주체성 있는 교육의 문교정책으로 주체성 있는 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학문중심교육 및 특수교육의 강화를 대표적인 항목으로 들고 있다.⁹⁾ 제3차 교육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민족 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이었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 마디로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連鎖史일 뿐이었다.¹⁰⁾ 우리의 오천년 역사는 첫째로 시종일관 남에게 밀리고 기대어 살아온 사대의 역사였으며, 둘째로 유교 때문에 남성적인 기질을 상실하고 소아병적인 당쟁에만 몰두했던 분열의 역사였으며, 셋째로 한글 외에는 독자적인 문화나 철학을 전혀 갖지 못하고 남의 것에만 영합하는 타율의 역사였으며, 넷째 경제발전에 관한 열망도 창의적인 의욕을 전혀 갖지 못했던 모방의 역사였다.¹¹⁾ 이러한 박정희의 역사인식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질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¹²⁾

본 연구는 역사와 교육학회의 기획 학술 주제인 제3차 국사교과서의 편찬과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모두가 아다시피 제3차 국정교과서는 국가 주도의 국정 국사교과서 발행

사교육 강의를 담당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불교역사 교육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장차 이러한 연구를 진척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발제지를 작성하였으나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점 해량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3) 황인규, 「정체성과 역동성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한국사연구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138, 역사교육연구회, 2016.
- 4)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2014, 108쪽, ‘파주 용미리 마애불입상(경기 파주) 고려시대 지방의 불상 양식을 보여준다.
- 5) 용미리 마애불상은 그동안 고려초기 또는 11세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알려져 왔으나 불상의 향 우측 바위 위에 成化 七年 七月로 시작하는 발원문이 있어 1471년(성종 2)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경화, 「파주 용미리 摩崖二佛竝立像의 조성시기와 배경-성화 7년 조성설을 제기하며」, 『불교미술사학』 2, 2005, 71~94쪽 참조
- 6)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출판국, 1974.
- 7) 이혜영 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해방 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8.
- 8) 문교40년사 편찬위원회,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 9) 오성철은 한국교육사의 시대구분을 제1기 (1945-1967): 국가교육체제의 성립과 학력주의 사회의 태동, 제2기 (1968-1994): 교육의 국가주의적 재편과 대중교육사회의 형성, 3기(1995-현재): 교육의 분권화·민주화와 교육 불평등의 심화로 규정하였다. 오성철, 2015, 「한국 현대교육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시론」, 『교육사학연구』 25-2.
- 10)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1997, 252쪽.
- 11) 앞의 책, 251~257쪽.
- 12)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2007, 47쪽.

의 시작이며 최근 국정 국사교과서 발행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세 부분인 고려와 조선시대의 부분을 중심으로 제3차 국정 고등국사교과서의 편찬 체제와 서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³⁾

II. 국사교육의 강화와 국사 교과서 국정화

1. 국가 주도의 국사교육 강화와 국사학계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해방직후 미군정 및 교수 요목기(1945. 8~1954. 4)이후 현재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운용된 완벽한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 체제'였다. 교과서(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교육한 것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사용, 전달한 것이다.¹⁴⁾

1945년 해방후 국사 교육은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이 최대 과제였지만 남북 분단의 상황하에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워 사회생활과(Social Study) 도입, 국사는 이에 통합되어 제1차, 제2차 교육과정기까지 계속되었다.¹⁵⁾

미군정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天圓 吳天錫(1901~1987), 편수국 고문관 P.S. Anerson 등과 더불어 사회생활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¹⁶⁾ 반면에 미군정 학무국 편수관으로 있던 海圓 黃義敦(1890~1964)은 고석균과 함께 사회과를 국사와 성격이 다른 지리 공민과 함께 가르치는 것은 교육에 유용하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사회생활과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크게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리 역사 공민을 합쳐서 미국식을 본떠 보려고 하는 사회생활과라는 과목을 둔다면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순수한 우리의 것이 외국의 것을 輸入해서 잡탕을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국사를 팔아먹지 못하겠다.¹⁷⁾

당시 이병도와 김상기가 진단학회의 이름으로 『국사교본』을, 황의돈¹⁸⁾이 『초등국사』를 집필하였으며 이 두 책은 해방이후 오랫동안 영향을 크게 끼쳤다. 그런데 이병도는 1925년 12월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사의 왜곡과 원활한 식민통치 수행을 위해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1925년 朝鮮史編修會로 개칭)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렇듯 이병도와 함께 신석호는 조선사편수회의 修史官補나 修史官으로 참여한 후 남한의 사학계를 장악하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을 그대로 이식시켜 놓았다.¹⁹⁾ 조선사편수회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國史館으로 계승된다.

13) 제3차 교육과정에 교과서 서술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차미희 외에는 거의 없다. 차미희,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 25, 2006.

14) 함수곤, 『한국편수사』 1.

15) 1947년부터 미군정에 의한 교수요목이 발표되었고, 그 규정은 1954년까지 적용되었던 것이다.

16) 허대영, 2005, 『미군정기 교육정책과 오천석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건, 「미군정기 오천석의 교육정책 수립과 역사교육」, 『역사와 교육』 21, 2015.

17) 박광희가 1965년 9월 1일 성정여고 교무실에서 당시 편수관이었던 최병철과 인터뷰한 구술이다. 박광희, 1965, 「한국사회과의 성립과정과 그 과정변천에 관한 一研究」,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50쪽 재인용.

18) 황의돈은 1945년 9월 일제시기 많은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던 『중등조선역사』를 일부 수정하여 『중등국사』를 간행하였다. 민성효, 「해방 직후(1945~1948) 황의돈의 국사교육 재건 활동」, 『역사교육연구』 21, 2015, 109~113쪽.

이 국사관은 우선 첫 번 예산 70여 만 원을計上하여 景福宮 안에 있는 殿閣을 이용하여 기왕에 편찬된 역사와 일인들이 왜곡한 역지 內鮮一體를 근본적으로 부셔 새로운 사관에서 국사를 史史하기로 되어 전임 편수위원과 아울러 학계의 권위들로 조직된 국사편찬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리하여 기왕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한 사료와 자료 전부를 인계하고 새로이 수집·정리·분류·보존하여 정사편찬의 국가적 사업에 기여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관장은 俞億兼 문교부장이 겸임하였다.²⁰⁾

이 국사관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인데 신석호가 국사관 초대 관장이 되었다. 신석호와 이병도가 집필한 국사 교과서는 해방이후 제3차 교육과정 이전의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보듯이 해방이후 한국의 최대의 과제는 일제의 식민사관의 청산이었지만 미군정의 미국식 민주주의 사회생활과(혹은 사회과)의 도입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이다. 이러한 문제는 1945년 9월 16일 미군정의 자문기구인 조선교육심의회(위원 100여명)에서 다루어졌다. 반대 의견측에서는 “古記에서 나온 말이요 따라서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 용어”²¹⁾일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즐겨 쓰던 八宏一宇라는 말과 비슷하다”²²⁾라고 했으며, 신남철과 같은 사회주의계에서도 ‘팔굉일우’가 ‘홍익인간’으로 변하였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무엇을 인민의 생활과 민족해방에 기여 공헌한단 말이나”고 비판하였다.²³⁾

백낙준 위원은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 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념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하였다.²⁴⁾ 그러면서 이를 영어로 “Maximum Service to Humanity”로 번역·소개함으로써 미군정 당국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홍익인간 이념을 제안한 것은 백낙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대한민국 23년 10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 김구가 대한민국건국강령에 홍익인간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公理임’²⁵⁾이라 하였다.

홍익인간 정신은 필자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元曉는 『增一阿含經』 31권, 역품에 나오는 붓다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 ‘弘益衆生’이라고 하였다. 그 후 당의 고승 道宣(596~667)이 찬술한 『속고승전』의 「僧邕傳」에서 ‘중생을 먼저 제도하고, 인간을 두루 이롭게 하는 것(濟度爲先 弘益人間)이 출가승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일연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²⁶⁾ 홍익인간 이념이 실린 단군왕검의 사실은 제2차 교육과정기인 1963년 8월 8일 국사교육 내용을 통일하면서 단군을 민족의 신화로만 규정되게 되어 훗날 불씨를 남기게 된다.²⁷⁾

그후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으며, 1956년에 우리나라에 본격

19)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121~164쪽.

20) 『동아일보』 1946년 5월 4일,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2, 550쪽.

21) 교육개혁심의회, 『한국 교육이념의 정립』, 서울: 정민사, 1986, 116쪽.

22) 김성재, 「한국 교육의 과제와 기독교의 역할」,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2.

23) 신남철, 「민족문화론」, 『전환기의 이론』, 백양당, 1948, 168쪽.

24)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문교사』, 1953, 25쪽.

25) 교육개혁심의회, 앞의 책, 113~118쪽.

26) 민영규, 『용재선생과 홍익인간의 문제』(백낙준전집 10 찬하와 추모), 연세대출판부 1995, 109쪽, 110쪽. ; 정영훈,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22-1, 1999.

27) 『경향신문』 1963년 8월 8일.

적이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우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은 도의교육이 가장 강조되어 홍익인간 이념은 그리 국가 또는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홍익인간 이념을 문제를 포함하여 그 무렵 초·중·고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가 상호종형적인 연관성이 없이 내용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맞춤법이나 그 밖의 표기법조차도 제각기 달라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다.²⁸⁾

해방이후 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는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 1차, 제2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검인정 체제였다. 해방 이후 최초의 국사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국사교본』은 상고와 중고사 부분은 김상기, 근세와 최근세 부분은 이병도가 집필하였다. 이 『국사교본』은 1912년 최초로 한국통사인 『조선통사』(일어판)를 쓰면서 당쟁 등을 부각했던 다이스케(林泰輔, 1854~1922)의 『朝鮮史』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는 등 일제의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으며²⁹⁾, 김상기 역시 쓰다 소기치(津田 左右吉, 1873~1961)의 사학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³⁰⁾ 그리고 대표적으로 친일파로 알려진 최남선은 “내가 친일파인가 아닌가는 나의 저서가 굉장히 팔리는 것으로 보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³¹⁾라고 하여 최남선의 교과서도 해방이후 적잖이 사용되었던 듯 하다. 이에 문교장관 안호상은 1948년 10월 11일에 개최된 전국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이광수의 교과서와 더불어 최남선의 교과서³²⁾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³³⁾

하지만 이병도를 위시하여 친일적 활동을 하였던 신석호의 교과서는 제2차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³⁴⁾은 물론이고 해방이후 간행된 수십 종의 국사 교과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다.³⁵⁾ 이병도가 집필한 국사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의 공저 『국사교본』(1946), 『새국사교본』

28) 「충실한 교과서는 언제나……」, 『동아일보』, 1960년 1월 7일.

29) 김용선,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서술」, 『역사학보』 31, 1966, 129쪽.

30) 진단학회, 『역사가의 遺香』, 일조각, 1991, 265쪽.

31) 『국제신문』 1948.10.7, 각도 학무국장회의, 학원에서 李光洙·崔南善 저서의 축출을 명령.

32) 최남선이 집필한 교과서는 『중등국사』, 『조선분위 중등중앙사』, 『동양분위 중등서양사』, 『조선역사지도』, 『성인교육 국사독본』, 『쉽고 빠른 조선역사』, 『국민조선역사』 등이 있었고 이광수는 『문장독본』 등을 집필하였다.

33) 「문교부, 전국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친일파 교과서 사용금지 등을 지시」, 『조선일보』 1948년 10월 12일, ; 『국제신문』 1948.10.7, 각도 학무국장회의, 학원에서 李光洙·崔南善 저서의 축출을 명령.

34) 제2차과정 검인정 중학교 국사 교과서(중학교 - 71년판부터는 부분개정 반영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강우철, 이정인, 이근수, 강석오, 단춘배, 『중학교 새사회2』, 탐구당, 1967/ 김상기, 조의설, 육지수, 황산덕, 김경수, 고승제, 『중학 사회 2』, 장왕사, 1966 / 김성근, 윤태림, 이지호, 『중학교 사회 2』, 교육출판사, 1965 / 박성봉, 최영희, 김계숙, 선우형순, 이영기, 강대현, 『새로운 사회2』, 홍지사, 1967 / 박성봉, 최영희, 김계숙, 박덕배, 선우형순, 이영기, 강대현, 『새로운 사회2』, 홍지사, 1973 / 변태섭, 문홍주, 이정환, 최재희, 한태연, 김경섭, 『중학교 사회2』, 법문사, 1971 / 역사교육연구회(이원순, 김철), 김준섭, 김성희, 김두희, 박노식, 조동규, 『새로운 중학 사회 2』정음사 1967 / 유진오, 한우근, 고병익, 민석홍, 서수인, 『사회2』, 일조각, 1971 / 이홍직, 민영규, 김성식, 김기서, 박일경, 김준보, 서석순, 한기연, 『중학 사회2』, 동아출판사, 1966 / 조좌호, 김중환, 최문환, 이찬, 『중학 사회2』, 영지문화사, 1970 / 전해중, 김철준, 이보형, 오병현, 김명윤, 최복현, 이정면, 『중학 새사회2』, 민중서관, 1973 / 황철수, 오배근, 최정희, 노도양, 이종황, 권혁소, 최병철, 『새로운 사회2』, 사조사, 1967이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이병도, 『국사』, 일조각, 1968 / 김상기, 『국사』, 장왕사, 1968 / 한우근, 『국사』, 을유문화사, 1968 / 변태섭, 『국사』, 법문사, 1968 / 이원순, 『국사』, 교학사, 1968 / 이상옥, 차문섭, 『국사』, 문호사, 1968 / 이현희, 『국사』, 실학사, 1968 / 신석호, 『국사(인문계)』, 광명출판사, 1968 / 이홍직, 『국사(인문계)』, 동아출판사, 1968 / 윤세철, 신형식, 『새로운 국사』, 정음사, 1968 / 민영규, 『최신 국사』, 양문사, 1968 /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1968 등이다. 박진동, 「해방후 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의 추이」, 『역사교육』 88, 2004 .

35) 당시 검정교과서들의 점유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에 파악된 저자들의 인세수입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추정해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이병도(27.6%), 신석호(17.7%), 한우근(11.4%), 이홍직(10.3%)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변태섭(0.9), 민영규(0.02), 정형우(0.02), 이현희(0.02), 윤세철(0.004), 신형식(0.004), 이상옥(0.004), 차문섭(0.004)의 순이었다(단위 %). 당시 저작권세에 대한 정보는 앞의 보고서에 정리되어

(1948, 중학교용), 『우리나라의 생활(역사)』(1949, 중학교용), 『우리나라의 생활(역사)』(1951, 중학교용), 이병도·김정학, 『(고등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문화의 발달』(1)(1953, 고등학교용), 제 1차 교육과정기 『중등 국사』(1956, 중학교용), 『국사』(1956, 고등학교용), 제2차 교육과정기 『국사』(1968, 고등학교용) 등이다. 그리고 신석호가 집필한 국사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의 『중등국사』(1948, 중학교용), 『우리나라의 생활(국사 부분)』(1952, 중학교용),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국사』(1956, 중학교용),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사(인문계)』(1968, 고등학교용), 제2차 교육과정기의 신석호·박성수, 『세계사』(1968, 고등학교용), 신석호 외, 『역사부도』(1971, 고등학교용), 제3차 교육과정기 신석호·박성수, 『세계사』(1975, 고등학교용)이다.³⁶⁾

이 가운데 이병도와 신석호의 교과서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교과서 목차 대단원만 보았을 때 당쟁의 격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교과서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보이지만 검인정 교과서 마다 조금씩 다른 서술방식 표기법과 학설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점 등이 적지 않았으며 학설이 갈리고 있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 근대화는 병자수호조규 이후로, 왕의 대수는 고려 이후만 표시케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군은 민족신화로만 취급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한 사실은 고조선에 취급한 것이다.³⁷⁾ 또한 단군,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삼한의 위치, 삼국의 건국 및 그 연대(고구려 백제 신라 순), 신라의 삼국통일연대(676년), 국내성과 환도성 동일, 신라의 불교공인연대(법흥왕 14년), 위례성의 위치(한강) 등이다. 예컨대 지적한 불교 서술 부분을 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라의 강성) 그 다음 법흥왕 때에 관제와 율령과 백관의 공복 등 여러 제도가 다시금 갖추어지게 되고 불교가 자못 행하여졌으며 (국사교본)

(3. 삼국의 학술과 사상-신라) 법흥왕(法興王) 14년(527)에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선포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법흥왕의 아들 진흥왕은 국토를 넓히며, 불교를 신봉하여, 불교의 학문적인 전개와 신앙으로의 발전에 자리를 잡게 하였다. 이에 사회의 정돈에 따라, 불교는 교리(教理) 연구에서부터 발전을 하였다.(제 1차 과정 고등학교 국사, 홍이섭)

(4. 삼국의 신앙와 화랑도) 이어 불교 신앙은 이차돈의 순교에서부터 차츰 널리 퍼지며, 법흥왕과 진흥왕이 국왕으로 불교를 신봉함에 따라.(제 1차 과정 고등학교 국사, 홍이섭)

(1. 삼국의 형성과 통일국가의 출현-신라의 발전) 다음, 법흥왕 때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며, 불교를 공허하여 사상 통일을 꾀하고.(제2차 고등학교 국사, 1968)

신라의 불교 공인에 관련한 서술이 다르고 다소 불분명한 시기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사 교과서의 표음도 낙랑, 粘蟬縣(염제현, 점선현) 임둔(감둔), 현도, 견훤, 내물왕, 거란(걸안, 글안), 신돈(신둔), 안향(안유) 등 제 각기였다.³⁸⁾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중 지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김상기(0.2%), 변태섭(0.16%), 이홍직(0.12%), 김성근(0.1%) 등의 순서였다.⁴⁰⁾ 이외에 조자호(0.08), 김철준(0.075), 박성봉(0.07), 최영희(0.07), 한우근(0.06), 황철수(0.04), 강우철(0.015), 이원순(0.009), 김준섭(0.009)의 순이었다(단위 %). 이신철, 앞의 논문 참조.

36) 유홍렬의 교과서도 유통 상황으로 보아 많이 사용된 듯하다. 유홍렬의 국사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의 『우리나라 역사』(1949, 중학교용), 『우리나라 역사』(1949, 중학교용), 『한국 문화사』(1950, 고등학교), 제 1차 교육과정기의 『우리나라 역사』(1956, 중학교용), 『한국사』(1956, 고등학교용)이다.

37) 『경향신문』 1963년 8월 8일 국사 교과를 통일.

38) 「이설을 정리」. 『동아일보』, 1963년 8월 8일.

나치게 전문적인 것이나 신빙성이 희박한 것은 피하고 중·고교 학생에게 알맞게 고치고자 하였다.³⁹⁾

※ 제2차 부분 교육과정 고등국사 1968

이병도, 『고등국사』, 1968	신석호, 『고등국사』, 1968
5. 고려 시대의 생활 I. 고려 왕조의 확립 II. 고려의 사회 III.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IV. 고려 전기의 문화 V. 하극상과 귀족 사회의 동요 VI. 자주성을 잃은 고려 VII. 고려와종의 몰락 VIII. 고려문화의 변천 6. 조선 전기의 사회 I. 조선 왕조의 확립 II. 조선 초기의 경제와 사회 III. 조선 전기의 학술과 사상계의 동향 IV. 조선 전기의 예술 V. 지배층의 분열과 주자학의 발달 VI.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와 이민족의 침입 7. 조선후기의 사회 I. 당쟁의 격화와 제도의 개혁 II. 의식의 확대와 문화의 부흥 III. 정치의 문란과 농촌의 피폐 IV. 새 종교의 유행과 정치 개혁	V. 고려 시대의 생활 1. 후삼국과 민족의 재통일 2. 고려 전기의 정치 사회 문화 3.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3. 고려 전기의 유학과 불교 4.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5. 고려 후기 사회의 동요 6. 몽고의 침입과 고려의 쇠망 7. 고려 후기의 문화 VI. 조선시대의 생활 1. 조선왕조의 성립과 제도의 정비 2. 민족문화의 발전 3. 양반의 다툼과 정치적 문란 4. 초기의 대외 관계와 왜란 및 호란 5. 전후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동 6. 실학의 흥기와 문화의 발전 7. 세도 정치의 부패와 민중의 항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보다 충실한 교과서의 발간은 바라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여⁴⁰⁾ 문교부는 국사교육 통일심의회를 설치하여 중·고교 국사교사 6명, 문교부 관계관 2명, 각 대학교수 및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2차에 걸친 회합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도록 전문위원 9인도 선출하여 1963년 8월 8일 문교부의 국사교육 통일방안을 확정하였다.⁴¹⁾ 이러한 내용은 1964년 6월에 『편수사 자료사』 제 5집으로 발행되었는데, ‘학교문법 및 국사교육내용의 통일’, ‘수학, 물리, 화학 용어의 개정과 통일’을 신고 있다.⁴²⁾ 이미 몇 년전에 검인정 교과서의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국사교육 통일안은 ‘민족주체성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국시를 위한 것이었다.

39) 「국사의 문제점」, 『동아일보』, 1963년 6월 17일.

40) 「충실한 교과서는 언제나……」, 『동아일보』, 1960년 1월 7일.

41) 「단군신화 검토 국사교과내용 통일」, 『동아일보』 1963년 6월 15일.

42) 한국검인정 교과서, 『교과서 편수 자료-편수 일반 편-』(I), 4쪽.

문교부는 명년도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검인정 기준에 민족 주체성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국사관 두 가지 원칙을 첨가하고, 이에 따라 일인 사학자들에 의해 일본중심으로 기술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사용되어 온 역사 용어나 사관을 한국중심으로 개칭하고 역대 왕조사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민중 운동 등에 자유민주주의란 대한민국국시에 맞도록 개편토록 저자와 출판업자에게 지시했다.⁴³⁾

이렇듯 국정화의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었으며 1969년 4월 교과과정 부분 개정과 이에 준하는 교과서 수정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⁴⁴⁾

학문과 교육을 작위적으로 만드는 국가주의적 발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⁴⁵⁾ 한국사학계도 한국사의 체계를 위한 나름대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10월 29일 역사학회에서는 이기백, 차하순 등의 학자들이 한국연구원에서 ‘시대구분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주체적 사관의 확립 움직임과 함께 대두된 한국시대구분을 방법론적으로 검토하여 서양학계의 시사를 얻고자 함이었다.⁴⁶⁾

당시 문교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이에 대비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즉 1969년 12월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의 제문제’와 1971년 6월 전국역사학대회 ‘역사교육의 과제와 방향’ 개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1970년 5월 올바른 사관과 민족적 주체적 입장에서 정사 연구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73년까지 민족정사집인 『한국사』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현종 편사실장, 윤병석 전 조사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철준(고대), 이기백(고대), 한우근(고려), 홍이섭(조선), 이광린(근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일제의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36권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⁴⁷⁾ 1960년대 전반기 진단학회의 이병도, 이상백, 김상기, 김재원, 이승녕의 『한국사대계』(6권), 1964년 이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의 분류사인 『한국문화사대계』(7권)를 이은 것이다.⁴⁸⁾ 이미 진단학회의 한국사가 출간되자 북한은 『조선통사』 상(1956년 3월 『조선통사』 간행이후), 조선문화사, 조선사 등을 서둘러 편찬하였었다.⁴⁹⁾

국정 교과서가 탈고 될 무렵 활발한 한국사의 재편집작업이 더욱 진행되었다. 천관우가 기획하여 『신동아』 지상 심포지엄 ‘쟁점을 분석하는 한국사의 거시적 재구성과 대중화를 위한 시리즈’가 연재되었다. 이어 ‘한국사의 조류’를 장기 연재하여 고대사 구성에 큰 進境을 이루기도 하였다.⁵⁰⁾ 한국사의 대중화를 위하여 삼진사에서 펴낸 『한국사대계』 12권이 간행되었다. 천관우가 부록(연표, 학통)을 위시하여 한병삼, 임병태, 이만열 등 전공 25명의 학자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선근의 『대한국사』(12권)이 간행되기도 하였다.⁵¹⁾

그러한 가운데 1969년 12월에 이기백, 이우성, 한우근, 김용섭 등 한국의 대표적 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 공감하였다.

43) 『동아일보』 1966년 10월 22일.

44) 「초·중·고 교과서 개편 4」, 『경향신문』 1969년 6월 4일.

45) 「문교부의 국사내용에 대한 통일방침에 붙인다」, 『경향신문』 1963년 6월 17일.

46) 『동아일보』 1969년 10월 30일.

47) 8년만인 1978년 12월에 한국사 전 23권(구석기에서 8.15까지)이 완간되었다.

48) 『동아일보』 1970년 5월 14일.

49) 「史實을 부정한 ‘정치적 시녀」, 『경향신문』 1978년 3월 4일.

50) 『동아일보』 1973년 12월 19일.

51) 위와 같음.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특히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시대와 대결하는 민족의 정신적 자세를 올바르게 체인(體認)하고 우리의 역사관을 창조적 전진적 방향으로 정립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당면의 과제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나아가 2세 국민에 대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검토와 새로운 교과목의 시안의 작성에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보고서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3. 고등학교 국사교과과정 시안, 4. 중학교 국사교과과정 시안 등과 부록: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분석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연구팀은 교과과정의 시안을 작성하면서 다섯 가지의 기본원칙을 정하였다. 민족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사적이며 내재적인 발전 시각을 견지하며 인간중심, 특히 민중의 활동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과정의 시안을 작성하였다.⁵²⁾ 시대별로 분담하여 원시·고대(원시시대~신라, 발해말기)-이기백, 중세전기(고려시대)-이우성, 중세 후기(이조건국~개항이전)-한우근(대표), 근대(개항이후~현재)-김용섭이 각기 집필하였다. 중학교의 시안 대 목차는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었으며 중세는 고려, 근대는 조선건국부터 정치체제의 재정비와 배외정책까지, 근대는 근대화운동과 대한제국의 수립부터 5월 혁명까지이다. 고등학교는 원시시대, 고대, 중세전기, 중세후기, 근대로 나누었다. 중세전기는 고려, 중세후기는 조선건국부터 중세체제의 재정비 기도와 배외정책까지이며, 그 이후 5월 혁명까지는 근대이다. 이러한 목차 시안과 더불어 5. 시안내용 보설⁵³⁾에서 중세전기(중학교는 중세를 전후기로 구분치 않음) 등 주요 서술 시안의 내용을 부기하였다. 앞서 언급한 제2차 검인정 교과서와 목차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제3차 국정교과서 시안과 별 다를 바 없다.

또한 1971년 9월 역사교육과 한국사, 동 서양사학회의 대표가 모여 역사교육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한국사학회,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경제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가 참여하였다. 협의회는 그 해 10월까지 세 차례 협의를 갖고 ‘역사교육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 검토, 중요 자료수집, 문교부에 건의서 제출’ 등을 다루었다. 협의회는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교육목표를 역사교육에 적용하며 한국사와 세계사의 동반 교육을 추진하였다.⁵⁴⁾

5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소장본; 장신, 「해제-『중·고등학교 국사교육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역사문제연구』 46, 2016.

53) 장신, 위의 논문 참조.

54)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국민학교에서 역사과동까지』, 책과 함께, 2013 참조.

※ 중·고등학교 국사교과과정 시안(중세 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p>一. 고려통일국가의 성립과 발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려의 후삼국통일 2. 고려의 발해유민흡수와 북진 3. 고려전기의 사회와 문화 4. 고려전기의 대외관계 <p>二. 무신집권과 고려사회의 동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신정권의 성립 2. 농민과 천민층의 항쟁 3. 몽고침략과 민족의 항전 4. 고려왕실과 몽고와의 화친 5. 고려후기에 있어서의 사회변천과 문화 	<p>一. 중세 귀족관료국가의 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성정권과 호족통합운동 2. 발해국의 멸망과 부흥운동 3. 고려에 의한 민족통일의 완성 4. 귀족관료국가체제의 정비 5. 거란의 침입에 대한 민족의 투쟁 <p>二. 중세전기의 사회와 경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인층과 전시과 2. 농민과 균역 3. 승려와 사원경제 4. 산업의 발달과 대외무역 5. 문벌귀족의 번영 <p>三. 중세전기 지배층의 세력교체와 대외항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진과의 관계와 귀족층의 분열항쟁 2. 무신의 집권 3. 농민 천민층의 항쟁 4. 몽고침입과 이에 대한 항쟁 <p>四. 중세전기사회의 변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려왕실과 원과의 화친관계 2. 중앙 권력층에 의한 농장의 확대 3. 신흥사대부의 대두와 반원운동 4. 파전법과 새 정치세력 <p>五. 중세전기에 있어서의 문화의 전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교의 변천 2. 유교의 보급과 신전개 3. 문학·예술의 발전 4. 인쇄문화와 기술의 발달 	<p>中 世 前 期</p>
<p>三. 조선의 건국과 발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려에서 조선으로 2. 제도의 개편과 영토확장 3. 양반과 농민 4. 민족문화의 융성 5. 일본·만주군의 침입과 민족의 투쟁 <p>四. 별열정치와 사회의 동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열정치의 성립 2. 수취체제의 개편 3.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 4. 새로운 사상과 예술 5. 민중의 항쟁 6. 정치체제의 재정비와 배외정책 	<p>一. 중세 양반·관료국가의 성립과 발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반·관료국가 조선의 성립 2. 양반·관료국가체제의 정비 3. 명 및 일본과의 관계 <p>二. 중세후기의 사회구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반·관료와 토지지배 2. 농민과 공부 3. 사림과 서원 <p>三. 민족문화의 융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의 창제와 국가의 흥룡 2. 성리학의 심화와 보급 3. 과학기술의 발달 4. 문학과 예술 <p>四. 일본·만주군의 침입과 민족의 항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배층의 대립과 분열 2. 일본군의 침입과 이에 대한 항쟁 3. 만주군에 대한 투쟁과 화친 <p>五. 중세후기사회의 변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열정치와 양반체제의 분해 2. 농민의 성장과 대동법 및 균역법 3. 상인자본의 대두와 수공업의 성장 <p>六. 중세후기사회 변동기의 사상과 예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식의 확대 2. 실학사상의 발전 3.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p>七. 중세사회체제의 파탄과 민중의 동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도정치와 수취의 강화 2. 민중의 항거 3. 천주교의 유포와 동학의 발생 4. 중세체제의 재정비 기도와 배외정책 	<p>中 世 後 期</p>

2. 국정 국사와 1종 국사의 편찬과 발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사학계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국사 개설서 편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문교부는 국사 교육을 국가 주도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사학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본격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4월 14일 청와대 특별보좌관 박종홍 주재로 사학자들의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려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케 하였다.⁵⁵⁾ 여기서 국민학교의 사회 과목에서 국사를 분리 독립하고, 중·고·대학교에서 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고전 국역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에 당시 대통령 비서관 한기욱은 1972년 5월 10일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사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문교부의 시안과 국사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⁵⁶⁾ 보고서에서 국사를 전공하는 학생 외에 대학에서 국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대학에서의 국사교육 실태와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사과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1972년 5월 11일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⁵⁸⁾ 산하 소위원회 7명도 이선근, 강우철, 이광린, 최창규, 김철준, 이원순, 한우근이 선정 구성되어 같은 해 5월 17일 첫 모임을 갖고 문교부로부터 3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의 시안을 작성 제시하였다.⁵⁹⁾ 그 다음 날인 1972년 5월 11일 ‘국사교육 강화방안 건의’가 비서실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소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안을 확정해서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같은 해 7월 6일 문교부에 제 1차 국사교육 강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건의안은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 내용(제 1차)-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취지 및 교육과정 구조’였다. 총론적인 국사교육 강화의 취지와 국사교육의 일반 목표 6개항, 초등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건의에서는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오늘날 국사교육의 강화라는 주장을 새삼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직도 우리 민족사에 남겨진 왜곡된 해석과 타율적인 역사관이 청산되지 못하였고 아울러 국사학 자체가 민족국가의 근대화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사에서의 주체성은 우리 민족을 독립된 역사주체로 확인시킬 수 있는 개별성과 함께 우리 민족을 역사의 실천자로 길이 부각시키는 영속성을 아울러 가질 때 확립된다. 따라서 국사교육의 강화는 그 학문적 성과가 민족문화의 개성 발양을 폭넓게 확대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세계사의 참된 한 단위로 참여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의 재창조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을 역사계승의 당당한 주체로

55) 기록물 사학자 간담회 보고 EA0005015 : <http://www.pa.go.kr/school>

56)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과개정 개편(시안) 기록물 EA0005019 : <http://www.pa.go.kr/school>

57) 당시 시행되던 기업체 채용시 험과 국가시행 고시에서도 2%만 국사를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58)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박종홍(대통령 특별보좌관), 장동환(대통령 비서관), 한기욱(대통령 비서관), 박승복(국무총리 비서관) 등 정부측 4인과 이선근(영남대 총장), 고병익(서울대 문리대학장), 이기백(서강대 교수), 한우근(서울대 교수), 이우성(성균관대 교수), 김철준(서울대 교수), 강우철(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 김용섭(서울대 교수), 이원순(서울대 사범대 교수), 이광린(서강대 교수), 최창규(서울대 교수), 이현중(국사편찬위원회 실장) 등 학계 인사 13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김상기, 이홍직, 김성근 등 3명의 학계 인사가 추가되었다는 주장과 위원회에 김상기, 이홍직, 변태섭이 참석했다는 보고도 있다.

59)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296~297쪽.

확인시켜야 한다.⁶⁰⁾

위원회는 국사교육의 일반목표를 ‘굳건한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역사적으로 의식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한다’⁶¹⁾고 하였다.

그 후 이듬해인 1973년 6월 문교부는 교과서의 국정화 시안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에서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빙도 높은 풍부한 사료에 입각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국사과목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사교육 강화 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사교육 내용선정의 기본 관점은 첫째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확립을 위해 1) 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대한 평가 2) 식민사관의 탈피 민족사의 추진력을, 둘째 시대사적 특성의 제시하여 1) 각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 긍정적 설명 2) 제 요소와 규범체계와의 연결 3) 각 시대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 셋째 보편적인 특수성의 조화를 위하여 1) 국사상의 모든 사실은 개별사적 자주성에서 파악 2)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연결을, 넷째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1) 전통에 대한 강조 2) 전통의 내용 3) 민족의 전통을 오늘의 현실과 기능적 연결을 강조하였다.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⁶²⁾에서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국사의 중심개념을 각 시대별로 항목을 제시하였다.

대단원	중단원
고대	I. 원시 사회 II.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 III. 고대국가의 성립 IV. 삼국의 문화 V. 신라의 삼국 통일과 그 사회 VI. 통일기의 신라문화 VII. 발해와 그 문화 VIII. 고대 귀족 국가의 붕괴
고려시대	I. 귀족 관료 국가의 형성 II. 귀족 관료 국가의 구조 III. 고려의 귀족 문화 IV. 무신 정권과 대몽 항쟁
조선시대	I. 양반 관료 국가의 성립 II. 양반 사회의 구조 III. 민족 문화의 융성 IV. 양반 사회의 태동 V. 근대적 사회의 맹아 VI. 양반 정치의 동요
근대	I. 개화·척사 운동 II. 동학 농민 혁명과 갑오 개혁 III. 독립 협회의 활동 IV. 근대 사회의 맹아 V. 양반 정치의 동요
근대민족국가의 발전	I. 8·15 민족의 해방 II. 대한 민국의 수립 III. 6·25 사변과 민족의 시련 IV. 4월 의거와 민주주의의 성장 V. 5월 혁명과 제 3공화국

60) 윤종영, 「국사교육의 변천과 과제-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2, 역사실학회, 1992. 279~280쪽.

61) 윤종영, 위의 논문, 280~281쪽.

62)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296쪽

그리고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 <준거 제시의 관점>에서는 중심 개념에 따라 내용 전개의 기본 관점만 제시하고 중학교에서 취급된 내용 중 고등학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 표기하지 않으며 정치사 중심으로 국민의 국사 교양을 심화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을 통하여 국민의 창조적 문화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4개 항목에 준거하여 시대별로 단원에 맞추어 중 고 국사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6월 9일 문교부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⁶³⁾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⁶⁴⁾ 보고서는 식민지사관 등에 왜곡된 역사관은 청산되어야 하며, 주체적인 민족의식으로 민족중흥을 이루기 위해 현행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⁶⁵⁾ 결국 1973년 6월 23일 문교부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였다. 1974년 2월 22일 문교부는 민족사상 확립 위주로 개편된 초·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1974년 신학기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⁶⁶⁾ 개편된 인문계 고교의 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즉, 고고학적 새 사실의 반영, 백제의 국제적 역할 강조, 신라의 대당항쟁사 부각, 불교사상의 설명,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에 대한 새 평가, 항일사와 일제사의 상세한 설명 등이었다.⁶⁷⁾

이러한 ‘대단히 슬프고 불행한’⁶⁸⁾ 국사의 국정화는 ‘일제 침략기에 이루어진 왜곡된 역사관을 청산하고 광복 이후 우리 국사학계에서 쌓아온 업적을 체계화하며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사교육을 실시, 국적 있는 교육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것’⁶⁹⁾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사학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반대했지만 교과서 집필진이 선정되었다. 1973에 출판된 중학교 국사교과서는 임병태, 강진철, 차문섭, 이현종이 집필하였으며, 1974년 출판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김철준, 한영우, 윤병석이 집필⁷⁰⁾하였으나 교과서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며, 1979년판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는 집필자와 연구진이 명기되었다.

교과서의 집필자 8명중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위원은 김철준(고등학교), 이현종(중학교) 2명뿐이었다. 이외에 민병하, 한영우 윤병석이 고등국사를, 임병태, 강진철, 차문섭이 중학 국사의 집필을 맡았다. 이들 8명 가운데 기본 검정교과서의 필자는 김철준(중학교), 차문섭(고등학교) 2명뿐이었으나 김철준은 처음으로 고등국사를, 차문섭은 교과서(중학국사)를 처

63)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문교부) 기록물 관리번호 EA0005024. :http://www.pa.go.kr/school
 64)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문교부는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국사교육강화방침에 따라 작년 5월 이후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국사과목의 독립, 강화 및 시간 배당의 조정, 각종 시험에서의 국사과목 부과, 기타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른 교과서 개편 작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었던 바, 2. 이번에 그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방안을 수립, 보고하여 왔습니다. 문교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국가기록원 소장).
 65) 문교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국가기록원 소장).
 66) 문교부는 우선 새 학기부터 개편 사용될 인문계 고교 교과서 중 사회과 정치 경제국사 국어 교과서 등에 유신 체제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경향신문』 1975년 2월 1일 문교부 유신 교육 강화키로-인문고 교과서 개편에 크게 반영.
 67) 중학교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고교용에 동조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시사성을 반영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용은 전쟁사에서 생활사 중심으로 바꾸고, 실학을 부각시켰으며 6학년용은 역사의 발전적 선형을 강조하며 생활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강조. 『동아일보』 1974년 2월 27일, 초·중·고교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생활사 중심의 주체의식 강조.
 68) 1976년 5월말 제 20차 국제출판연합회 총회에서 사회를 보던 영국대표가 ‘대단히 슬프고 불행한 보고를 들었다’고 개탄을 하였다. 「논란 빚은 교과서 국정화」, 『동아일보』 1976년 8월 28일.
 69)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검정제 폐지 국적있는 교육 강화」, 『경향신문』 1973년 6월 23일.
 7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65년사』, 2012, 300쪽.

음 집필한 것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정교과서 서술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후 1977년 3월 16일 검인정 교과서 보급을 둘러싼 비리 사건인 소위 ‘검인정 교과서 파동’이 발생하였다.⁷¹⁾ 하지만 유신정권의 등장에 따라 제3차 교육과정령이 공포됨으로써 검인정교과서는 주로 한국검인정교과서(주)에서 제작을 담당함으로써 교과서 제작·발행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다. 즉, 한국검인정교과서(주)가 문교부와 국세청 직원에게 1974년부터 뇌물을 주고 중·고교 검인정교과서의 가격 인상과 내용 수정, 성실법인 지정 등의 특혜를 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탈세한 사건이다.⁷²⁾

1977년 4월 문교부는 최근의 검인정 부정사건을 계기로 교과서의 발행 및 유통체계의 재조정을 하고 국정과 검인정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를 단일화시켜 국정화하고자 추진 중이었다. 이미 지난해인 1976년 8월 하순부터 현행 교과서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중학교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한 이후의 조치였다.⁷³⁾

1977년 7월 9일 문교부는 ‘교과서제도 개선 원칙’을 발표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값을 낮추기 위하여 1977년 8월 22일 종래의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을 폐지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79년부터 국정도서를 1종 도서(연구개발형)로, 검정도서를 2종 도서(자유경쟁형)로 나누어 검인정 교과서부터 개편하였다.⁷⁴⁾ 이로써 기존의 관주도의 교과서 편찬, 제작,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⁷⁵⁾

이러한 가운데 1977년 2월 28일 제3차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며⁷⁶⁾ 1976년 국사교과서를 ‘주체성에 입각한 민족사관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부분 개편⁷⁷⁾을 결정하고 1979년에 교과서가 개편 발행되었다.

1979년판 중학국사의 집필진은 김철준(고대·고려), 한영우, 윤병석(근대·현대)이었고 연구진은 최영희, 강우철, 고병익, 김도연, 김원룡, 백낙준, 신석호, 신지현, 유흥렬, 이광린, 이기백, 이병도, 이선근, 이현종, 전해종, 조기준, 최문형, 최순우, 최완기, 한우근이었다.

고등국사의 집필진은 이만열(고대·고려), 이원순(조선), 이현종(근대·현대)이었고 연구진은 최영희, 강우철, 고병익, 김도연, 김원룡, 백낙준, 신석호, 신지현, 유흥렬, 이광린, 이기백, 이병도, 이선근, 이현종, 전해종, 조기준, 최문형, 최순우, 최완기, 한우근이었다.

71) 「논란 빛은 교과서 국정화」, 『동아일보』 1976년 8월 28일.

72) 이로 인해 현직 문교부 직원 7명, 세무공무원 4명, 한국검인정교과서 소속 중등교과서(주) 대표와 고등교과서(주) 대표 등 1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중수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73) 「교과서 국정화는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1977년 4월 8일.

74) 이는 1967년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에는 문교부, 즉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였던 것과는 달리 교과서의 개발을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학술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 편수사 연구』 I, 2000, 455~499쪽.

75) 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또는 인쇄, 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한다(제28조)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편수국이 전담하던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업무가 이미 1976년부터 새 교과서의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가 교과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연구개발형의 국사 교과서의 개발은 국사편찬위원회 1종 교과서 개발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었다.

76) 문교부는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공포하였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977년 2월 28일 문교부령 제404호로 개정하였다. 교학도서주식회사 편집부 편, 『초·중·고(인문, 실업) 새 종합교육과정 및 해설』, 교학도서주식회사, 1977.

77) 「바른생활(국교) 민주생활(중학) 등 금년내에 교과서 개편」, 『동아일보』 1976년 3월 29일.

Ⅲ. 국정 국사의 서술 내용 비판과 중세사 서술

1. 국사학계의 국정 국사 비판과 중세사 서술 체재

당시 정부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검인정 교과서는 당시 ‘검정교과서의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73, 74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으며 여러 집필자 출판사의 편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는 집필진, 연구진, 심의진, 현장실험교사 등 100여명의 공동 참여와 작업으로 편찬되므로 교과서의 수준 높은 내용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보다 값이 싼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⁷⁸⁾

그러나 모든 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성격상 획일화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교과서의 전면 국정화는 교육적으로도 큰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⁷⁹⁾ 이러한 국정화 소식이 알려지자 외국인 조차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혹은 내용선택의 빈곤화를 수반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실리적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동심의 동산에서 지식의 세계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차단한다.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결국은 불행한 결과에 이르고 만다.⁸⁰⁾

즉, 출판협회(IPA) 프랑스 대표 장 아담은 시사적이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자유경쟁체제의 정책으로 교과서는 멋지고 화려한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책중의 책’이며 주위환경이 화려해지고 있는데 교과서가 초라해지면 어린이들의 마음에 이화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¹⁾

국내의 국사학계에서도 국정교과서 편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6월 창작과 비평에 강만길 김정배 이성무 송찬식 교수 등 젊은 학자들이 극렬한 비판을 발표한데 이어 26일에는 이병도 학술원 회장과 민간 사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축이 된 국가교과서 평가회가 새 국정교과서를 ‘식민지 사관을 흉내낸 천박한 식견’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사학계와 일선 교사를 당황케 하였다.⁸²⁾

국정교과서가 편수된 후 일부 학계에서는 단군개국을 심화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사의 상한을 대폭 위축시켰던 것은 ‘일제 식민지사관을 흉내낸 천박한 식견’이라고 하였다.⁸³⁾ 이에 대하여 고교 교과서를 집필했던 김철준교수는 ‘짧은 집필 기간과 빈약한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집필된 새 교과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단군 시비는 역사와 문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주장’⁸⁴⁾이라고 하였다. 같은 대학의 한영우교수는 ‘해방후 사학계 한 모퉁이에서는 일제의 식민사관 극복을 줄기차게 외쳤으나 일본의 문헌고증학의 영향을

78) 「피해야 할 교육의 획일화」, 『동아일보』 1976년 8월 28일.

79) 위와 같음.

80) 장 아담, 「교과서의 국정화」, 제 20차 국제출판인총회, 일본 경도 1976. 5; 『동아일보』 1977.4.8 교과서 국정화는 바람직하다.

81) 위와 같음.

82) 「진통 겪는 국사학계」, 『경향신문』 1974년 7월 30일.

83) 「국정 국사교과서의 난맥」, 『경향신문』 1975년 9월 9일.

84) 「진통 겪는 국사학계」, 『경향신문』 1974년 7월 30일.

받은 식민주의 사학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국사교과서는 당쟁과 사대주의로 점철되는 등 크게 바뀌지 못했다'⁸⁵⁾고 동조하였다.

일부 언론에서조차 그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이해 태도에 관한한 식민사관을 극복한 중요한 변화라고 규정짓는 보수 성향에 아연해할 뿐이다.

지난해 유월 초·중·고의 국사교과서 국정안이 발표되어 74년도 첫학기부터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국사교과서는 그것이 처음 발간될 때부터 수차 논의와 비판을 받아 왔지만 그 토론의 대부분은 근세조선의 정치 사회적 성격과 국사 용어 변경, 급별 교과서간의 연관성과 몇 가지 기술의 착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사 이해 태도에 관한한 식민사관을 극복한 중요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⁸⁶⁾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국정 국사 교과서는 1974년 신학기부터 사용되었으나 이 논란은 1975년 문교부가 수행한 「현행 인문계 고교 및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분석연구」에서 문교부가 자체 조사한 현행 인문계 고교 및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분석연구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1백개 항목별로 분석된 「초·중·고별 교과서 내용체계」에서 그중 50여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면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⁸⁷⁾, 고교(인문) 국사교과서에서 3백19개, 중학에서 2백29개소의 수정할 곳을 지적한 정오표를 따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 가운데 중세사 서술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통치체제를 중·고 국사는 재상중심으로⁸⁸⁾, 초등 국사는 국왕중심으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서술되었다.⁸⁹⁾

<정치사상과 통치체제> 통치체제는 주나라의 6전 체제를 본뜬 재상중심의 관료정치가 특징을 이루었다. 세습 국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두었으며, 모든 정사는 국왕의 재가를 얻어서 집행되었으나, 통치의 실권은 의정부 재상의 합의에 의하여서 정령이 결정되어 국왕에게 품달되었다.(1974년판 111쪽)

<통치조직>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은 우리 나라 정치 제도의 한 특색 있는 전통으로 내려온 것으로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였다(1979년판)

고려의 문헌공도 최종의 사학에 대하여 초·중 국사는 긍정적이나 고등국사에서는 부정적으로 서술되었다.⁹⁰⁾ 각급 학교간의 계열성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계화도 고려되지

85) 앞과 같음.

86) 「치열해진 「단군개국」 논쟁 「신화」나 「史實」이나, 『동아일보』 1974년 7월 27일.

87) 「문교부조사 국사 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 마다 史實 달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88) 재상 중심의 정치는 정도전이 그의 저서 『조선경국전』에서 주장한 바 있다. 정도전, 『朝鮮經國典』 上, 治典總序, ‘冢宰所掌也 司徒以下皆冢宰之屬 則教典以下 亦冢宰之職也 冢宰得其人 六典舉而百職修 故曰人主之職在論一相 冢宰之謂也’.

89) 장군총의 높이가 중·고 국사가 각기 다르며, 민족의 기원을 제각기 달리 서술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상한선 연대가 다르다(초등국사=서기전 7세기 전후, 중학국사=서기전 7,9세기, 고등국사=남한은 서기전 6세기이전, 만주 북한은 서기전 10세기경, 삼한의 성립과정을 부족국가, 연맹체 등으로 표기가 다르다. 초기신라를 제각기 다르게 설명, 화랑도의 기원을 중학은 귀족사회로 고등국사는 씨족공동사회로 표현, 상수리제도의 인질을 중학국사는 지방관리, 고등국사는 지방호족으로, 신라의 도참설을 중학은 과학기술로, 고등국사는 인문지리로 다르게 서술하였다. 「문교부조사 국사 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 마다 史實 달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90) 그 밖에 동학의 성격 규정도 각기 달랐으며 갑오경장 대한제국형성의 성격을 초등국사와 중등국사는 주체적으로, 고등국사는 타율적으로 해석하였다.3.1운동의 배경을 중학국사는 국제정세 등 해외요소를 강조했으나

못하였다. 가야사는 중학국사에서 크게 다루었지만 초등에서는 서술에서 제외되었으며, 조선시대 신분체제를 초·중국사에서는 4계급으로, 고등국사에서는 양반 상놈의 2계급으로만 서술하였다. 그 밖에 고려 무신집권기 최충헌을 왕을 폐립한 반역자이며 백성들의 요구를 짓밟는 국민의 반역자라고 서술한 반면에 중학국사에서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라고 영웅적으로 평가했다. 흥선 대원군을 지나치게 미화, 쇄국정책, 천주교 탄압까지도 시대적 요청과 전통문화의 자부심에 의한 것으로 고등국사에서 서술하였다.⁹¹⁾

인물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도 고등국사에서 5백39명, 중학국사에서 4백32명의 인물을 다루었으나 대부분 나열식으로 불필요한 암기 위주식 서술이다. 중학국사는 43%, 고등국사는 6분의 1이 왕족으로 지배층 중심의 서술이 되어 고등국사의 사회경제 문화서적 서술 원칙에 벗어났다. 그리고 고종세 불교의 종파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루었다고 지적하였다.⁹²⁾

또한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철을 중축으로 한 10명의 국무총리실 평가교수단은 국어, 국사, 사회, 도덕 등 4개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행한 공동 연구보고서 「국적있는 교육의 충실화」를 냈다.⁹³⁾ 여기에서 「국사교과서의 경우 왕조흥망 등 개별 사건의 나열에 치중한 나머지 여사의 흐름을 서술하는데 등한히 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내용이 세부적이어서 학생부담이 과중하고 일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고 토요토미 토쿠가와 같은 표기법에도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학교 교과과서의 경우 고려청자는 삽화가 선명치 못해 식별하기 조차 어렵다」⁹⁴⁾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그 무렵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였다. 민간사학자들이 1975년 10월 8일 국사찾기 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사의 時幅과 강역을 바로잡고 한국사의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안호상(배달문화연구원), 유봉영(백산학회), 문정창(한국고대사학회), 임승국(한국고전문우회), 이유욱(진단학회), 박창암(월간 자유사), 이대위(기독교동우회), 박시인(알타이인문학회) 씨 등이 같은 해 9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학 강좌를 열어 아카데미 사학을 공격하고 나서 일반을 놀라게 하였다. 같은 해 10월 8일 발족된 국사찾기 협의회원 외에도 민간 사학자 윤치도(『민족정사』 저자), 신학균(충남대 『규원사화』 역자), 김재환(『인류시원사』 저자) 등이 중국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고대사의 강력한 활동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자고 외쳤다.⁹⁵⁾

그 후 1978년 안호상이 국사 교과서의 고칠 점과 국사 교과서의 내용 시정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사학계와 이를 비판한 학자들 간의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즉, 고조선의 영역, 단군신화, 왕검성과 낙랑의 위치, 백제의 중국 통치, 신라 통일 후의 영역 등이었다.

재야 사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국회 공청회 문제로 비화시켰다.⁹⁶⁾ 국사찾

고등국사는는 국내적 요소를 강조했다.조국 광복을 고등국사는 외적인 요소를, 초·중 국사는 내적요소를 강조했다. 새마을 운동을 초등국사와 고등국사는 농촌지역에 한정했으나 중학국사는 범국민적운동으로 해석했다. 「문교부조사 국사 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 마다 史實 달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91) 그 밖에 중학국사에서 크게 다룬 가야사가 초등국사에서는 전혀 없고 조선시대 신분체제를 초·중국사는 4계급으로 고교는 양반 상놈의 2계급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고등국사는 대원군을 지나치게 미화했으며 쇄국정책, 천주교 탄압까지도 시대적 요청과 전통문화의 자부심에 의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92) 「문교부 조사 국사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마다 사실 달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93) 「국적있는 교육에 충실」, 『경향신문』 1975년 9월 11일.

94) 「초·중·고 주요 교과서에 문제점 많다-평가교수단의 시정 건의」, 『동아일보』 1975년 9월 12일 ; 「초·중·고 주요 교과서에 문제점 많다」, 『동아일보』 1975년 9월 12일.

95) 「사대 식민주의 사관 뿌리뽑자 원로들 국사찾기협의회 결성」, 『경향신문』 1975년 11월 3일.

96) 「국회로 번진국사논쟁」, 『경향신문』 1981년 11월 26일.

기협의회 안호상이 국사교과서 개정을 위한 소송제기 및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안호상은 재야사학자 박시인, 임승국 등과 단군과 기자의 실존설을 비롯해 고조선 영토문제 등 7개항의 이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 김철준, 이기백, 김원룡, 이원순 등 학계 중진과 사관, 단군·기자조선, 한사군의 위치, 동학 등이 쟁점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다.⁹⁷⁾

제3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의 편찬은 이미 선학이 제시했던 바와 같이 ‘주체적 민족사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고 전체 국민의 대동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국사교육의 효과를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고 종래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체제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서술내용 및 용어를 등을 통일을 위해서’⁹⁸⁾였다. 하지만 국정화 체제 통일 문제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중·고 교과서의 체제 통일면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한마디로 검인정 교과서보다 후퇴하였다는 느낌마저 두고 있다는 평이다. 심지어는 중학국사는 너무 저속하고 고등국사는 날조에 가까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⁹⁹⁾는 극언도 있었다. 예컨대 중학국사 <Ⅷ 근대문화의 새 기운>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의 서학이 서양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느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보잘 것 없다니 하는 등 뒤죽박죽이다. 같은 교과서 <Ⅷ 정치의 양상과 농민의 자각> 야담인지 역사인지 알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이는 교과서 편찬이 몇몇 인사에게 위임되어 단시일 내에 서둘러서 졸속주의, 예견되었던 대로 편견과 오류 투성이 같은 교과서 내에서도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⁰⁰⁾

중학국사는 그 편제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데다가 단편적인 사실을 조각조각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내용의 비체계적이고 무미건조하며 전체의 논리와 통일성 없다. 중학국사는 그 체제와 내용이 종래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대하여 고등국사는 새롭게 서술된 부분이 많다.¹⁰¹⁾

중·고 국사가 서술이 비슷하여 중·고 국사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중학국사가 서술내용이 더 자세한 부분도 있으며, 중·고 국사의 서술 내용 역시 다른 점이 많다.

중 고 교과서 간에 사실의 중복이 너무 많아 중학교에서 이미 배워서 아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되풀이함으로써 학생들이 국사에서 염증을 느끼게 되고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것이 같은 사실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설명이 다르고 학생들이 국사를 신뢰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²⁾

단원구분과 시대구분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의 수준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1974년판 중학국사는 15개 단원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근거가 없다. 15개 단원 사이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려왕조 1단원, 조선왕조는 5단원, 같은 근대 내에서도 분량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조선후기 서술 분량 중학국사 36쪽 13%, 고등국사 35쪽 15%에 이르고 있다.¹⁰³⁾

전체의 장과 절을 일관하는 편수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며, 9개 항목으로 세분된 절이 있는가 하면 단 한 개의 장으로 편성된 것이나 항목이 없는 절도 있다. 고려시대 목차는 7절 가운데 고려전기가 3개, 고려후기는 1개에 불과하다. 고려시대의 시대구분을 무신정변으로 다

97) 위와 같음.
98) 강만길, 앞의 글.
99) 송찬식, 앞의 글.
100) 위와 같음.
101) 이성무, 앞의 글.
102) 이우성, 앞의 글.
103) 송찬식, 앞의 글.

루고 있는데 이를 고려 전기에서 다루고 있어서 부자연스럽다. <7. 고려후기의 사회와 문화>
 <1) 후기의 사회>(중학국사 94쪽)에 ‘전기 사회의 지배계급은 집안을 자랑하는 문벌귀족들이
 데, …무신정권 이후의 고려 후기에 있어서는 … 멸시와 천대를 받던 무신이 정권을 잡고’라
 고 하여 고려후기 사실로서 전기의 귀족과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 서술상 큰 모순이다.¹⁰⁴⁾

<1974년판 중학국사 단원>

시대구분	분량(쪽수)	비중(%)	단원구분	분량(쪽수)
고대	56	20.8	1. 우리의 역사의 시작과 부족국가의 생활	16
			2.삼국의 생활	22
			3.통일신라와 발해	18
고려	44	16.4	4. 고려시대의 생활	44
조선	70	26	5. 조선의 성립	16
			6. 민족문화의 융성과 양반사회의 발전	16
			7. 근대적 문화의 새 기운	14
			8. 정치의 양상과 농민의 자각	10
근대	72	26	9. 개화 착사운동과 동학혁명	18
			10.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8
			11. 근대 문화의 성장	14
			12. 일제의 침략과 독립투쟁	10
현대	27	10	13. 민족의 해방과 대한 민국의 수립	12
			14. 제 3공화국과 오늘의 우리	15
계	269	100	15개 단원	269

104) 앞과 같음.

<1974년판 고등국사 단원>

시대구분	분량 (쪽수)	비중(%)	단원구분	분량 (쪽수)
고대	56	24.3	1. 선사 시대의 문화 2. 부족 국가의 성장 3. 삼국 시대의 발전 4.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5.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6. 통일 신라의 문화	
고려	46	19.9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과정 2. 귀족 사회와 발달과 문화의 성장 3. 여진족의 압력과 고려 귀족 사회의 모순 4. 몽고 침략에 대한 항쟁과 고려의 붕괴 과정	
조선 (조선왕조의 성립 ~대원군의 정치)	64	27.7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제도의 정비 2. 만주 문화의 발달 3. 양반 문벌 사회의 형성과 민족의 시련 4. 민본·민족 의식의 부활과 체도의 개혁 6. 정치 기강의 문란과 개혁 운동	
근대 (문호개방~일제 말기)	54	23.4	1. 민주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계승	
현대 (8.15해방~현재)	11	4.7	1. 대한 민국의 정 통성 2. 만주 중흥의 새 전기	
계	232	100		

다음으로 중·고 국사의 시대구분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국사의 경우 시대구분 문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하다. 특히 근대이후 부분이 심하다. 고등국사는 5개 단원으로 구분, 시대구분은 종래의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로 나누었다. 특히 근대화의 기점이 엇갈린다. 중학국사는 실학의 발달에서부터 <근대적 문화의 새 기운>으로 보고 있는데 고등국사는 문호개방 부터 잡고 있다. 근대의 기점은 ‘근대적 문화의 새 기운’의 실학 부터인지, 종래 대로 개항이후 부터인지 불분명하다. 개항이후 97쪽(36.8%)로 근대이후 비중이 크며, 해방이후 27쪽(10.0%)으로 현대 중심의 학습을 피하고 있다.

고등국사의 경우, 총 232쪽 고대사회 56쪽(24.3%), 고려사회 46쪽(19.9%), 조선사회(조선왕조의 성립~대원군의 정치) 64쪽(27.7%), 근대사회(문호개방~일제말기) 54쪽(23.4%), 현대사회(8.15해방~현재) 11쪽(4.7%)이다.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존의 시각을 답습하였다. 고대사 56쪽(24.3%), 현대사 11쪽(4.7%) 그 내용도 정치사 중심이다.

영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중학국사의 경우, 전체 262항목 가운데 정치 군사 부분이 108항목(41.2%)으로서 정치부분에 역점을 두었다. 중학교 교과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사회 부분에 큰 비중이 있으나 대부분 신분제 서술이며 일반 민중의 생활사에는 소홀하다.¹⁰⁵⁾

105) 이원순 외, 앞의 논문.

<중학국사 1974년판 영역별 통계표>¹⁰⁶⁾

시대	분량(쪽)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계	비고
고대	1~56	21	1	11	16	49	
고려	57~100	23	3	8	11	45	
조선	101~170	17	8	9	24	58	
근대(개항~)	171~242	28	8	19	15	70	
현대	243~268	19	1	3	1	24	
총계	268	108	21	50	67	246	

<고등국사 1974년판 영역별 통계표>

시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계
고대사회	29	3	14	21	67
고려사회	24	4	6	16	50
조선사회	15	5	4	9	33
근대사회	15	1	7	6	29
현대사회	7	1	1	-	9
총계	90	14	32	52	188

중 고 국사에서 서술된 인물을 비교하면 인물의 수(총 432명)가 너무 많다. 중학 수준에서 생소한 인물도 산견되며 왕과 왕족이 88명(20.4%)으로 왕조 중심의 서술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구체적인 서술에 있어서도 왕조사 중심이나 지배층 위주의 서술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학교의 경우 왕, 정치가, 군인이 총 186명으로 전체 인물의 43%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18명으로 40.4%), 현대사의 정치사 일변도(중·고교 모두 정치가만 등장), 여성의 활동 경시 등이 경시되었다. 중학국사 인물 서술은 총 432명으로 고대 107, 고려 88, 조선 147, 근대 88, 현대 2명이다. 고등국사의 인명 서술을 보게 되면 고대 98, 고려 126, 조선 166, 근대 142, 현대 7명으로 총 539명이었다. 두 교과서 모두 지배층 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79년판 중·고 국사의 단원 구성과 영역, 서술 분량, 시대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06) 이 란에서 제시한 표는 이원순 등 선학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정확한 검토와 더불어 전거를 정확하게 부기할 것이다.

<중학국사 1974년판 1979년판 목차 비교>

1974년판 중학교	1979년판 중학교
<2학년> 4. 고려시대의 생활 5. 조선의 성립 6. 민족문화의 융성과 양반사회의 발전 7. 민족의 항쟁과 사회경제 생활의 진전 <3학년> 1. 근대적 문화의 새기운 2. 정치의 양상과 농민의 자각 3. 개화척사 운동과 동학혁명	IV. 고려 시대의 생활 V. 조선의 발전과 시련의 극복 VI. 조선 사회의 새 움직임 VII. 근대화의 시련과 자주 운동

<고등국사 1974년판과 1979년판 목차 비교>

1974년판 고등학교	1979년판 고등학교
II. 고려 사회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과정 2. 귀족 사회와 발달과 문화의 성장 3. 여진족의 압력과 고려 귀족 사회의 모순 4. 몽고 침략에 대한 항쟁과 고려의 붕괴 과정 III. 조선 사회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제도의 정비 2. 만족 문화의 발달 3. 양반 문벌 사회의 형성과 민족의 시련 4. 민본·민족의식의 부활과 제도의 개혁 6. 정치 기강의 문란과 개혁 운동	II. 고려 사회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2. 귀족 사회의 발달과 문화의 성장 3. 고려 귀족 사회의 동요 4. 몽고 침략에 대한 항쟁과 고려 말의 정치 상황 III. 조선 사회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민족 문화의 발달 3. 사람의 성장과 그 문화 4. 왜란과 호란 5.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6. 문화의 새 기운

중·고 국사 1974년판과 1979년판의 단원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74년판과 1979년판의 대단원 구성은 동일하지만 중단원의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I, II단원의 경우 중단원의 구성이 비슷하지만 III단원은 많은 차이를 있다. 즉 1974년판은 중단원이 5개의 절로 구성되었으나 1979년판은 1개의 절이 많은 6개의 절로 구성되었으며, 중단원의 제목도 3절부터 차이가 난다. 1974년판의 '3. 양반문벌사회의 형성과 민족의 시련'이 1979년판에는 '3. 사람의 성장과 그 문화'와 '4. 왜란과 호란'으로 나뉘었고, 1974년판의 '4. 민본·민족의식의 부활과 제도의 개혁'에서 실학을 포함한 문화사를 따로 떼어내어 1979년판에서는 '6. 문화의 새 기운'으로 편성하였다.¹⁰⁷⁾

1974년판과 1979년판의 시대별 서술 분량은 다음과 같다.

107) 이 부분은 조성운 선생의 미간행 원고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1974년판과 1979년판 국사교과서의 시대별 서술 분량>¹⁰⁸⁾

구분	1974년판(쪽수/비율)	1979년판(쪽수/비율)	평균(쪽수/비율)
선사	6(2.6%)	6(2%)	6(2.3)
고대	50(21.6%)	56(18.5%)	53(20)
중세	46(19.8%)	48(15.9)	47(17.9)
근세	64(27.6%)	110(36.4%)	87(32)
근대	54(23.3%)	66(21.9%)	60(22.6)
현대	30(12.9%)	12(4%)	21(8.5)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시대별 서술 분량은 제2차 교육과정기의 선사시대 9쪽(3.6%), 고대 58쪽(23.2%), 중세 50쪽(20%), 근세 60쪽(24%), 근대 49쪽(19.6%), 현대 11쪽(4.4%)에 비교하면 선사, 고대, 중세의 비중이 약간 줄었고, 근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의 비중은 각각 8%, 3%, 4.1%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세 이전의 서술 비중은 감소하고, 근세 이후의 서술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4년판 중학교와 고등학교 목차 비교>

1974년판 중학교 국사	1974년판 고등학교 국사
<p><2학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나라의 시작과 부족국가의 생활 2. 삼국의 생활 3. 통일신라와 발해 4. 고려시대의 생활 5. 조선의 성립 6. 민족문화의 융성과 양반사회의 발전 7. 민족의 항쟁과 사회경제 생활의 진전 <p><3학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적 문화의 새기운 2. 정치의 양상과 농민의 자각 3. 개화척사 운동과 동학혁명 4.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5. 근대문화의 성장 6. 일제의 침략과 독립투쟁 7. 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수립 8. 제3공화국과 오늘의 우리 	<p>I 고대 사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사 시대의 문화 2. 부족 국가의 성장 3. 삼국 시대의 발전 4.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5.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6. 통일 신라의 문화 <p>II. 고려 사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과정 2. 귀족 사회와 발달과 문화의 성장 3. 여진족의 압력과 고려 귀족 사회의 모순 4. 몽고 침략에 대한 항쟁과 고려의 붕괴 과정 <p>III. 조선 사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제도의 정비 2. 만주 문화의 발달 3. 양반 문벌 사회의 형성과 민족의 시련 4. 민본·민족 의식의 부활과 체도의 개혁 6. 정치 기강의 문란과 개혁 운동 <p>IV. 근대 사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계승 <p>V. 현대 사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정통성 2. 만주 중흥의 새 전기

108) 이 표는 차미희 앞의 논문 중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1979년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중세사 목차 비교>

1979년판 중학교 국사	1979년판 고등학교 국사
IV. 고려 시대의 생활 1. 민족의 재통일과 발전 2. 고려 전기의 사회와 문화 3. 고려 중기의 사회 동요와 무신 정권 4. 몽고와의 항쟁과 시련 5. 고려 후기의 사회와 문화 V. 조선의 발전과 시련의 극복 1. 조선의 성립과 발전 2. 피어나는 민족 문화 3. 양반 사회의 변천 4. 대외 관계와 외침의 극복 VI. 조선 사회의 새 움직임 1. 제도의 개혁과 실학 운동 2. 중흥 정치와 경제 활동의 성장 3. 문예 활동과 종교 생활의 새로운 동향 4. 격동하는 조선 사회 VII. 근대화의 시련과 자주 운동 1. 흥선 대원군의 정치와 개화·척사 운동 2. 동학 혁명 운동과 제도의 개혁 3. 자주 국가 운동의 전개 4. 민족의 자각과 근대 문화	II. 고려 사회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2. 귀족 사회의 발달과 문화의 성장 3. 고려 귀족 사회의 동요 4. 몽고 침략에 대한 항쟁과 고려 말의 정치 상황 III. 조선 사회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민족 문화의 발달 3. 사림의 성장과 그 문화 4. 왜란과 호란 5.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6. 문화의 새 기운

2. 제3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의 중세사 서술 내용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4년 국정교과서가 발행되자 학계의 반발은 매우 컸으며 언론에도 대서 특필되었다.¹⁰⁹⁾

국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과 해석이 교과서 마다 다르거나 상반되는 국정교과서를 펴냈다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인문계 고교 국사교과서에는 3백19개소, 중학교는 2백29개소가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국사교과서편수가 얼마나 무책임 날림이었던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¹¹⁰⁾

인문계 국정 국사가 3백19개소, 중학교 국사 2백29개소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문교부 자체 조사되었던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국정 국사의 교육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 학기동안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곤혹과 의문 느꼈다. 역사교육관에 비추어 볼 때 수궁이 가지 않는 점이나 국정 국사교과서의 편수 의도와는 의견을 가지게 된 점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지적해 온 사실의 착오도 있었고 전후가 당착되는 서술도 있어 교수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¹¹¹⁾

1977년 교과서 연구자 米昇右가 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국어 사회 자연 실과 국사 등 각 과목(예능제외) 35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 바, 현행 초등학교 각급 학년 교과서에서 한 책에 평균 20~50여개씩 틀린 곳이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모두 합치면 9백 46개나 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역사적 사실의 오류는 6학년 국사 1백 28페이지에서 ‘우리 국토가 갈라진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고 설명하였고, 8.15이후 30년도 안

109) 「문교부조사 국사 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마다 史實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110) 「국정 국사교과서의 난맥」, 『경향신문』 1975년 9월 9일.

111) 이원순 진영일 정선영, 「중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의 분석적 고찰」, 『역사교육』 16, 1974.

된 것처럼 돼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책의 내용을 고치지 않은 채 인쇄해 온 때문에 생긴 것¹¹²⁾이라고 한다. 미씨는 그동안 문교부의 위촉을 받아서 조사한 내용과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 등 여러 권의 교과서 오류를 지적, 문교부에 두 차례나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창작과 비평사의 기획 특집에서는 국정 중·고 교과서 서술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역사연구의 현실적 중요성이 있다.’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모색하는데 건설적인 기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고대부분은 김정배, 고려시대는 이우성, 이조전기는 이성무, 이조후기는 송찬식이 논평을 담당하였다.¹¹³⁾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문교부도 국정 교과서의 오류가 심각성을 파악하고 1975년 문교부는 고교(인문)국사교과서에서 3백19개, 중학에서 2백29개소의 수정할 곳을 지적한 정오표를 따로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고서 「현행 인문계 고교 및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분석연구」에서 현행 인문계 고교 및 초·중·고교국사교과서를 1백개 항목별로 분석하였는데 「초·중·고별 교과서 내용체계」에서 50여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면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⁴⁾ 보고서에서 크게 초·중·고교가 제각기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역사상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¹¹⁵⁾

교육 현장에서 국정 국사를 교육하였던 교사의 분석도 이루어졌다. 중·고 역사교사의 현장연구에서 서술구조와 기본 사실의 선택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고별로 교과서 내용의 서술에서 계열성 난이성 신빙성 및 타당성을 고찰하고 국정교과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교육자로서 자성의 자료를 삼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¹¹⁶⁾

본 란에서 창비에서 제시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교사의 분석을 참조하여 국정 국사의 서술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대별로 주요 논점을 1974년과 1979년판 국정교과서를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고려시대

고려 건국의 의의와 관련하여 태조가 취한 정책 가운데 사회경제적 부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이른 바 취민유도일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3국 말기에는 經界가 정확하지 못하였고 賦歛도 표준이 없었다. 고려 태조가 왕으로 되자 맨 먼저 토지 제도를 개정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한도를 정하였다는 것이다.¹¹⁷⁾

<고려의 건국> 그는 고대 사회의 수취체제를 고쳐 조세를 가볍게 하고 노비를 해방하여 평민으로 만드는 등 새로운 국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같이 사회의 진전 방향에 맞는 정치를 실시하자, 호족들이 왕건에게 심복하여 궁에 때보다 세력이 더 커졌다.(1974년판 60쪽)

112) 「국민교 교과 틀린 곳이 많다 교과서연구가 米昇右씨 조사」, 『동아일보』 1977년 5월 25일.

113) 강만길, 「사관과 서술체제의 검토」, 1974. 근대는 이중영이 담당하였으나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집-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창작과 비평 9-2. 1974. 3.

114) 「문교부 조사 국사 교과서 내용에 문제점 초·중·고마다 史實 달라」, 『경향신문』 1975년 9월 8일.

115) 위와 같음. 해동공자로 칭송된 최충의 사학인 문헌공도는 『고려사』 권74, 선거지 사학조에 기술되어 있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연구』, 경인문화사, 2001 참조.

116) 이원순 진영일 정선영, 앞의 논문.

117) 『고려사』 권78 食貨志1 ‘三國 末經界不正 賦歛無藝 高麗太祖即位 首正田制 取民有度 而倦倦於農桑 可謂知所本矣’

<고려의 건국> 그는 새로운 국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세를 가볍게 하는 한편, 양민으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등 모범을 보였다. 왕건 태조가 이와 같은 정치를 실시하자, 많은 호족들이 심복하여 오게 되어, 궁예 때보다 세력이 더욱 커졌다.(1979년판)

태조는 고대사회의 수취체제를 고쳐 조세를 가볍게 하고 사회의 진전방향에 맞는 정치를 실시'하였다는데 고대의 수취체제는 무엇이며, 무엇을 고쳤다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의 진전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¹¹⁸⁾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왕건은 조세를 1/10로 경감하여 '取民有度'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⁹⁾ 1979년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양민으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여 광종대 노비안검법을 연상시켜 혼란을 주고 있다.¹²⁰⁾

광종 다음 임금인 성종대의 유교정치 확산은 최승로의 시무 상소에 기인하는 바 크다. <정치 사상의 변동>(63쪽) 성종 때에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그 뒤부터 고려의 정치는 신라시대와는 크게 달라져서 유교정치 사상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등국사 1974년판 64쪽) 유교정치 사상을 가지고 고려정치가 신라와 크게 달라졌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¹²¹⁾

<정치사상의 변동> 고려 초기(태조~경종)의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진통을 겪은 시기였다. ... 성종 때에 와서는 그 때까지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 그 뒤부터는 고려의 정치는 신라 시대부터 크게 달라져 유교 정치 사상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974년판 64쪽)

<정치사상의 변동> 고려 초기(태조~경종)의 사회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진통을 겪은 시기였다. ... 성종 때에 와서는 그 때까지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그 뒤부터 고려의 정치는 신라 시대와는 크게 달라져서, 유교 정치 사상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979년판)

같은 교과서인 고등국사 1974년판 42쪽에서 통일신라의 <정치조직의 정비>에서 '왕권의 강화와 중앙정치 체제의 정비에 따라 유교의 정치이념이 필요하게 되어 신문왕 때에는 국학을 세우고 한학교육에 힘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왕권의 강화와 중앙 정치체제의 정비로 유교정치 이념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으면서 고려 부분의 서술부분에서는 신라와 크게 달라졌다고 하며 <정치사상의 변동>이라는 항목까지 넣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이다.¹²²⁾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바 크다. 태조대 지방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광종대 과거제의 실시로 인해 유학 교육이 이미 진전되었다. 1979년판의 서술처럼 '고려 초기(태조~경종)의 사회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진통을 겪은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때까지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단정을 짓는 것도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 뒤부터 고려의 정치는 신라 시대와는 크게 달라졌는지도 의문이 들며 유교 정

118) 이우성, 앞의 글.

119) 『고려사』 권2, 태조제가 태조 17년 5월 6일(을사), '夏五月 乙巳 幸禮山鎮, 詔曰 ...宜爾公卿將相食祿之人, 諒予愛民如子之意, 矜爾祿邑編戶之氓'

120) 김두진, 「고려 광종대의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 15, 1979.

121) 이우성, 앞의 글.

122) 위와 같음.

치사상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지만 최승로 시무 상소 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교는 불교와 더불어 ‘修身은 佛敎, 理國은 불교’¹²³⁾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고려전기 문벌귀족시대는 이자겸과 묘청의 난으로 흔들리더니 무신의 난으로 종말을 맞았다. 고등국사 1974년판에서는 <사회의 동요>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었으며 중학국사 1974년판에서는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라는 제목하에 서술하여 차이를 빚고 있으며, 더구나 고등국사가 중학국사보다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서 후퇴하였다는 평이다.¹²⁴⁾

<사회의 동요> 이와 같은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드디어는 천민 집단들까지 난을 일으켰다. … 이러한 일은 문신 중심의 지배 체제가 무너지자, 고려 사회의 모순이 노출된 당시의 사회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1974년판, 84쪽)

<사회의 동요> 이와 같은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드디어는 천민 집단들까지 난을 일으켰다. … 이러한 일은 문신 중심의 지배 체제가 무너지자, 고려 사회의 모순이 노출된 당시의 사회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1979년판)

무신집권시대 100년 가운데 최충헌 등의 최씨 집권기는 무신집권기의 확립기라고 부를 만큼 안정기였다.¹²⁵⁾ 최씨 무인집권기를 열었던 중학국사 1974년판 제 4절 제 6항 <무신정권의 확립>(83쪽)에서 최충헌을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여 마치 영웅적 인물로 서술하였다. 나아가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없애는 데 성공하였다.’거나 ‘그는 당대에 두 왕을 폐하고 네 왕을 세우니 왕은 이름뿐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지방의 민도 그의 손에 의하여 거의 진압되어 어지러운 시대가 수습되었다’ 등등이다. 이러한 서술은 최충헌을 긍정적인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씨무인정권의 성립> 이의민을 죽이고 대신 정권을 잡은 최충헌은 상당한 경륜과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다. … 왕실에서도 이름뿐인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최충헌을 숙청하려다가 도리어 명종, 희종 등 두 왕이 폐출당하였다.(1974년판 84-85쪽)

<최씨무인정권의 성립> 이의민을 죽이고 대신 정권을 잡은 최충헌은, 왕에게 정치를 개혁하고자 10조의 시무를 올렸다. … 왕실에서도 이름뿐인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최충헌을 숙청하려다가 도리어 명종, 희종, 희종 3왕왕이 폐출당하였다.(1979년판)

이미 지적된 바와같이 최충헌은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하나로 평가 받는 만적의 난¹²⁶⁾ 등은 백성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국민의 반역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전통시대에서 최충헌은 『高麗史』 叛逆列傳¹²⁷⁾에 설정되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고등국사 1979년판에서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최충헌의 봉사10조를 서술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하면서 서술하였다.¹²⁸⁾

123) 『고려사』 권93, 최승로열전, ‘行釋敎者 修身之本 行儒敎者 理國之源 修身是來生之資 理國乃今日之務’

124) 강만길, 앞의 글.

125) 박용운, 『고려시대사』(수정증보판), 일지사, 2008.

126) 만적의 난을 민중운동으로 높이 평가한 연구는 당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주목된다. 변태섭, 「만적의 난」, 『사학연구』 4, 1959.

127) 『고려사』 권129, 반역열전 42, 최충헌.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원 간섭기에 이르러 원의 간섭을 받았다. 이전의 교과서에 ‘원의 지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반원정책으로 원의 간섭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한 시기는 공민왕이며 그에 의해 권문세족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한 인물이 신돈이었다.¹²⁹⁾ 중학국사 1974년판 제2장 2항 <고려의 자주성 회복운동>(99쪽)에서 ‘신돈을 기용하여, 권력자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많은 토지의 노비를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혹은 해방시켜 주었다.’고 서술하여 그를 훌륭한 개혁정치가인 듯 서술하였다고 지적을 받았다.¹³⁰⁾

<여말의 정치세력의 성격과 일반상황> 원의 압력으로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으므로 공민왕의 정치를 밀고 나아갈 만한 계층이 성립되지 못하여 헛된 정치적 혼란만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민왕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승려 신돈을 기용하여 그의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다.(1974년판 100쪽)

<공민왕의 개혁 정책과 흥건적의 침입> 공민왕은 이 때를 이용하여, 원을 배경으로 왕권을 누르고 있던 기철 등을 숙청하고 정동행성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략하여 영흥 이복의 땅을 다시 찾았고, 나아가서 인당, 최영으로 하여금 요동 지방을 공략하게 하였으며, 원의 간섭으로 바뀌어졌던 관제를 추구하였다.(1979년판)

위의 고등국사에서는 중학국사와 같은 서술은 되지 않았으나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승려 신돈이라고 하여 당대 당파가 있었던 듯 기술한 것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고등국사 1979년판에서는 아예 신돈을 서술치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

고려시대 시대는 대내적으로는 황제국을 지향한 자주적인 측면을 지녔으며 국제성과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닌 사회였다, 그러한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서술한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고려사회의 구성> 고려 사회는 8촌까지 포함하는 친족공동체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친족공동체는 다시 몇 개의 대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대가족이 한 부락 안에 살면서 대가족의 통솔을 받았다. 그러므로, 대가족의 권위를 인정하고 토지 급여와 조세, 역, 공물의 의무를 대가족 단위로 지우면 사회의 운영이 쉬우므로, 고려 사회는 평민으로부터 상류 귀족에 이르기 까지 모두 대가족으로 편제되었다. 대가족을 가진 지방 호족이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 집권 체제 안의 고관이 되면, 중앙 귀족으로 전환되었다.(1974년판 71쪽)

128) 기왕의 연구들 가운데는 초기 최충헌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도 있다. 변태섭, 「무신란과 최씨정권의 성립」,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110쪽. 하지만 그러나 최충헌의 「봉사10조」는 최충헌 자신이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올린 것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윤경, 「최충헌정권의 성립과 그 성격」, 『이대사원』 20, 1983, 165쪽.

129) 이에 대해서는 황인규, 「편조신돈의 불교계 행적과 활동」, 『만해학보』 6, 2003 참조.

130) 이우성, 앞의 글.

<고려 사회의 구성> 고려 시대에 와서 각자 성(姓)을 가지게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친족 공동체들은, 다시 몇 개의 대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는 대가족장의 권위를 인정하여 조세, 역, 공물의 의무를 가족 단위로 지움으로써 사회의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고려 사회는 평민에서 상류 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가족 단위로 편제되었다.

대가족을 가진 지방 호족들이 특별한 공이 있든지,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 집권 체제 안의 고관이 되면, 중앙 귀족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중앙 귀족들은 서로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커다란 족벌 세력을 이루었는데, 고려의 정치는 이 족벌 세력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고등국사 1974년판 <고려사회의 구성>(71쪽)에서 ‘고려사회는 친족공동체가 성립되어 있었고 친족공동체는 다시 몇 개의 대가족으로 나뉘어 다시 있었다’고 말하고 대가족장의 통솔하에 토지급여와 조세 역역 공물의 의무를 대가족단위로 치우치게 되었다고 한다. 8촌까지 포함하는 친족공동체는 8촌 이외의 동족들 운운 서술하였다.¹³¹⁾

이미 지적인 바와같이 친족공동체 간에 어떤 실질적 차별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친족 공동체에서 차별은 제사관계 복제관계에 있어서는 예속적 차별은 존재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8촌을 넘어선 동족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의식을 지녔던 것이 아닐까 하며, 고등국사에서 서술된 ‘8촌 친족공동체의 성립’은 하나의 픽션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¹³²⁾

그리고 대가족설도 믿을 수 없다. 부모가 사망하면 형제는 으레히 분가하였다. 이 분가는 子孫이 戶籍을 나누고 財産을 나누는 別籍異財¹³³⁾라고 하여 호적을 따로 내고 재산을 달리 하는 것이다. 부모 생존시 이미 분가하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당률로써 그것을 억제하려 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커져갔던 것이다. 형제가 분가하는 가족은 소가족 형태에 속하였던 것 같다. 고려시대는 소가족 단위가 일반적인 거주형태였다.¹³⁴⁾

고려시대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고등국사 1974년판 토지제도의 설명(67쪽)도 문제이다.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이와 같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배하면서도, 토지 국유의 원칙을 내세워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만 가지며, 농민들은 토지의 경작권만 가지게 되었다. 수조권이 개인, 관청, 사원에 있는 토지를 사전이라 하고, 국가에 있는 토지를 공전이라 하였다(1974년판 67쪽).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이와 같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배하면서도, 토지 국유의 원칙을 내세워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만 가지며, 농민들은 토지의 경작권만 가지게 되었다. 수조권이 개인, 관청, 사원에 있는 토지를 사전이라 하고, 국가에 있는 토지를 공전이라 하였다.(1979년판)

이와같이 고려시대 서술중에 에는 수조권과 경작권이란 용어를 일인의 학자의 견해를 답습한 듯하다. 경작권이란 용어는 조선 초기의 병작반수의 설명에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지만 고려시대의 상황에는 적용되기 힘들다. 자영농민이 소유했던 토지는 사실상 소유권을 지녔으므로 경작권자체를 운운할 필요도 없으며 전호의 경우에도 그의 권리가 법제적으로 아무

131) 이우성, 앞의 글.

132) 이우성, 앞의 글.

133) 『고려사』 권84, 형법지, 호훈; 『신편한국사』 15, 「고려전기 사회와 대외관계-1. 사회구조」.

134) 『신편한국사』 15, 「고려전기 사회와 대외관계-1. 사회구조」.

런 보장도 없었으므로 경작권이란 용어도 부합되지 않는 용어이다. 조선 건국 직전의 과전 법에서 전호가 경작권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¹³⁵⁾

토지의 소유에 따른 고등국사 1974년판 공전 사전의 구별의 서술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고등국사 1979년판에서 수조권이 개인 관청 사원에 있는 것이 사전이고 국가에 있는 것이 공전이라고 서술했지만 관청에서 수조하는 것은 공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전 중에 일과 2과 3과가 있었으니 국가에 속한 것만이 반드시 공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¹³⁶⁾

고려시대의 불교는 국가불교라고 부를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교과서에서 불교 서술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불교 종파 부분이었다.

<불교> 신라 말부터 시작된 5교 9산의 사상적 대립은 그 로 계속되고 있었다. … 고려의 선종은 뒤에 생긴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나뉘게 되어, 그 때부터 고려 불교를 5교 양종이라 부르게 되었다. … 대각국사는 송, 요, 일본 등지에서, 대장경에 빠진 불경을 수집하여, 먼저 신편제종교장총록이라는 불서 목록을 만들고, 이에 의하여 4700여 권을 다시 출판하였는데, 이를 속장경이라 한다. 이 속장경에는 불경도 포함되어 있으나, 불교 연구서인 논, 소, 초 등도 모은 것을 보면, 대각국사가 불교 사상 정리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1974년판 77~78쪽)

<고려 후기의 불교> 무신란 전에는 5교 중의 화엄종과 양종 중의 천태종이 성한 반면 조계종은 쇠퇴하였으나, 무신란 이후 조계종이 교리상 발전을 보게 되자, 최씨 무신 정권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조계종을 후원하였던 것이다.(1974년판 90쪽)

<불교> 신라 말부터 시작된 5교 9산의 사상적 대립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 대각국사는 송, 요, 일본 등지에서, 대장경에 빠진 불경을 수집하여, 먼저 신편제종교장총록이라는 불서 목록을 만들고, 이에 의하여 4700여 권을 다시 출판하였는데, 이를 속장경이라 한다. 이 속장경에는 불경도 포함되어 있으나, 불교 연구서인 논(論), 소(疏), 초(抄) 등도 모은 것을 보면, 대각국사가 불교 사상 정리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후기의 불교>무신의 난 이후 조계종이 교리상 발전을 보게 되자, 최씨 무신 정권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조계종을 후원하였다. 무신의 난 이후 조계종이 교리상 발전을 보게 되자, 최씨 무신 정권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조계종을 후원하였다.(1979년판)

5교 양종설은 일제 강점기 『진단학보』에 실린 포광 김영수의 설에 따른 것으로¹³⁷⁾ 바로 잡아 할 사실이며, 의천의 속장경 서술부분도 일제강점기 일인 학자의 설¹³⁸⁾에 따른 내용으로 1975년 무렵에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수정된 것이나 최근까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 즉, 속장경이 아니라 교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최근의 교과서에서야 비로서 제대로 실린 사항이다.

조선시대 시대는 일제 식민사관인 타율성론, 당파성론, 정체성론 등으로 가장 많이 왜곡이 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인 물론이고 해방이후 국사학계에서 가장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박정권이 들어선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부각되어 이른바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을 확립으로 민족중흥이 강조되었다.¹³⁹⁾ 박정희는 세종과 영조 정조 시대를 문화

135) 이우성, 앞의 글.

136) 위와 같음.

137) 김영수, 「오교양종에 대하여」, 『진단학보』 8, 1937.

138) 小野玄妙 「高麗祐世僧統義天の大藏經板雕造の事蹟」 『東洋哲學』 18編2(明治44년 1월).

139) 박정희의 『우리민족의 나갈길』(1962), 『국가와 혁명과 나』(1963), 『민족의 저력』(1971), 『민족중흥의 길』(1978)이라는 저술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적 르네상스라고 하여 자랑스럽게 여겼고 향약과 계,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 실학상 등은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인정하였다.¹⁴⁰⁾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은 한글(훈민정음) 밖에 다른 무엇이 뚜렷한가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 마디로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連鎖史'일 뿐이었다.¹⁴¹⁾ 사대주의 사관, 타율성과 정체성으로 일관된 듯한 일제의 식민사관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이다.¹⁴²⁾ 이러한 박정희에 의해서도 대부분 부정된 조선왕조사는 국정교과서에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왕조는 고려후기에 등장한 신흥 사대부 세력과 신흥 무장세력의 제휴로 건국된 사회이다. 고려왕조는 불교의 호위지력으로 고려 왕조를 건국되었음에 반해 조선왕조는 성리학의 이념으로 건국되었다. 이는 태조의 훈요십조와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뚜렷하게 대비되어 설명되고 있다.¹⁴³⁾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은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의 '得其心則服之。不得其心則去之'¹⁴⁴⁾에서 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본정치는 16세기의 양반정치 때문에 무너졌다가 18세기, 즉 영조 정조 시대에 실학사상과 사회개혁 의욕이 어느 정도 정치에 반영되어 부흥되는 것이라고 한 고등국사 1974년판의 서술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¹⁴⁵⁾ 15세기 양인국가를 민본정치의 이상으로 보았지만 조선시대는 양반에 의해 지배되었던 양반관료국가였다.¹⁴⁶⁾ 16·17세기의 사회와 당쟁과 19세기의 세도정치를 양반 귀족정치로 규정하거나 18세기의 실학과 한말 대원군의 개혁정치를 민본의식 민본정치의 부활로 보는 것은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 사관과 다를 바 없다.

<조선왕조의 건국> 조선왕조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자와 이성계를 지도자로 하는 무인 세력의 협력으로 건국되었다. 이들은 중간계층 출신인 지식인 관리로서 대체로 고려 중기이후 향리나 평민 가운데 성장한 신흥세력이며 경제적으로는 중소 지주로서 생활기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고려말기의 사회적 혼란과 민족의 시련을 깊이 통찰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민본 의식과 애국심을 기르게 되었고, 나아가 부국 강병을 위한 개혁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중간 계층의 개혁운동과 역성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귀족정치에 신음하던 하층 농민과 노비의 지지 및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건국은 평화적인 왕조교체이면서도 실제로는 귀족과 귀족정치에 대한 민중과 민본 의식의 승리였던 것이다.(1974년판 105쪽)

<사대부의 등장> 이러한 새로운 학자, 종교인, 관료, 무인 들은 대개가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향촌이나 변방에서 배출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체질은 일반적으로 구질서에 대한 집착이 약하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한편, 새로운 사회를 이념적으로 이끌어 간 것은 학자, 관료들로서, 그들은 유교적 소양이 깊어서 사대부(士大夫)라고도 불렸다. 사대부들은 최씨 무신 정권 시대에 문학, 종교 방면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문화 방향을 모색하였고, 그 뒤 성리학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경륜을 더욱 세련시킬 수 있었다.

140)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갈길: 사회 재건의 이념』, 196,2동아출판사, 96~107쪽.

141)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1997, 252쪽.

142)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2007, 47쪽.

143) 『고려사』 권2 태조세가 태조 26년 4월 훈요십조;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태조즉위교서.

144) 鄭道傳, 「正實位」, 『朝鮮經國典』 上. : 『三峯集』 卷7.

145) 이 이론은 집필자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업적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아직 학계의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개인의 사론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한영우, 「조선초기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사론」, 『동양학』 8, 1977.

146) 이성무, 앞의 글.

공민왕 때 과거 제도와 학교 제도가 다시 정비되면서, 사대부의 이념과 세력은 급속히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사대부들은 고려 후기의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시련을 깊이 통찰하여 애국, 애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철학을 가다듬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내다보면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1979년판)

<조선 왕조의 개창> 중앙 집권의 강화와 관료 정치의 정비는 사대부와 군주의 양면에서 요구되었다. 이러한 때에 공민왕이 즉위하여 승려 및 사대부와 연결을 가지면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왕이 들어서면서 권문 세족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사대부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시기에 사대부는 점차 두 파로 갈라졌다. 즉,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혁명파가 서로 대립되었다. 이 때, 사대부의 절대 다수는 온건파에 속하였다. 그러나, 정도전, 남은 등과 같은 혁명파는 신흥 무장 세력과 농민 군사들을 끌어들이 역성 혁명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막강한 군사력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가진 이성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왕조 교체의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1979년판)

위와 같이 고등국사 1974년판에서 15세기의 민본정치는 극도로 미화되어 고등국사의 15세기 서술이 42% 분량에 달하고 있다. 조선왕조를 세운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유학자와 이성계를 지도자로 하는 무인세력이 역성혁명이 성공하게 된 것은 귀족정치에 신음하던 하층 농민과 노비의지지 및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은 서술이다.

조선 건국후 조선왕조 사업을 펼친 세력은 흔히 관학파로 불리고 있으며 성종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림파가 조선전기 사회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고등국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성리학의 두 경향> 선초의 성리학에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정도전, 권근 등을 대표하는 관학파 성리학이요, 다른 하나는 길재, 김종직, 조광조 등을 대표로 하는 사학파(사림파) 성리학이다...김종직에서 조광조에 이르는 초기 사림파는 관학파 성리학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주자학설에 그대로 얽매이는 경향이 짙었다. ... 관학파와 초기 사림파의 학풍은 이이에 의하여 집대성되어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1974년판 121쪽)

<성리학의 두 흐름> 조선 왕조의 개창을 둘러싸고 성리학에 보다 충실하려는 일부 사대부들은 왕조 교체가 의리, 도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역성 혁명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향촌에 내려가 교육과 향촌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들은 영남을 중심으로 사림파를 형성, 16세기 이후로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한편, 무인, 농병(農兵)과 연결되어 왕조 개창에 참여했던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우는 한편, 부국 강병과 중앙 집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상 조류들을 흡수하여 신축성 있는 사상 정책을 펴 나갔다. 이들을 훈구파라 한다. 태조, 태종 때에는 불교 사원과 도교 행사의 경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정도전과 권근은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 사람은 성리학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가 건설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림파의 학풍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훈구파는 관학과 집현전을 통해서 양성되어 수준 높은 15세기 문화를 창조하였고, 사림파는 사학(私學)을 통해서 양성되어 16세기 이후의 사상계를 성리학 중심으로 이끌어 갔다.(1979년판)

위에서 서술된 바와같이 고등국사 1974년판에서는 정도전 권근을 대표로 하는 관학파(기

호학파)를 긍정적으로 17세기 이후의 사림파(영남학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선초기 관학파를 조선후기 실학에, 조선중기 사학파를 공리공담을 일삼는 후기 주자학자들로의 확대 대로 보았다.¹⁴⁷⁾ 주지하다시피 사림파에 의해 조선중기 이후 정치 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봉당정치가 전개되게 이르는데 조선후기는 사화당쟁의 역사로서 다음과 같이 조서놓기 정치사의 큰 오점이라고 하여 일제의 식민사관의 당파성론을 개진한 느낌이 짙다.

<양반계급의 분열> 당쟁은 조선후기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파멸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1974년판 136쪽)

<당쟁의 발생> 당쟁은, 처음에는 학문과 이념의 차이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그 폐단이 크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사림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기능도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리 민복보다는 사당(私黨)의 이익을 앞세우고, 이념보다는 학벌, 문벌, 지방 의식과 연결되어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당쟁의 격화> (1979년판)

이와같이 국정교과서에 당쟁에 대한 부정시각으로 서술되었는데 조선시대를 전후기로 구분할 만큼 양란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서술도 마찬가지다.

<일본과의 전쟁> 적은 상륙한 지 18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만에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유린하였다.(1974년판 137쪽)

<(1) 왜란- 임진왜란> 왜군은 부산과 서울을 점령하고, 다시 평안도와 함경도로 북상을 계속하였다.(1979년판)

<청과의 전쟁>(1974년판 140쪽)

<(2) 호란-인조반정과 여진족의 침입>(1979년판)

<1> 실학의 발달-실학의 발생과 그 성격> 왜란과 호란은 사림의 집권 기간에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사림이 도덕적 명분과 당쟁에만 몰두하고 사회 기반의 정리와 부국 강병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었다. 왜란과 호란 중에 사림이 높은 문화적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저항한 기백은 큰 것이었다.(1979년판)

중학국사에서 ‘7년전쟁’, ‘청과의 전쟁’이라는 표제를 실었으며, 고등국사에서 ‘일본과의 7년전쟁’, ‘청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국사 1974년판에서 ‘적은 상륙한 지 18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만에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유린하였다.’고 하여 역시 일제 식민사학자의 서술을 그대로 모방한 듯하다. 고등국사 1979년판에서도 왜란과 호란을 사림의 당쟁 등 내부적 요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내재적 발전을 경시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실학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4. 민본 민족의식의 부활과 제도 개혁-(1) 민본 민족 의식의 부활- 실학의 발달과 민족 문화의 중흥> 양반 지배 사회에 대한 반성이 이미 16세기에 조광조, 이이, 이언적 같은 학자 사이에서 일어났고, 두 차례의 국난을 치르면서 더욱 반성의 기운이 고조되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학술과 예술계를 포함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었다.

이 새로운 문화의 기풍이 이 시기의 중간 계층인 중소지주 출신의 학자와 관료, 농촌 선비들에

147) 이성무, 앞의 글.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가를 일반적으로 실학자, 그 학풍을 실학이라고 한다.(1974년판 143쪽)

<1> 실학의 발달-실학의 발생과 그 성격> 일부 선각적인 유학자들은 성리학 일변도의 문화가 가진 한계성을 깨닫고,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달성하여, 안으로 분열된 사회를 재통합하고, 밖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국가 역량을 강화하려는 문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 운동은 학술과 종교, 철학, 문학, 예술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중에서 학술 분야에 나타난 새로운 학풍을 우리는 실학(實學)이라고 부른다

실학자는 성리학적 소양이 깊은 유학자들이었지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도 폭넓게 받아들여, 그 학문 범위가 전시대보다 넓어지고 실증적인 학풍을 지닌 점에서 특색을 가졌다.(1979년판)

실학사상은 해방이후 근대적 움직임으로 한국사학계가 매우 역점을 연구 성과를 낸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위의 국정 교과서의 서술처럼 '정도전 등 15세기 지배사상의 부활'이라고 서술한 것은 그간의 한국 사학계의 '연구업적을 외면하고 그것을 모독한 이론'이라고 하면서 실학자들이야말로 민중의 편에 선 최초의 지식인 등이었다고 강조하였다.¹⁴⁸⁾

실학자들은 중국적 화이관에서 일탈하고자 하였는데 조선전기 대명외교에 대한 국정교과서의 서술 문제도 지적되었다.

<자주적 대명외교>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사대외교를 추구하여 17세기 초까지 두 나라는 대체로 평화체제를 유지하였다. 사대라는 말은... 자급자족적인 농업국가끼리 평화를 추구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하여 형식상 상하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주권을 침해하는 식민지 종속 관계와는 다른 것이었다.(1974년판 109쪽)

<명과의 관계>조선과 명은 선린 우호 관계를 도모하면서 피차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실리 추구하고 국토 확장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긴장이 계속되었다.(1979년판)

위 고등국사 1874년판의 서술과는 달리 '대명사대는 동아시아의 보편적 국제관계로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명의 문물을 수입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사대와 자주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중화 의식은 중국문화에 대한 문화 모방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명에 대한 문화자존 의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외교적 사대는 공리적 측면이 강했지만 대등외교는 아니었다¹⁴⁹⁾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148) 국정 교과서 1974년판에서 탕평책 속대전 대전통편 등 법전의 개편, 균역법의 실시, 군사제도의 개편 등이 민본정치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민본정치와 거리가 멀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149) 이성무, 앞의 글.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그 특징

한철호(동국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국사』의 근·현대사 서술체제 변화와 그 특징
 - III. 『국사』의 근대사 서술내용 변화와 그 의미
 - IV. 맺음말
-

I. 머리말

역사 교과서가 역사교육의 절대적인 지침서는 아니지만, 역사교육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본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수업교재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과서의 내용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사와 상보관계를 이루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집필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관의 변화보다는 6·25전쟁(한국전쟁)·10월 유신 등 정치적 사건 혹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내용도 정권의 성향과 논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과정—특히 역사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적·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하기보다는 이념공세의 터전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역사교육의 자율성·중립성마저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국사』 국정교과서를 꼽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3차 교육과정은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의 초석을 마련한 10월 유신 직후 1974년 12월 조국의 근대화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유신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국사’는 도덕과 더불어 독립 교과가 되었지만, 국가가 교과서의 내용과 해석을 독점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뀔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상상력·비판력을 배양한다는 역사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는 곧 국사 교육의 파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1974년 『국사』 교과서가 발행된 직후 그 문제점을 비판한 글이 즉각 발표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¹⁾ 그 후 지금까지 고등학교 『국사』의

1) 강만길, 「사관과 서술체제의 검토」, 『창작과 비평』 32, 1974 여름 ; 이원순·진영일·정선영, 「중·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역사교육과정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혹은 단독으로 제3차 교육과정의 성립 배경·과정과 성격을 살펴보면서 『국사』의 서술체제와 성격을 고찰한 글이 많다.²⁾ 또 『국사』의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학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실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내용과 관점을 그 전후 교육과정의 교과서들과 비교·분석한 글도 적지 않다.³⁾ 그 결과 『국사』 교과서의 편향적이고 친정권적 성격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주제에 관해서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집중된 반면 근대—특히 흥선대원군 시대부터 일제의 한국병탄 이전—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나마 1974년판과 1979년판 『국사』의 서술내용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의 서술체제와 내용을 치밀하게 비교·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사』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인식과 이해력·판단력을 배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역사교육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 2종의 근·현대사 서술체제와 내용을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74년판과 1979년판 『국사』에서 근·현대사의 서술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과연 『국사』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교과서의 기본요건에 적합했는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1974년판과 1979년판 『국사』에서 근대사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단,

용 국정국사교과서의 분석적 고찰], 『역사교육』 16, 1974.

- 2)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고등학교—』, 대한교과서, 1990 ;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 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5, 1991 ;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보급」, 『역사문제연구』 15, 2005 ;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 『국사교육 강화와 국가주의 역사교육』,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역사교육이 걸어온 길—』, 휴머니스트, 2015 ; 김홍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 1992 ; 조동원, 「한말 의병에 대한 「국사」 교과서 서술내용의 분석」, 『건대사학』 8, 1993 ;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 1997 ; 신주백,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국사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편(1968~1994)」, 『역사문제연구』 15, 2005 ; 임하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변천과 쟁점」,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 이신철, 「국사 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7, 2006 ; 장영민, 「박정희 정권의 국사교육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충남대) 34-2, 2007 ; 박진동, 「해방 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105, 2010 ;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국사과 독립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2011 ; 조성운, 「반공주의적 한국사 교육의 성립과 강화—미군정기~제4차 교육과정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2015 ; 허은철,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 및 국정교과서 검토」, 『역사와 교육』 21, 2015 ; 이봉규, 「박정희정권기 역사교육학계의 민족주체성 인식과 국사교육 강화」, 『역사문제연구』 37, 2017.
- 3) 김정인, 「해방 이후 국사 교과서의 ‘정통성’ 인식—일제강점기 민족운동사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5, 2003 ; 「국정 『국사』 교과서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와 현실』 92, 2014 ; 최병택, 「해방 후 역사 교과서의 3·1운동 관련 서술 경향」, 『역사와 현실』 74, 2009 ; 「국정 ‘국사’ 교과서 서술 방향의 문제점과 ‘민주주의’ 교육 원칙의 왜곡」, 『역사교육논집』 61, 2016 ;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19, 2014 ;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2014 ;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2015 ; 조성운,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신간회 서술 변천」, 『역사와실학』 57, 2015 ;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의 변천」, 『승실사학』 37, 2016 ; 방지원,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정치사-문화사’ 계열화 기준의 형성과 적용」, 『사회과학연구』 13-3, 2006.
- 4)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연구는 1974년에 이미 이원순·진영일·정선영(「중·고등학교용 국정국사교과서의 분석적 고찰」) 등에 의해 시도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원순 등은 당시 현장 교사로서 중·고등학교 『국사』의 시대별·영역별·주요사항별 비중을 비롯해 각종 학습보조자료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과연 교과서로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글에서 시사를 얻은 바가 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의 서술체제와 내용을 비교하는 작업은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II. 『국사』의 근·현대사 서술체제 변화와 그 특징

『국사』는 1974년에 초판이 간행된 후 1977년에 아주 미미한 부분 개정을 거쳐 1979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여기에서는 주로 초판과 개정판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서술 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전인 제2차 교육과정 혹은 교과서들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부각하고자 한다.

첫째, 단원별 혹은 시대구분별 구성을 보면, 1974년판에서는 대단원에 처음으로 근대와 현대가 들어갔으며, 근대와 현대의 기점이 각각 개항과 1945년 8월 해방으로 역시 최초로 설정되었다. 대단원명은 ‘고대’·‘근대’·‘현대’와 ‘고려’·‘조선’의 왕조명이 혼재되었기 때문에, 시대구분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서 교수요목기의 근세(1864~1910)와 최근세(1910~1945), 제1차 교육과정기의 조선 후기(1864~1910)와 현대(1910년 이후), 제2차 교육과정기의 조선의 근대화 운동(1864~1910)과 민주 대한의 발달(1910년 이후) 등⁵⁾과 달리, 근대(1876~1945)와 현대(1945년 이후)로 구분·명기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⁶⁾

5) 김상훈,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경인문화사, 2018, 283~346쪽 ; 박지숙, 「교수요목기 국사교육의 계열 성과 그 의의」,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55~62쪽 ; 이은령, 「제2차 교육과정기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발행과 체제」, 미발표원고, 2014 ; 임하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변천과 쟁점」, 47~55쪽. 또한 제2차 교육과정기에서 김상기는 교육과정과 달리 독특하게 대단원을 선사·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로 나누었는데, 근·현대는 1864년부터 시작된다. 김상기, 『국사』, 장왕사, 1968.

6) 이에 대해 “시대구분문제를 의식하고 있지만 종전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였을 뿐이며 새로운 進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원순·진영일·정선영, 앞의 글, 12쪽.

표 1 『국사』의 단원별 구성

1974년판	1977/1978년판	1979년판
<p>III. 조선 사회</p> <p>5. 정치 기강의 문란과 개혁 운동 (2)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서양 열강의 도전, 대원군의 내정 개혁, 두 차례의 양요와 쇄국 정책</p> <p>IV. 근대 사회</p> <p>*중국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사진), 연표, 단원 개관</p> <p>1. 민족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p> <p>(1) 개화·척사 운동 문호 개방, 개화 운동, 척사 운동 (2) 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 열강의 침략, 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 근대적 제도의 마련 (3) 민족의 각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독립협회의 활동, 대한 제국의 성립 (4) 근대 문화의 성장 과학 문물의 수입, 새로운 사조와 언론 활동, 근대 교육의 발달, 국학의 연구와 문화의 새 경향, 새로운 종교 활동 (5) 민족 수난의 시작 대한 제국과 러일 전쟁, 대한 제국의 붕괴, 민족의 저항, 의병의 항전, 간도 개척</p>	<p>III. 조선 사회</p> <p>5. 정치 기강의 문란과 개혁 운동 (2)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서양 제국의 도전, 대원군의 내정 개혁, 두 차례의 양요와 쇄국 정책</p> <p>IV. 근대 사회</p> <p>*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사진), 연표, 단원 개관</p> <p>1. 민족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p> <p>(1) 개화·척사 운동 문호 개방, 개화 운동, 척사 운동 (2) 동학의 성장과 동학 혁명 열강의 침략, 동학 혁명, 근대적 제도의 마련 (3) 민족의 각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독립협회의 활동, 대한 제국의 성립 (4) 근대 문화의 성장 과학 문물의 수입, 새로운 사조와 언론 활동, 근대 교육의 발달, 국학의 연구와 문화의 새 경향, 새로운 종교 활동 (5) 민족 수난의 시작 대한 제국과 러일 전쟁, 대한 제국의 붕괴, 민족의 저항, 의병의 항전, 간도 개척</p>	<p>IV. 근대 사회</p> <p>*원구단(사진), 연표, 단원 개관</p> <p>1. 민족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p> <p>*개요, 연구 과제 (1)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정책 대원군의 내정 개혁, 쇄국 정책과 양요, (서양 제국의 도전) (2) 개화·척사 운동 개항, 개화 운동, 척사 운동 (3) 동학 농민 혁명 운동 열강의 침략, 동학 농민 혁명 운동 (4) 근대 문물의 수용 제도의 개편, 근대 문물의 수용 (5)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독립협회의 활동, 대한 제국의 성립 (6) 민족 수난의 시작 러·일의 대립, 일제의 침략, 간도 개척 (7)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의 항전 민족의 저항, 애국 계몽 단체와 언론 활동, 민족주의 교육의 발달, 학의 연구와 문화의 새 경향, 새로운 종교 활동, 의병의 항전</p>
<p>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계승</p> <p>(1) 일제의 식민지 정책 무단 정치, 식민지 경제 (2) 3·1 운동 독립 운동의 방향, 3·1 운동 (3) 민족 운동의 성장 임시 정부의 수립과 독립군의 항전, 민족 운동의 성장,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문화의 수호, 광복군의 항전</p>	<p>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계승</p> <p>(1) 일제의 대한 식민지 정책 헌병 경찰 정치, 식민지 경제 (2) 3·1 운동 독립 운동의 방향, 3·1 운동 (3) 민족 운동의 성장 임시 정부의 수립과 독립군의 항전, 민족 운동의 성장,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문화의 수호, 광복군의 항전</p>	<p>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수호</p> <p>*개요, 연구 과제 (1) 일제의 식민지 정책 무단 정치, 식민지 경제, 식민지 교육 (2) 독립 운동의 방향과 3·1 운동 독립 운동의 방향, 3·1 운동 (3) 민족 운동의 성장 식민지 통치의 강화, 임시 정부의 활동, 독립군의 항전, 국내에서의 민족 운동 (4) 일제의 민족성 말살 정책과 민족 문화의 수호 민족성 말살 정책, 민족 문화의 수호</p>
<p>V. 현대 사회</p> <p>*유조선의 진수식(사진), 연표, 단원 개관</p> <p>1. 대한민국의 정통성 (1) 대한민국의 성립 8·15 민족 해방과 국토 분단, 대한민국의 수립 (2) 6·25의 민족 시련 북한의 공산화, 6·25의 민족 시련</p> <p>2. 민족 중흥의 새 전기 (1) 민주주의의 성장 4월 학생 의거, 5월 혁명 (2)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 성장, 새마을 운동, 10월 유신 + 오늘의 역사적 사명(17줄 분량)</p>	<p>V. 현대 사회</p> <p>*유조선의 진수식(사진), 연표, 단원 개관</p> <p>1. 대한민국의 정통성 (1) 대한민국의 성립 8·15 민족 해방과 국토 분단, 대한민국의 수립 (2) 6·25의 민족 시련 북한의 공산화, 6·25의 민족 시련</p> <p>2. 민족 중흥의 새 전기 (1) 민주주의의 성장 4월 학생 의거, 5월 혁명 (2)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 성장, 새마을 운동, 10월 유신 3. 오늘의 역사적 사명</p>	<p>V. 현대 사회</p> <p>*농업의 기계화(사진), 연표, 단원 개관</p> <p>1. 대한민국의 정통성</p> <p>*개요, 연구 과제 (1) 대한민국의 성립 광복군의 항전, 민족 해방, 대한민국의 수립 (2) 6·25 사변의 민족 시련 북한의 공산화, 민족 시련의 극복</p> <p>2. 민족 중흥의 새 전기</p> <p>*개요, 연구 과제 (1) 민주주의의 성장 4월 의거, 5월 혁명 (2)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 성장, 새마을 운동, 10월 유신 3. 오늘의 역사적 사명</p>

<비고> ____ : 순서 바뀜, () : 삭제된 것, 고딕 : 용어나 내용 바뀌거나 추가

1979년판의 대단원은 1974년판과 동일하지만, 근대와 현대가 각각 흥선 대원군의 시대와 광복군의 항전으로 시작된 점은 다르다. 이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근대와 현대의 기점을 일본에 의한 개항이나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해방이 아니라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광복군의 항전으로 설정함으로써 타율적·외인론적 요인보다 주체적·내재론적인 성격을 부각하려 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1974년판보다 1979년판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단원은 현대에서 ‘오늘의 역사적 사명’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이지만, 소단원과 소주제는 특히 근대에서 증가하면서 구성과 제목도 많이 달라졌다. ‘오늘의 역사적 사명’이 중단원으로 격상된 것은 정권의 정당성·정통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선전하려는 국정교과서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⁷⁾ 또 근대 중 개화기의 소단원을 살펴보면, ‘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는 ‘동학 농민 혁명 운동’으로 바뀌었고, 그에 포함되었던 소주제 ‘근대적 제도의 마련’이 소단원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독립되면서 ‘갑오경장’이 상술되었다. ‘민족의 각성’은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으로 바뀌었으며, ‘근대 문화의 성장’은 삭제되는 대신 ‘민족 수난의 시작’에 있던 소주제 ‘민족의 저항’·‘의병의 항전’과 합쳐지면서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의 항전’이 신설되었다. ‘민족 수난의 시작’에서는 소주제 ‘대한 제국과 러일 전쟁’과 ‘대한 제국의 붕괴’가 각각 ‘러·일의 대립’과 ‘일제의 침략’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민족 운동의 성장’에 속했던 소주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문화의 수호’가 소단원 ‘일제의 민족성 말살 정책과 민족 문화의 수호’로 신설됨으로써 일본의 침략적 성격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경우, 소단원에서는 ‘6·25의 민족 시련’이 ‘6·25 사변의 민족 시련’으로 바뀌었다. 소주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단원 ‘대한 민국의 성립’에 ‘광복군의 항전’이 추가되었다. 또, 소단원 ‘6·25 사변의 민족 시련’에서 ‘6·25의 민족 시련’이 ‘민족 시련의 극복’으로, 소단원 ‘민주주의의 성장’에서 ‘4월 학생 의거’가 ‘4월 의거’로 각각 바뀌었다. 이처럼 1979년판은 1974년보다 목차에서 주체적·능동적·내재론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단원별 혹은 시대구분별 비율 면에서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대단원 가운데 현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근대와 현대는 대단원 5개 중 2개이지만 쪽수의 분량은 40%에 못 미치는 30% 전후에 불과하다. 우선 1974년판을 보면, 총 5단원 중 고대가 24.1%(56쪽)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현대는 5.2%(12쪽)로 매우 비중이 낮다. 근대는 흥선 대원군 시대를 제외하면 23.3%(54쪽)이고, 포함하면 25.4%로 조선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 또 근대를 개화(개항)기와 일제강점기로 나누면, 각각 15.1%(흥선 대원군 시대 포함 17.2%)와 8.2%로, 개화기가 일제강점기의 2배 가까이 된다. 근대와 현대를 합하면, 흥선 대원군 시대를 포함하더라도 30.6%이다.⁸⁾

다음으로 1979년판을 보면, 전체 분량이 232쪽에서 302쪽으로 80쪽이나 늘어나면서 모든 대단원의 분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흥선 대원군 시대가 제외되었음에도 조선이 무려 10.9%(46쪽)나 늘어나 36.4%(110쪽)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단원들의 비율은 거의 상대적으로 낮거나 비슷해졌다. 근대는 흥선 대원군 시대가 포함되었지만 근대의 비율은 21.9%(개화기 13.9%, 일제강점기 8.0%)로 낮아졌다. 그 반면 현대의 비율이 조선 사회를 제외한 대단원 중 유일하게 소폭이나마 높아져 5.3%를 차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7) 김정인, 앞의 글(2014), 79~80쪽. 그러나 ‘오늘의 역사적 사명’이 중단원으로 편제된 것은 1977년판에 이미 이루어졌다. 『국사』, 문교부, 1977, 230쪽.

8) 이원순·진영일·정선영, 앞의 글, 12~13쪽. 단, 이원순의 비중율은 실제와 약간 달라 수정하였다.

는 새로 소단원으로 추가된 ‘오늘의 역사적 사명’ 분량이 2배 이상 증가한 데 기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근대와 현대를 합해도 27.2%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1974년판보다 그 비중이 낮아졌다. 이는 근대사와 현대사에 치중한다는 교육과정의 ‘지도상의 유의점’이 여전히 준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⁹⁾

표 2 『국사』의 대단원별 비율 변화

1974년판			1977/1978년판			1979년판		
차례	쪽수	비율	차례	쪽수	비율	차례	쪽수	비율
I. 고대 사회	56	24.1	I. 고대 사회	56	24.3	I. 고대 사회	62	20.5
II. 고려 사회	46	19.8	II. 고려 사회	44	19.1	II. 고려 사회	48	15.9
III. 조선 사회	59.2 (64)	25.5	III. 조선 사회	59.2 (64)	25.7	III. 조선 사회	110	36.4
III-5-(2)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4.8 (64)	2.1	(2)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4.8 (64)	2.1			
IV. 근대 사회 1. 민주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35 (54)	15.1	IV. 근대 사회 1. 민주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35 (54)	15.2	IV. 근대 사회 1. 민주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1)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정책	42 (5)	13.9
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계승	19 (54)	8.2	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계승	19 (54)	8.3	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수호	24	8.0
V. 현대 사회	12	5.2	V. 현대 사회	12	5.3	V. 현대 사회	16	5.3
	232	100		230	100		302	100

셋째, 대단원과 중단원의 구성 요소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그 이전과 비교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우선 각 단원의 시대적 배경, 핵심 사건이나 인물, 시·공간의 중요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면서 수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도입부는 대단원과 중단원에만 있다. 대단원의 도입부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사진·연표·단원 개관 등 3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대단원 도입부는 그 이전 검정 발행체제 속에서 정착되어 온 대단원 도입부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대단원 도입부가 일반화되면서 요소 역시 다양화되기 시작한 제2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는 사진·도입글(학습 개요, 학습 요점, 단원 개관)·연표·학습 목표(학습 지침)·지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는 사진·학습개요·학습목표·연표·지도 등 5개¹⁰⁾나 사진·학습지침·이 단원의 연표·개관 등 4개¹¹⁾나 되는 것도 있다.¹²⁾

또한 1979년판부터는 대단원에 이어 중단원에서도 ‘개요’와 ‘연구 과제’로 구성된 도입부가 추가된 점은 눈에 띈다. 단,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들 중에는 대부분 중단원의 마지막에 ‘연구 문제’·‘익힘 문제’·‘학습 활동’ 등이 제시되었으며, 대단원 마지막에 ‘연구 과제’가 주어졌던 것도 있었다.¹³⁾ 따라서 1979년판 중단원의 ‘연구 과제’는 전혀 새롭다고 볼 수 없지만, 교과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과제를 그나마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그나마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 체제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는 목

9)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74.12.31), 18쪽.

10) 이현희, 『국사』, 실학사, 1968

11) 한우근, 『국사』, 을유문화사, 1968

12) 송치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단원 도입부의 형태와 특징-해방 이후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 『역사와 실학』 63, 2017, 185~195, 197~198쪽.

13) 이은령, 앞의 논문, 10~11쪽.

표와 “주제 중심적인 각도에서 지도하도록 한다”거나 “지나친 단편적 사실의 전달을 피하되 핵심적인 문제는 실례와 관련시켜 파악시키도록 한다”는 지도상의 유의점에 염두를 둔 듯하다.¹⁴⁾ 이러한 연구 과제의 등장으로 『국사』가 일종의 ‘역사서’에서 탈피해 미약하더라도 ‘교과서’의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단원의 연구 과제는 학습 목표와 같은 성격을 띤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주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단원과 중단원의 도입부 형식은 이후 제6차 교육과정까지 20여 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¹⁵⁾

넷째, 교과서의 본문 중 내용 글 이외에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자료의 종류와 분량도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습보조자료의 종류는 사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사료·지도·도표·연표는 매우 빈약하며, 그나마 전근대에 실렸던 삽화는 전혀 없다. 단, 1974년판에 비해 1979년판에서 사진이 1/3 이상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사료가 2개에서 6개로 상대적으로지만 대폭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3-1 『국사』의 학습보조자료 개체수

단원	사진		사료		지도		도표		연표		각주	
	1974	1979	1974	1979	1974	1979	1974	1979	1974	1979	1974	1979
Ⅲ-5-(2)					1							
Ⅳ.	1	1							1	1		
Ⅳ-1	11	10	2	3	1	2					3	7
Ⅳ-2	16	7		2			2	2			9	2
Ⅴ.	1	1							1	1		
Ⅴ-1	5	2										
Ⅴ-2	2	1		1								
Ⅴ-3		1						1				
합계	36	22	2	6	2	2	2	3	2	2	12	9

먼저 사진을 살펴보면, 1979년판에는 1974년판에 비해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사진으로 대체되었으며, ‘성명회 선언문’과 ‘동양 척식 회사에 빼앗긴 우리나라의 농토’ 2개에만 있었던 설명이 거의 모든 사진에 덧붙여졌다.

대단원에서는 근대의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가 발행한 독립 신문’이 ‘원구단’으로, 현대의 ‘유조선의 진수식’이 ‘농업의 기계화’로 각각 바뀌었다. ‘원구단’에는 칭제건원을 통해 “자주 독립국임을 내외에 선포”했다고, ‘농업의 기계화’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농촌의 근대화와 능률적인 영농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각각 설명이 들어 있다. 이는 아마 근대에서는 국가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현대에서는 경제 발전보다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근대화를 부각하려는 듯하다. 단, ‘원구단’은 정확히 말하면, ‘황궁우’이다.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에 동일한 사진이 실린 것은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 ‘성명회 선언문’, ‘자유를 찾아 험한 피난 길에 오른 북한 동포’ 등 3개뿐이다. 단, ‘성명회 선언문’은 서명자 부분이 삭제되었고, 나머지는 제목이 ‘항일전을 전개한 의병’과 ‘6·25 사변 중 파괴된 대동강 철교’로 바뀌었다. 이중섭의 ‘소’는 제목은 같지만, 모습이 머리 부분에서 전체로 확대되었다. ‘대한 민국 수립 선포식’과 ‘4월 학생 의거 기념탑’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다른 모습으

1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74.12.31), 17~18쪽.

15) 송치중, 앞의 글, 199~200쪽.

로 대체되면서 제목도 ‘정부 수립 경축 행사’와 ‘4월 의거 기념탑’으로 달라졌다. 이들 사진에 “무기와 복장이 통일되지 않았으나, 유생, 군인, 농민, 상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구국 항전을 폈다”와 “부정 부패에 항거한 4월 의거의 기념탑이다”는 설명은 그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본문의 내용과 짝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명칭을 시정하고 그 의의와 평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사진 중에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통신원과 그 직원’은 ‘한말의 남자 교환수’로, ‘서재필’과 ‘독립 협회 회보 표지’는 ‘서재필과 독립 신문’으로<서재필은 노년 이 아니라 젊었을 때 사진으로 대체되면서 독립 신문과 하나로 합쳐졌다.>, ‘군대 해산 직전의 훈련원 정문의 일본 초병’은 ‘강화 진위대 장병’으로, ‘평화 회의와 각국 위원에게 보낸 호소문’과 ‘3밀사’는 ‘고종의 신임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79년판에는 유일하게 인물 사진으로 흥선 대원군이 추가되고, 서재필이 단독 사진에서 독립신문 옆에 작게 들어갔을 뿐, 김구와 이승만 등을 비롯한 인물 사진이 삭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가 인물 중심의 영웅사관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는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1974년판 사진 중에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도 있었다. 근대의 첫 사진인 ‘신식 군대의 훈련 광경’은 적어도 1894~1895년 이후 시위대 혹은 친위대 모습으로,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별기군이 아니다. ‘옥에서 풀려 나온 독립 협회 회원’은 1904년경 이승만이 한성감옥서에서 함께 수감되었던 동지들과 찍은 것이다. ‘평양 입성을 환영하는 북한 동포’는 1977년판부터 ‘국군의 평양 입성을 환영하는 북한 동포’로 바뀌었다. 이들 사진은 1979년판에서 모두 게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은 학습보조자료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분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1974년판에는 소단원 가운데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쇄국’, ‘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 그리고 ‘오늘의 역사적 사명’에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 1979년은 1974년판보다 분량이 더 늘어났음에도, ‘개화·척사운동’, ‘동학 농민 혁명 운동’, ‘독립운동의 방향과 3·1’, ‘대한 민국의 발전’ 등 4개의 소단원에 사진이 들어가지 않았다. 단, ‘대한 민국의 발전’에 해당되는 새마을 운동에 관련된 사진은 대단원 표지에 실렸다. 특히 1974년판과 1979년판에 모두 동학 관련 사진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진은 제목 외에 설명이 보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지 못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거둘 만큼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표 3-2 『국사』의 학습보조자료 중 사진·사료

단원	사진		사료	
	1974년판	1979년판	1974년판	1979년판
Ⅲ-5-(2)				
Ⅳ. 근대 사회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	원구단		
Ⅳ-1	(1)신식 군대의 훈련 광경, (3)서재필, 독립 협회 회보 표지, 옥에서 풀려 나온 독립 협회 회원, (4)통신원과 그 직원, 처음으로 운행된 서울의 전차, (5) 평화 회의와 각국 위원에게 보낸 호소문, 이상설 이준 이위종 3밀사, 군대 해산 직전의 훈련원 정문의 일본 초병,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 안중근의 글씨	(1)흥선대원군, 척화비, (4)한말의 남자 교환수, 덕수궁 석조전, (5)서재필과 독립 신문, (6)강화 진위대 장병, (7)고종의 신임장, 황성 신문, 대한 문전, 항일전을 전개한 의병	(2)동학 농민군의 12개 항목의 폐정 개혁안, (3) 독립 협회의 건의 6조	(2)개화당의 14개조 개혁요강, (5)독립 협회의 헌의 6조, (7) 교육 입국 조서(일부)
Ⅳ-2	(1)성명회 선언문, 동양 척식 회사에 빼앗긴 우리나라의 농토, (2)이상설, 이시영, 신규식, 안창호, 파고다 공원, (3)임시 현장, 물산 장려 운동의 가두행렬, 광주 학생 운동의 발발을 전한 기사, 신채호, 박은식, 한용운, 소, 김구, 광복군의 기념 사진	(1)성명회 선언문(서명자 삭제), (3)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임시 의정원, 청산리 대첩 때 사용된 독립군의 무기, (4)한국 통사, 창조(좌)와 백조(우)의 표지, 소		(3)대한민국 임시 현장 선포문, 물산 장려회 결기문

V. 현대 사회	유조선의 진수식	농업의 기계화		
V-1	(1)해방의 기쁨, 대한 민국 수립 선포식, 이승만, (2)평양 입성을 환영하는 북한 동포, 자유를 찾아 험한 피난 길에 오른 북한 동포	(1)정부 수립 경축 행사 (2)6·25 사변 중 파괴된 대동강 철교		
V-2	(1)4월 학생 의거 기념탑, (2)수출 상품을 싣고 있는 모습	(1) 4월 의거 기념탑		(1)혁명 공약
V-3		국민 교육 현장 선포식		

비고 : ()는 소단원

다음으로 사료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1974년판에는 사료가 ‘동학 농민군의 12개 항목의 폐정 개혁안’과 ‘독립 협회의 건의 6조’ 등 2개만 실린 데 비해, 1979년판에는 ‘개화당의 14개조 개혁 요강’, ‘독립 협회의 헌의 6조’, ‘교육 입국 조서(일부)’, ‘대한 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 ‘물산 장려회 결기문’, ‘혁명 공약’ 등 6개로 늘어났다. 이들 중 1974년과 1979년판에서 유일하게 모두 실린 ‘독립 협회의 헌의 6조’는 ‘건의’를 ‘헌의’로 시정했고, ‘대한 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과 ‘물산 장려회 결기문’은 ‘임시 헌장’과 ‘물산 장려 운동의 가두 행렬’ 등 유사한 사진을 대체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료는 ‘혁명 공약’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 6항의 원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이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왜곡·게재되었다.¹⁶⁾ 이는 박정희 정권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또 학습보조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높은 지도와 통계 역시 절대적으로 양이 적다. 먼저 1974년판에는 ‘양요도’와 ‘간도 개척과 민족의 해외 이주도’, 1979년판에는 ‘동학 농민군의 봉기’와 ‘간도 개척과 한민족의 해외 이주도’ 등 각각 2개뿐이다. ‘간도 개척과 (한)민족의 해외 이주도’는 양쪽에 실렸다. 도표(통계표)는 1974년판에 ‘농촌의 실정’과 ‘산미 증산 계획 시행 당시의 미곡 생산고와 대일 수출량’ 등 2개였는데, 1979년판에는 ‘수출의 증가’가 추가되어 3개로 늘어났다. 단, ‘농촌의 실정’은 설명이 빠지면서 ‘소유주별 농가 호수(1916)’로, ‘산미 증산 계획 시행 당시의 미곡 생산고와 대일 수출량’은 ‘미곡 생산량과 대일 수출량’으로 각각 제목이 달라졌다.

연표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대단원 앞부분에 각각 1개씩, 총 2개씩 실렸다. 근대의 경우, ‘동학 혁명’이 ‘동학 혁명 운동’으로 바뀌고, ‘독립 협회 활동’과 ‘6·10 만세 운동’이 추가되었다. 현대는 ‘4·19 학생 의거’가 ‘4·19 의거’로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1974년판의 경우, 근대와 현대의 연표는 모두 그 아래의 ‘단원 개관’과 비교해보면, 역사적 사건의 명칭이 달리 표기되어 있다. 근대에서는 ‘동학 혁명’이 ‘동학 운동’으로, 또 본문에는 ‘동학 혁명 운동’으로 각각 적혔다. 현대에서는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 민국 수립’으로, ‘4·19 의거’가 ‘4월 의거’로 다르게 쓰여 있다. 이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 역사적 사건의 평가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과서의 날개단에 설명을 적는 형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각주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현대에는 없고, 근대에만 들어 있다. 각주의 개수는 1974년판에서 중

16) 『국사』, 1979, 274쪽.

단원 1의 3개와 중단원 2의 9개 총 12개였다가 1979년판에서 중단원 1의 7개와 중단원 2의 2개 총 9개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중단원 1에서는 1974년판의 본문 내용이 1979년판의 각주로 들어간 것이 1개, 중단원 2에서는 1979년판의 각주 내용이 본문으로 들어간 것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두 중단원의 각주의 개수가 크게 증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상과 같이 학습보조자료는 사진이 대폭 줄어들고 사료가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인가는 파악하기 어렵고, 학습보조자료가 본문과 짝을 이루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예컨대, 동학 농민 혁명에는 1974년판과 1979년판에 사료와 지도가 각각 1개밖에 실려 있지 않고, 3·1 운동에도 1974년판과 1979년판에 사진 1개과 각주 1개만 각각 들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학습보조자료 배치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는 지도상의 유의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¹⁷⁾

Ⅲ. 『국사』의 근대사 서술내용 변화와 그 의미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내 ‘기본 방침’에서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민족 중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거족적으로 유신 과업을 추진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민족적 대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고하고 능률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뭉치고 우리에게 알맞은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주체적이며 강력한 국력을 배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방침으로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 등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제3차 교육과정은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면서 그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국민적 자질의 함양’은 “민족사의 정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인 자각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정신을 기른다”는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즐거우게 이어 온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유용한 외래 문화를 섭취, 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한다”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민주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되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은 국민의 총화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등이었다.¹⁸⁾

이러한 기본 방침은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가 발전’에는 “민족 중흥을 위한 사명감을 투철하게 한다”, “주체 의식을 뚜렷이 하고, 민족적 긍지를 지니게 한다”,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확립하게 한다”, “국민적 연대 의식을 공고히 하고, 협동 정신을 발휘하도록

17)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74.12.31), 18쪽.

18) 위의 책, 2쪽.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봉사하게 한다”,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 계승,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한다” 등이 들어 있다. 또 ‘민주적 가치의 강조’에는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정신을 기른다”, “우리 고유의 가정 생활 및 향토 생활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이를 새 시대에 알맞게 발전시키도록 한다”, “합리적인 집단 사고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민주 사회에서의 지도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회 성원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다하여, 단결된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를 우리 풍토에 알맞도록 인식하고 실천하게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반공 민주 신념에 투철하게 한다” 등이 포함되었다.¹⁹⁾

위의 기본 방침에서 제시된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등 국가주의 교육론은 윤리와 함께 사회과에서 독립된 국사의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국사의 목표 5개 가운데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전통 문화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여서,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자세와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 등 3개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과 연관된 것이었다.²⁰⁾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에는 기본 방침부터 국사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전통에 바탕을 둔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 민족 중흥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자는 국가주의 교육론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위기 시 조상들은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지켰다는 국난 극복의 정신이 특히 강조되기도 하였다.²¹⁾

국사의 목표에 의거해 근대 사회는 “급변하는 외세와의 접촉 속에서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적 혼란을 겪어 가며 근대화를 서둘렀던 사정과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국권을 상실하게 된 과정을 세계사적 배경과 견주어 가며 파악하게 하고 민족사적 교훈을 성찰하게 한다”로, 현대 사회는 “민족사의 정통을 계승한 대한 민국의 성격과 그 사명을 인식하게 하고, 민족 중흥을 위한 줄기찬 노력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지게 한다”로 그 내용이 규정되었다.²²⁾ 이러한 국사의 목표와 내용이 고등학교 『국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근대 사회의 몇 개 주제에 한정하고자 한다.

1. 흥선 대원군의 대내외 정책

근대 사회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민족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과 ‘민족의 독립운동과 전통 문화의 계승’ 등 2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지만, 1974년판에는 흥선 대원군 시대가 조선 사회에 포함되었다. 1974년판 조선 사회의 단원 개관에서는 “(18)60년대에 이르러 대원군이 등장하면서 부국 강병을 위한 개혁이 시도되어 열강의 침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세도가의 책동과 보수 양반의 반발로 그는 집권 10년 만에 물러났다”고 서술되어 있다.²³⁾ 흥선 대원군은 부국 강병의 개혁정책을 시도해 열강의 침투를 일시 저지했지

19) 위의 책, 4쪽.

20) 위의 책, 17쪽.

21) 김한중, 앞의 책(2013), 231~233쪽.

22)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74.12.31), 18쪽.

23) 『국사』, 1974, 104쪽.

만, 세도가와 보수 양반의 반대로 실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평가는 본문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그는 “서민과 다름없는 몰락 왕족”으로 세도 정치로 ‘불우한 처지’였지만 ‘중농적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으로는 유교적 민본 정치의 부흥과 부국 강병의 실현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열강의 도전과 침략을 단호히 배격하는 쇄국 양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우선 안동 김씨 일파의 축출과 당파 등을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 서원의 대폭적인 정리, 토지 조사 사업·호포제·사창제 실시, 관제 개혁, 그리고 경복궁 중건 등 그의 내정 개혁은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으나, 전일에 비해서는 민생이 향상되고 국력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었다”고 평가되었다.²⁴⁾

아울러 흥선 대원군은 천주교도의 증가와 서양 상품의 범람으로 서양에 대한 불신감과 위기 의식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호한 쇄국 정책’을 펼쳤다. 그의 항전 결심과 한성근·양헌수 부대의 분전으로 “서양 군대와와의 첫 번째 충돌”인 병인양요는 “조선측의 승리로 끝났”으며, 신미양요에서도 “어재연과 강화 수비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군이] 물러가고 말았다.” 이러한 두 차례의 ‘방어전에 성공한’ 그가 척화비를 세우고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한층 더 강화한 쇄국 정책은 당시 열강의 약탈적 행위가 서양 문화를 오랑개의 문화로 간주하고 조선의 유교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강한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굳혀 주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서술되었다.²⁵⁾

그 결과 흥선 대원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완강한 전단 정치와 내정 개혁도 많은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것도 있었다. 그는 서양의 기술 문화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를 수용하여 자주적 근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심지어 앞에서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사실과도 어긋났던 서양의 기술 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과 수용을 내세워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는 그를 통해 대내외적 위기를 주체적·자주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역사상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가 고종의 왕비인 민씨 일족의 책동과 유생들의 국왕 친정 요구로 물러나면서 대신 시작된 민씨 일족의 세도 정치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흥선 대원군에 대한 긍정적 논조는 1979년판에서 바뀌었다. 무엇보다 흥선 대원군 시대의 위치가 조선의 마지막에서 근대의 처음으로 옮겨졌음에도, 대단원의 단원 개관이나 새로 추가된 중단원의 개요에 그의 이름이나 대내외 정책이 전혀 서술되지 않았다. 단원 개관에는 “실학의 발전이 근대 문화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선 사회는 개항을 맞았다”로, 개요에는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전통 사회를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안으로는 삼정(三政)의 문란과 민란의 만연 속에서 동학(東學)이 일어났고, 또한 밖으로는 서세 동점의 열강이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 왔다”고만 기술되었을 뿐이다. 또한 연표를 보면, ‘(1864) 대원군 집정’이 1974년판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회에 들어 있는 반면 근대 사회에는 빠짐으로써 기본적인 형식 요건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다.²⁶⁾

본문에서도 흥선 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 ‘유교적 민본 정치’·‘쇄국 양이 정책’이 ‘유교적 위본 정치’·‘쇄국 정책’로 바뀌는 등 문구나 문장의 수정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나열되었다. 하지만 그에 관한 긍정적·우호적 평가는 모두 삭제되어 버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나마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실린 종합적인 평가마저 “대원군의 완강한 독단 정치와 내정 개혁은 많은 반발을 일으켜 민비와 유림 세력이 마침내 대원군을 몰아내니, 외교 정책의 변화

24) 『국사』, 1974, 163~164쪽.

25) 『국사』, 1974, 164~166쪽.

26) 『국사』, 1974, 104쪽 ; 1979, 222~223쪽.

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로 부정적인 것 일색으로 완전히 바뀌었다.²⁷⁾ 그 이유는 그의 내정 개혁을 ‘왕권 강화 정책’으로 새로 규정한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며,²⁸⁾ 또 쇄국 정책이 ‘조국의 근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걸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듯도 하다.

2. 갑신정변

개화운동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은 의외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1974년판 단원 개관에는 개항 후 “대원군의 민비의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당시의 지배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청과 일본에 농락당하여, 마침내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나라의 자주성만 상하게 되었다”고 서술되었다.²⁹⁾ 이를 역면 그대로 해석하면, 갑신정변은 지배자에 속한 개화파가 일본에 농락당해 국가의 자주성만 손상시킨 사건으로 규정된다.

본문을 보면, “1884년 우정국 설치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갑신정변은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사대 경향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개화당에 의해 주도”되었고, 개화당은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여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급진적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정변을 일으켜 문벌 타파·사민 평등 등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려 했다고 서술되었다. 그러나 “위안 스카이의 간섭으로 정변은 실패”해 “청의 입장만 보다 강화”되고 말았다. 요컨대, “개화당의 표방은 근대적이었으나, 구태의연한 정변 방식으로도 정권의 장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비근대적인 정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실패 원인으로 “그들의 정치적 식견의 부족”으로 청·일 침략 세력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세력이 성립할 수 있는 근대적인 기반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을 꼽았다.³⁰⁾ 갑신정변의 동기와 의도를 호의적으로 보면서도 청의 간섭 외에 ‘구태의연한 정변 방식’과 정치적 식견 부족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변 방식’을 ‘비근대적인 정치 체질’로 규정한 점이다. 정변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비근대적인 정치’가 될 수 없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제군주제 하에서 일어난 갑신정변보다 민주주의 하에서 일으킨 박정희의 쿠데타는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비근대적인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국사』 집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 그렇다면 갑신정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확실하게 지적한 ‘용감한’ 서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 그렇지 않다면, 5·16은 갑신정변과 같은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혁명’임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비굴한’ 비역사적 왜곡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9년판에서도 갑신정변에 대한 서술과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원 개관에서는 조선 사회가 개항 이후 “제국주의 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19세기를 넘기면서 민족적 각성”이 이뤄진 것으로, 개요에서도 개항 후 “오랜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갔”지만, “개화 사상과 위정 척사론, 그리고 동학 등이 서로 얽히면서 진통을 겪은 정계는 혼미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각각 서술되었다.³¹⁾

27) 『국사』, 1979, 228~229쪽.

28) 『국사』, 1979, 223쪽.

29) 『국사』, 1974, 162쪽.

30) 『국사』, 1974, 173~174쪽.

31) 『국사』, 1979, 222~223쪽.

본문에서는 갑신정변은 우정국 설치 축하연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계기’로 일어났다고 봄으로써 역사적 사실에서 좀 더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개화당이 “급진적으로 근대적인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근대적인 국민 국가에로의 개혁을 시도”했다거나 문벌 타파·사민 평등 등의 ‘근대적 개혁’이 아니라 “근대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대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다고 개혁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부분도 있다. 이는 ‘개화당의 14개조 개혁 요강’을 사료로 제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실패 원인으로 위안 스카이의 간섭 외에 “후원을 약속하였던 일본의 배신”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개화당의 표방은 근대적이었으나, 구태의연한 정변 방식”이라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³²⁾

3. 독립 협회

독립 협회에 대한 평가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사뭇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 1974년판 단원 개관에는 ‘동학 운동’과 ‘갑오 경장’은 등장하지만, 일본이 “청일 전쟁 다음에는 다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고 서술되었을 뿐 독립 협회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을미사변과 아관 파천 이후 우리 나라가 외국의 잇권 쟁탈의 싸움터가 되고 정치가 일본이나 러시아 세력에 의해 좌우되었음에도 “정쟁에 여념이 없는 부패한 정계는 민족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기 일신과 자기 파의 당면 이익을 추구하는 외세 의존적인 이기주의가 팽만”한 상황 속에서 “정계 일부와 국민 사이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부국 강병을 기약하는 자주 독립, 민권 신장, 개화 혁신 운동을 일으키어 민족적 각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립 협회의 활동이었다”고 서술되었다.³³⁾ 즉, 독립 협회는 중단원의 제목인 ‘민족적 각성’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운동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독립 협회가 서재필 등 “서구의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지닌 인사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독립문과 독립 공원의 건립과 독립 신문의 간행으로 “민족의 자주 의식을 높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당시의 민족적 과업과 사회적 요청에 일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중 속에 뿌리박고, 자주 호국 선언을 하여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펴 나갔다. 종래의 외세 의존적인 개화와 독립의 방책을 비판하고, 민족의 각성과 국민의 총화에 의한 자주 자강과 개혁 혁신을 추진하였다”로 이어진다. 또 관민 공동회가 헌의 6조를 결의한 사실을 잘못 기술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대회가 되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외세 의존적인 정치, 군사, 경제 정책을 규탄하고,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국가의 자주 노선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입헌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근대 의회 민주주의 사상을 제창하였다”는 우호적 서술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독립 협회는 보수적 집권층과 일제의 견제에 의해 탄압되고 해산당하고 말았지만, “독립 협회의 활동을 통하여 계몽된 자주·민권·자강 사상은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민 의식을 형성하게 하여, 그 후 일제 침략기에 있어서 민족 운동을 펼쳐 가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³⁴⁾

1979년판에서도 독립 협회에 대한 호의적 평가는 지속되었다. 이는 단원 개관에서 “19세기를 넘기면서 민족적 각성은 개화, 자강과 자주, 혁신의 근대 의식을 고조시키고 민족주의를 정립시켜 20세기 초의 항일 운동의 사상적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 독립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서술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독립 협회의 활동은 ‘민족적 각

32) 『국사』, 1979, 231~233쪽.

33) 『국사』, 1974, 183쪽.

34) 『국사』, 1974, 183~184쪽

성'의 출발점으로 20세기 초 의병의 항전과 애국 계몽 운동 등 항일 운동의 사상적 원천이 되고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 운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개요에서는 독립 협회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물밀 듯이 닥쳐오는 일본 등의 침략 세력에 대항하는 “민족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이해가 성장”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본문에서도 ‘개화 혁신 운동’·‘건의 6조’ 등이 ‘개화 자강 운동’·‘헌의 6조’ 등으로 바뀌거나 :종래의 외세 의존적인 개화와 독립의 방책을 비판하고, 민족의 각성과 국민의 총화에 의한 자주 자강과 개혁 혁신을 추진하였다”는 문장이 삭제되거나 “그 후 일제 침략기에 있어서 민족 운동을 펼쳐 갈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고 문구가 가다듬어졌을 뿐 그 내용은 1974년판과 거의 동일하다.³⁵⁾ 이처럼 독립 협회를 ‘민족적 각성’의 출발점으로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아마도 국내외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자주 의식을 고양하고 자주 호국 활동을 펼쳐 당시의 민족적 과업을 수행한 독립 협회를 통해 5·16 혹은 유신 정권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각하려는 데 있는 듯하다.

4. 의병의 항전

의병의 항전, 특히 1907년 이후 후기 의병에 대한 평가는 1974년판과 1979년판 모두 국정교과서의 성격을 가장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1974년판 단원 개관에는 의병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첫머리에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이래 1910년 망국을 거쳐 국외 항일 독립군의 기반이 닦이는 1914년까지 8년 동안에 걸쳐 “피의 항쟁을 계속”했으며, 이는 “나라의 위기에 당면하여 최후의 구국 전선을 편 우리 민족의 자주성의 표현이었다”고 높이 평가되었다.³⁶⁾

이어 군대 해산 당일 대대장 박승환의 자결 항거를 도화선으로 시위 대대가 일본군과 시가전을 전개한 끝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지만, “해산된 군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들이 의병 부대와 합류해 일본군과 항전을 벌여 “전국 어디에서나 의병의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서술되었다. 일본의 통계에 근거해 1907~1910년간 전국 의병의 전투 횟수와 참전 인원을 제시했으며, 일본군에 의한 ‘의병 진압 작전’(‘초토화 작전’)의 잔인성도 밝혀 두었다. 또 각지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가 전국적인 연합전선을 기도해 13도 창의군 편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에도, 그 후 산간벽지를 근거로 하는 게릴라전의 양상을 띠면서 항쟁하다가 1910년을 계기로 점차 쇠퇴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로 대일항쟁의 무대를 옮겨 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³⁷⁾

1979년판에서는 단원 개관과 개요에 의병이 역시 거론되지 않았으나, 연구 과제로 “의병의 항전이 민족 주체 의식 형성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가 제시되었다.³⁸⁾ 다른 연구 과제가 사상이나 운동의 의의와 성격을 묻은 것과 달리 의병의 항전이 민족 주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확실하게 전제한 점이 눈에 띈다.

본문의 내용은 1974년판과 달리 서술되었다. 그 첫부분에서는 “개항 이후 무력을 앞세운 일본 침략에 대한 민족 저항으로 가장 중요한 줄기를 이룬 것은 의병의 항전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그 발단은 을미의병이고 본격적 항일 항전은 러·일 전쟁과 을사 5조약의 체결을 전후

35) 『국사』, 1979, 233~246쪽.

36) 『국사』, 1974, 197쪽.

37) 『국사』, 1974, 197~199쪽.

38) 『국사』, 1979, 223쪽.

해 전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중기 의병에 이어 후기 의병에 관해서는 “전국을 항일 전투장으로 확대시켜 의병 전쟁으로 발전시켜 의병 전쟁으로 발전시켰다”고 ‘의병 전쟁’이란 용어를 처음 제시하면서 “그들은 우월한 최신 무기와 근대 훈련을 받은 일본군과 대적하여 처절한 항쟁을 계속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의 내용은 1974년과 비슷한데, 의병의 전투 횟수와 참전 인원 에 대한 부분이 빠진 반면, 해산 군인의 합류로 의병 부대에 “유생과 군인, 농민, 어민, 포수, 광부, 상인 등 국민 각 층이 포함”되었으며 성능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전투적인 편제를 정비했으며 작전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에 “이 같은 의병과 의사들의 구국 항쟁은, 위기에 당면한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민족의 자주성과,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민족의 저력이 발휘된 것이다”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³⁹⁾ 이는 『국사』의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흐르는 특징 중 하나인 국난 극복의 정신, 즉 외세의 침략이라는 국가의 위기를 맞이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⁴⁰⁾

1979년판 ‘머리말’에는 “강대한 이웃 나라가 우리 민족의 통합을 방해하거나 침략하기 위하여 도전했을 때에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강인한 저항 정신으로 슬기롭고도 용감하게 응전하여 대결함으로써 이를 격퇴하여, 끝끝내 내 나라의 강토와 자주 국권을 수호하였다”면서 “오늘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긴 역사는, 동방 문화 민족의 피땀어린 발자취이자, 창조와 저항의 눈부신 기록이요, 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강포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면서 건설해 온 불후의 유산이기도 하다”고 밝혀놓았다.⁴¹⁾ 이러한 면에서 의병의 항전은 그 참된 성과와 의의에 무관하게 박정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적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한국 근·현대사는 역사적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해석과 평가가 서로 상이한 탓에 역사 연구자뿐 아니라 여러 계층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 벌어졌다.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은 현실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편향되거나 왜곡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국사』 교과서였다. 이에 본고는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국사』의 근·현대사 서술체재와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과연 교과서로서 적합한 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국사』는 서술체재면에서 시대별·영역별·주요사항별 비중, 단원 구성, 그리고 학습보조자료 등이 그 이전의 교과서보다 짜임새가 없거나 매우 빈약하였다. 특히 학습보조자료는 배치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본문과 짝하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배양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사』 국정교과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된다.

『국사』는 서술내용면에서도 정권의 정당성·정통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선전하려는 국정교

39) 『국사』, 1974, 260~262쪽.

40) 김한중, 앞의 책(2013), 238쪽.

41) 『국사』, 1979, 머리말, 2쪽.

과서의 색채가 짙은 것이 많았다. 교과서는 수업의 기본 교재인 만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 및 그 의의를 소개·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집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사』는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했을 뿐 아니라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해석과 의미 부여로 오히려 역사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